



강원학 연구보고 14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

-사업체 이전행태를 중심으로-



홍성효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강원학의 기초토대 연구 주제로 적합한 5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한편인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사업체 이전형태를 중심으로-」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강원도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지역 간 사업체의 이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 집적도에 영향을 미치며, 집적의 정도에 따라 집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적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집적의 경제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들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고찰하였으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1994~2019년)와 이들 가운데 일부(2000~2019년)에 한해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사업체의 이전형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산업 혹은 지역경제 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 방향 제시하고, 기업유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목차

요약문

I. 강원도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한 개관	1
1.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개관	2
2. 인구의 변화	9
3. 시대별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강원도 산업정책 개관	13
II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7
1. 집적의 경제	17
2.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입지이론	20
3. 본사기능에 따른 입지이론	22
4. 분공장 가설	24
5.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군집	26
6. 수출활동에 있어서의 집적의 경제	28
III. 실증분석	31
1. 사업체 이전행태분석	31

1.1. 연도별 유입과 유출	31
1.2. 지역 간 이전	33
1.3. 시기별 이전의 특성	39
1.4. 이전하는 사업체의 유형	41
2. 집적도의 변화	45
1.1. 비유사성 지수	45
1.2. 지리적 집중 : 허핀달-허쉬만 지수	46
1.3. 지리적 집중 : 입지계수	48
3.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혹은 특성	50
4. 수도권과의 팽창과 수도권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 변화 :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	55
5. 강원도 내 시·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	68
1.1. 기업분포의 변화	68
1.2. 창업	88
1.3. 기업의 이전	106
6. 원주시의 혁신도시와 의료기기산업	114
1.1. 혁신도시	114
1.2. 의료기기산업	115
7. 서비스 산업	116
8. 인구이동	122
1.1. 대졸자이동경로	122
1.2. 인구이동과 특성	138
9. 산업클러스터	150
10. 직주분리	161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65
1. 연구결과 요약	165
2.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171
1.1. 정책적 함의	171
1.2. 향후 과제	172
 참고문헌	 173
 ABSTRACT	 179

표 목차

<표 I-1> 강원도 산업구조 변화	3
<표 I-2>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시·군별 비중	4
<표 I-3> 강원도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	6
<표 I-4> 시점별 강원도 내 사업체 특성의 변화	8
<표 I-5> 연도별 강원도로의 순유입자 수	11
<표 I-6> 연도별 강원도 내 개별 시·군의 순유입자 수	12
<표 I-7> 지역산업 진흥사업 개관	14
<표 III-1a> 2000~2019년 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34
<표 III-1b> 2000~2019년 기간 강원도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35
<표 III-2>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전후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	37
<표 III-3a>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 2008년 전후 차이	38
<표 III-3b>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 2008년 전후 차이	39
<표 III-4a>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2010년 전후 차이	40
<표 III-4b>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2010년 전후 차이	41

〈표 III-5a〉 강원도 이외 지역에 본사/본점이 있고 강원도 내 공장/지점이 있는 본사/본점의 분포 : 전산업	42
〈표 III-5b〉 강원도 이외 지역에 본사가 있고 강원도 내 공장이 있는 본사의 분포 : 제조업	43
〈표 III-6a〉 강원도 내 본사/본점이 있고 강원도 이외 지역에 공장/지점이 있는 공장/지점의 분포 : 전산업	43
〈표 III-6b〉 강원도 내 본사가 있고 강원도 이외 지역에 공장이 있는 공장의 분포 : 제조업	44
〈표 III-7〉 제조업의 지리적 편중 : 비유사성 지수	46
〈표 III-8〉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절대적 집중) : 허핀달-허쉬만 지수	47
〈표 III-9〉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상대적 집중) : 입지계수	49
〈표 III-10〉 강원도 경계를 접하는 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의 지역 간 차이(2019년에 창업한 사업체)	51
〈표 III-11a〉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신생 제조업체수에 대한 토빗(tobit)모형 추정결과 : 지역 간 차이	60
〈표 III-11b〉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신생 사업체 수에 대한 토빗(tobit)모형 추정결과 : 춘천시와 홍천군 내 산업 간 차이	63
〈표 III-12〉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개별 사업체의 고용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65
〈표 III-13a〉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춘천시	69
〈표 III-13b〉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원주시	70
〈표 III-13c〉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강릉시	71
〈표 III-13d〉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동해시	72
〈표 III-13e〉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태백시	73
〈표 III-13f〉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속초시	74
〈표 III-13g〉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삼척시	75

<표 III-13h>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홍천군	76
<표 III-13i>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횡성군	77
<표 III-13j>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영월군	78
<표 III-13k>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평창군	79
<표 III-13l>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정선군	80
<표 III-13m>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철원군	81
<표 III-13n>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화천군	82
<표 III-13o>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양구군	83
<표 III-13p>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인제군	84
<표 III-13q>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고성군	85
<표 III-13r>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양양군	86
<표 III-14a>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춘천시	88
<표 III-14b>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원주시	89
<표 III-14c>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강릉시	90
<표 III-14d>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동해시	91
<표 III-14e>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태백시	92
<표 III-14f>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속초시	93
<표 III-14g>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삼척시	94
<표 III-14h>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홍천군	95
<표 III-14i>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횡성군	96
<표 III-14j>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영월군	97
<표 III-14k>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평창군	98
<표 III-14l>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정선군	99
<표 III-14m>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철원군	100
<표 III-14n>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화천군	101
<표 III-14o>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양구군	102

〈표 III-14p〉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인제군	103
〈표 III-14q〉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고성군	104
〈표 III-14r〉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양양군	105
〈표 III-15a〉 2001-2019년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도내 시·군별 분포	106
〈표 III-15b〉 2000-2018년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도내 시·군별 분포	110
〈표 III-16a〉 2000-2018년 강원도 내 시·군 간 이전한 사업체의 분포 : 유출지 기준	111
〈표 III-16b〉 2000-2018년 강원도 내 시·군 간 이전한 사업체의 분포 : 유입지 기준	113
〈표 III-17〉 의료용 기기 제조업의 집적	115
〈표 III-18a〉 대학진학에 따른 지역 간 이동	123
〈표 III-18b〉 지역 내 대학진학의 비중	124
〈표 III-19a〉 임금과 직장 만족도의 출신대학 소재지와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차이	128
〈표 III-19b〉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지역노동시장 간 차이	132
〈표 III-19c〉 강원도 소재 사업체 근무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출신대학 소재지 간 차이	135
〈표 III-20〉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인 경우의 5년전 거주지별 특성	139
〈표 III-21a〉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0
〈표 III-21b〉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2

〈표 III-21c〉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충청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4
〈표 III-21d〉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영남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5
〈표 III-21e〉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호남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7
〈표 III-22a〉 2010년 기준 강원도 거주자 가운데 2015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148
〈표 III-22b〉 2010년 기준 강원도 거주자 가운데 2015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2015년 거주지(권역)별 특성	149
〈표 III-23a〉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국가산업단지	152
〈표 III-23b〉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일반산업단지	152
〈표 III-23c〉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도시첨단 산업단지	157
〈표 III-23d〉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농공단지	159
〈표 III-24a〉 근무지가 강원도이고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인 근로자의 거주지별 비중과 특성	162
〈표 III-24b〉 근무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이고 거주지가 강원도인 근로자의 근무지별 비중과 특성	163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산업별 강원도 소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7

<그림 I-2>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 16

<그림 III-1> 연도별 유입과 유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32

<그림 III-2> 지역 간 유입과 유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33

<그림 III-3a> 강원도 경계 인접지역들에서의 2019년 모든 신생 사업체 수 52

<그림 III-3b> 강원도 경계 인접지역들에서의 2019년 신생 제조업체수 54

<그림 III-4> 이중차분 분석틀 개념도 56

<그림 III-5>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57

<그림 III-6>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수의 2009년 전후 지역 간 차이 58

<그림 III-7>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의
2009년 전후 산업 간 차이 62

<그림 III-8> 원주시 반곡관설동의 연도별 인구수 114

<그림 III-9a>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1994년 116

<그림 III-9b>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00년 117

<그림 III-9c>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05년 117

<그림 III-9d>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0년 118

<그림 III-9e>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5년 119

<그림 III-9f>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9년 119

<그림 Ⅲ-10> 강원도 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분류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 : 2019년	121
<그림 Ⅲ-11> 강원도 이외 지역 고등학교와 강원도 내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의 직장 소재지별 비중(%)	126
<그림 Ⅲ-12> 강원도 내 산업단지 지리적 분포	151

요 약 문

본 연구는 사업체의 이전행태를 중심으로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에 분석을 주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들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고찰하며 이의 강원도 지역산업 및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들의 강원도에 대한 함의가 현실에서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1994~2019년 원자료와 이들 가운데 일부(2000~2019년)에 한해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분석한다.

실증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업체 이전과 관련하여, 2000~2019년 기간에 강원도로 유입한 사업체는 646개로 강원도로부터 유출한 사업체(414개)에 비해 많으며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이전을 통한 강원도 내 고용의 증가 규모는 2016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업체의 이전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원도로 유입하거나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경우 모두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과의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충북, 충남, 경북 등의 비중도 작지 않다.

이전에 있어 강원도 이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경우 간 이전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도로 유입하는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 비해 평균 고용, 업력,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 제조업 비중에서 현저하게 큰 반면에 여성 대표자 비중, 회사법인 비중, 단독 사업체 비중은 오히려 작다.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본사 및 본점의 비중,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전하는 사업체의 특성은 이전의 방향(즉, 유입과 유출)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08년을 전후로 변화를 보이며, 도지사 재임기간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구분한 경우에도 사업체의 이전행태에서 변화를 보인다. 아쉽게도,

2008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러한 분석결과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정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업체 이전을 통한 강원도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분공장 여부를 2011~2019년의 기간에 연도별 그리고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내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가 소재하고 본사 혹은 본점은 강원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분공장 가운데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 비중에서 수도권은 연도별로 87.2%~91.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사업체의 이전이 많으나 이들에 의한 강원도 내 지역경제 기여는 제한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의 이러한 비중은 79.3%~85.8%로 여전히 높다.

지역 간 사업체의 이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 집적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집적의 정도에 따라 집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적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집적의 경제의 유형-즉,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혹은 동태적 관점에서 MAR효과와 Jacobs효과-이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편중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201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아 제조업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2019년 역시 0.269로 도내 읍면동 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절대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0098의 값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상위 8위에 하나 이후에 타 지역의 경우 지수의 값이 크게 상승하나 강원도의 경우 2019년에 0.0103으로 상승폭이 작아 절대적 기준에서도 최근에는 제조업의 분포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기준에서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는 1994년에 0.604로 제주 다음으로 낮으며, 이후로도 2015년(0.528)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0.574로 상승한다. 제조업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내 비중에서 너무

과소한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 내 제조업이 단순 가공이나 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경제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쉽게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업체 이전을 통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원도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이 시점에 따라 다르고 해당 사업체의 원래 소재지-즉,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입지에서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lmes(1998)에서와 같이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입지조건이 유사하도록 강원도와 경기, 충북, 경북이 접하는 시·군들만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를 비교한다. 강원도는 경북에 비해 입지로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회사법인, 본사 혹은 본점, 제조업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회사법인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며, 제조업에 한정하는 경우 모든 인근 지역-즉, 경기, 충북, 경북-에 비해 강원도가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에 따른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의 변화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 구간은 2009년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강원도-특히, 춘천시와 홍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들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신생 제조업체수 혹은 기존 제조업체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읍면동별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팽창 및 접근성 개선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사업서비스업의 발전과 같은 기업지원서비스의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강원도 내 제조업체가 단순 가공이나 조립이 아닌 첨단-산업의 집적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내 시·군별로 시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특성을 분석한다. 18개 시·군별 사업체의 속성별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의 시계열적 변화에서도 일부 상이함이 나타난다. 시지역과 군지역 간 상이하고 경기, 충북, 경북과의 인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행태에서 유입과 유출 역시 시·군 간 차이를 나타낸다.

I

강원도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고유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지 않아 전국적으로 여건이 유사하고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이나 기업의 이전(relocation)이 활발하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정책은 차별화되지 못하며 국가 혹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때로는 소모적이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는 어떠한 모습을 띠었으며, 어떻게 변해왔는가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산업과 경제측면에서 강원도의 지역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양적·질적 성장 혹은 쇠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과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에 대한 원격접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 이들의 지역 간 이전행태-이를 테면, 이전의 유형, 규모, 특성-와 더불어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지역고용, 산업집적, 지리적 분포 등)을 2000년부터 최근 연도까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개관

강원도의 총생산액(불변가격 기준)은 2019년에 46조원 규모로 2000년의 16조원에
서 연평균 5.56%의 증가율로 성장하였다. 총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업별 비중에 의해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비중은 2000년 17.6%에서
2010년 21.0%, 2019년 22.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줄곧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이 산업의 비중이 동기간 5.5%에서 6.9%의
범위에 해당하여 강원도의 경우 민간부문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공공부
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12.4%에서 10.6%로
다소 하락하였다. 전국 제조업의 해당 비중이 29.3%에서 27.5%로 1.8%p 하락하였음
을 고려할 때, 강원도의 제조업은 지역산업구조 측면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19년 두 시점 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4.99%p),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4.77%p),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39%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9%p) 등이며,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4.48%p),
기타서비스업(3.96%p), 농림어업(2.72%p), 부동산업(2.49%p) 등으로 나타난다.

<표 1-1> 강원도 산업구조 변화

산업	2000	2010	2019
농림어업	7.8	5.4	5.1
광업	3.2	2.4	1.9
제조업	12.4	9.5	1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8	3.1	3.2
건설업	12.7	8.7	8.2
도매 및 소매업	5.4	5.1	4.9
운수 및 창고업	4.0	4.0	4.1
숙박 및 음식점업	5.4	4.7	4.2
정보통신업	2.0	2.4	2.4
금융 및 보험업	4.8	3.7	4.3
부동산업	8.4	6.5	5.9
사업서비스업	0.0	4.0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6	21.0	22.0
교육서비스업	7.0	9.1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	4.3	5.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0	6.6	4.8
기타서비스업	4.0	0.0	0.0

주 : 총부가가치(불변가격)의 산업별 비중(%)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각 년도

<표 1-2>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시·군별 비중

시·군	전산업			제조업		
	2000	2010	2018	2000	2010	2018
춘천시	13.8	14.7	16.5	8.2	6.6	9.9
원주시	16.7	18.9	20.5	29.0	39.4	35.0
강릉시	13.6	11.3	11.3	21.0	11.6	9.6
동해시	6.7	7.4	7.0	6.7	8.4	10.9
태백시	3.1	2.4	2.0	1.2	1.1	1.1
속초시	4.1	3.5	3.7	1.2	1.2	1.2
삼척시	5.9	5.3	5.2	6.7	4.7	4.7
홍천군	5.5	5.9	5.3	7.9	5.9	6.6
횡성군	3.7	3.9	3.7	4.9	6.3	7.4
영월군	4.1	3.5	2.7	7.4	7.0	5.3
평창군	3.5	3.4	3.0	0.7	1.6	1.3
정선군	3.2	4.1	2.9	1.5	1.2	1.6
철원군	3.7	3.4	3.9	1.3	1.3	2.0
화천군	2.4	2.4	2.8	0.4	0.6	0.5
양구군	1.8	1.9	2.0	0.3	0.7	0.4
인제군	3.1	3.2	3.1	0.5	0.6	0.7
고성군	2.5	2.2	2.2	0.6	0.7	1.0
양양군	2.6	2.6	2.2	0.7	1.1	0.9

주 : 연도별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의 시·군별 비중(%)
 자료 : 강원도, 「강원도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연도별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에서 개별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에 대해 2000년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세 지역의 비중이 44.1%로 높았으며 2018년에는 48.3%까지 상승하였다. 2000년과 비교해 2018년에 비중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원주시(3.8%p)와 춘천시(2.7%p)에 해당하는 반면에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릉시(-2.3%p), 영월군(-1.4%p), 태백시(-1.1%p)로 나타난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원주시와 강릉시의 2000년 비중은 각각 29.0%와 21.0%로 이 두 지역이 강원도 제조업의 생산에서 절반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원주시가 35.0%로 6.0%p 상승한 반면에 강릉시는 9.6%로 11.4%p 하락하여 대조를 이룬다. 원주시 이외에도 2000년

대비 2018년에 비중이 상승한 지역은 동해시(4.2%p), 횡성군(2.5%p), 춘천시(1.7%p) 등이며, 하락한 지역은 강릉시를 포함하여 영월군(-2.1%p)과 삼척시(-2.0%p) 등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내 산업단지는 1993년에 4.7㎢의 면적에 걸친 27개소가 있었으며, 420개 업체가 입주하여 13,83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후 연도별로 2000년 기준 6.1㎢에 걸친 30개 단지가 조성되어, 이를 통한 645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으며 이들을 통해 16,445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2010년 기준 15.7㎢의 총면적에 56개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입주업체는 1,198개에 달하고, 이들의 고용은 19,421명에 해당하였다. 2019년 기준 총면적은 25.6㎢로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29개소, 농공단지 44개소로 전체 74개의 단지가 조성되었다. 1,799개 업체가 입주하여 30,05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에 의한 생산액은 2010년에 38,357억 원으로 이 가운데 53.8%가 농공단지의 비중에 해당한다. 2019년 생산액은 75,748억 원에 해당하며, 농공단지의 비중은 49.6%로 2010년에 비해 4.2%p 낮아졌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에 의한 수출의 경우 그 금액은 2010년에 1,712백만 불에 달하며, 이 가운데 68.9%에 해당하는 1,196백만 불이 농공단지 내 기업들에 의해 이뤄졌다. 2019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의한 수출액은 1,685백만 불로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공단지 내 기업들에 의한 수출액이 564백만 불로 2010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¹⁾

1) 생산액과 수출액은 당해 가격에 의한 것으로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 수출액 규모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표 1-3> 강원도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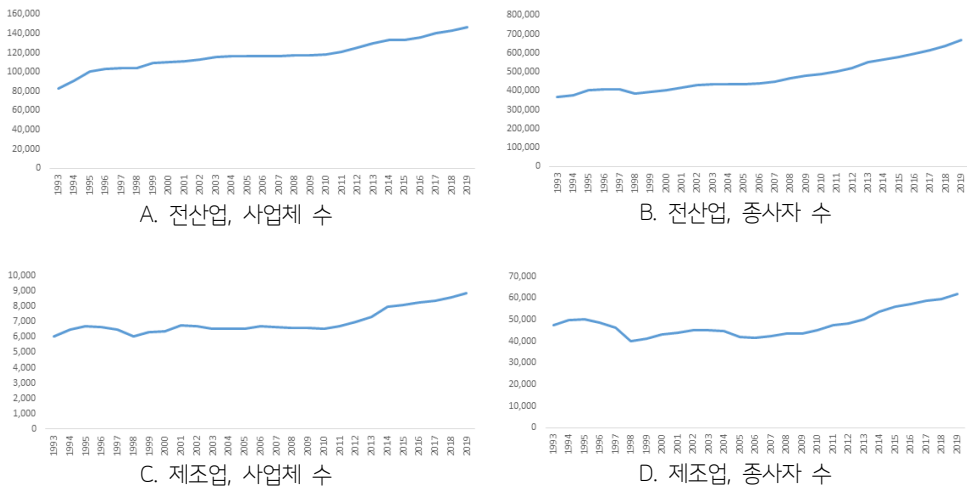
	단지수 (개)	총면적 (km ²)	입주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생산액 (억원)	수출액 (천불)
강원도	74	25.6	1,799	29,458	76,053	1,685,162
춘천시	14	4.1	384	7,786	18,627	623,899
원주시	10	3.5	305	9,714	25,934	521,229
강릉시	5	2.4	217	2,153	4,388	40,139
동해시	4	4.7	199	1,288	4,951	134,637
태백시	3	0.5	47	380	1,059	2,617
속초시	3	0.4	104	1,307	2,391	14,392
삼척시	5	4.5	40	423	430	1,061
홍천군	5	1.1	43	1,102	6,354	281,143
횡성군	5	1.8	120	2,469	5,751	37,038
영월군	3	0.5	54	368	578	2,843
평창군	2	0.2	40	338	1,376	176
정선군	3	0.3	32	319	108	0
철원군	4	0.8	51	774	2,483	8,716
화천군	1	0.1	26	173	192	1,000
양구군	1	0.1	27	135	0	0
인제군	2	0.2	25	114	802	352
고성군	2	0.1	35	214	565	15,296
양양군	2	0.2	50	401	64	624

자료 : 강원도, 「강원도기본통계」 2019년

2019년 기준 강원도 산업단지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단지수는 춘천시(14개)와 원주시(10개)에 가장 많은 반면에 총면적은 동해시(4.7km²)와 삼척시(4.5km²)가 가장 크다. 입주업체수에서는 춘천시(384개)와 원주시(305개)가 가장 크며, 고용 역시 원주시가 9,714명, 춘천시가 7,786명으로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산업단지 전체 고용에서 59.4%(원주시가 33.0%, 춘천시가 26.4%)를 차지한다. 생산액은 76,0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원주시의 비중이 3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춘천시(24.5%), 홍천군(8.4%), 횡성군(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수출액은 1,685백만 불로 이 가운데 춘천시의 비중이 37.0%로 가장 높으며, 원주시

30.9%, 홍천군 16.7%, 동해시 8.0%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생산액이 가장 큰 지역은 인제군(7.0억 원/명), 홍천군(5.8억 원/명), 평창군(4.1억 원/명), 동해시(3.8억 원/명) 등의 순이고, 1인당 평균 수출액의 경우 홍천군(255.1천 불/명), 동해시(104.5천 불/명), 춘천시(80.1천 불/명), 고성군(71.5천 불/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²⁾

강원도 소재 사업체의 수는 1993년 82,661개에서 2019년 146,815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3%인 것과 유사하며 강원도의 비중 역시 3.4%~3.7%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종사자 수에서는 1993년 367,122명에서 2019년 670,247명으로 2.3%의 연평균 증가율로 사업체 수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2.8%~3.1%로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1-1> 연도별 산업별 강원도 소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조사 1993-2019

2)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산업단지의 규모와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1994~2019년 기간 일정 시점 간 강원도 내 사업체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고용은 3명에서 2010년부터 4명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작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대략 44%로 전국의 해당 수치가 35~39%임을 고려할 때,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한다. 평균 업력은 2000년 7년에서 2019년 10년으로 증가하여, 전국에 비해서는 1년 정도 많은 편이다. 조직형태별 비중에서 개인사업체는 1994년 90.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82.2%에 해당하는 반면에 회사법인은 2.9%에서 9.3%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개인사업체 비중이 91.9%에서 79.6%로 하락하고 회사법인이 4.3%에서 14.4%에 이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줄곧 1%를 밑돌았으며, 전국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 사업체 수 기준 제조업 비중은 1994년 7.2%에서 2010년 5.2%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하여 2019년에 6.1%를 나타내며, 이는 전국의 해당 수치에 비해 4~5%p가량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표 1-4> 시점별 강원도 내 사업체 특성의 변화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평균 고용(명)	3	4	3	4	3	4	4	5	4	5	4	5
여성 대표자 비중(%)			41.4	35.0	43.0	36.9	44.0	38.1	43.7	38.2	43.8	39.1
평균 업력(년)			7	6	7	6	9	8	9	8	10	9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0.8	91.9	90.4	90.0	88.3	87.0	86.5	84.6	83.9	81.4	82.2	79.6
회사법인	2.9	4.3	3.3	5.5	4.8	8.0	5.9	9.8	8.1	13.0	9.3	14.4
회사 이외의 법인	5.1	2.8	3.4	1.9	2.2	1.6	2.0	1.4	2.6	1.8	3.1	2.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2	1.1	2.9	2.6	4.7	3.4	5.6	4.2	5.5	3.9	5.4	3.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3	95.6	97.1	96.8	97.3	96.5	95.9	95.2	95.1	94.5	94.5	93.7
본사·본점	0.5	1.4	0.3	0.5	0.3	0.7	0.6	1.1	0.7	1.1	0.8	1.3
공장·지사(점)·영업소	3.2	3.0	2.6	2.6	2.4	2.9	3.5	3.7	4.2	4.4	4.7	5.0
제조업 비중(%)	7.2	11.9	5.8	10.4	5.7	10.6	5.2	9.7	5.6	10.7	6.1	10.6

주 : 창설연도가 1160년 이전으로 표시된 경우 결측(missing)으로 처리됨.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2. 인구의 변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강원도의 인구는 1975년에 1,861,54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5.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 2.9%를 나타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원도의 인구비중은 1992년 3.5%에서 이후에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 3.0%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에서 강원도는 1975년에 6.7%에서 2020년에 29.3%로 22.5%p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의 6.6%에서 23.5%로 16.9%p 상승과 비교해 고령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내 가구수는 1955년 25만으로 전국 대비 6.6%를 차지하였다. 이후 1970년 34만 가구(전국 대비 6.1%), 1980년 38만 가구(4.7%), 1990년 41만 가구(3.6%), 2000년 49만 가구(3.4%), 2010년 56만 가구(3.2%), 2020년 66만 가구(3.2%)로, 가구수는 증가하나 전국 대비 비중은 감소하다가 최근에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

만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강원도는 1995년 103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70.2%에 해당하여 전국의 해당 수치인 71.1%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강원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후 2000년 70.2%, 2010년 68.9%, 2020년 68.6%로 그 폭이 크지는 않으나 감소하여 동기간 전국의 71.7%(2000년), 72.5%(2010년), 71.9%(2020년)와 대조를 이룬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 강원도는 인구의 순유출을 경험하였으며 그 규모는 24,64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로 16,893명의 순유출이 이뤄졌고, 경기로 7,993명의 순유출이 이뤄졌다. 반면, 전남과 전북으로부터 각각 1,355명과 912명의 순유입이 있었다. 1990년에는 순유출 규모가 1980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47,637명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로의 순유출이 각각 14,984명과 14,625명으로 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에 해당하였다. 더욱이, 강원도는 모든 광역시도에 대해 순유출을 나타내었다. 2000년에는 순유출이

11,13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로의 순유출 규모가 1990년에 비해 대략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남과 제주로부터 각각 263명과 199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2010년의 경우 강원도는 순유입 지역에 해당하며, 555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특히, 경기로부터 557명의 순유입이 이뤄졌고 인천(716명), 대구(386명), 부산(236명), 광주(195명), 전남(186명) 등으로부터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2020년 역시 강원도는 인구의 순유입을 경험하였으며, 그 규모는 5,457명에 이른다. 세종(154명), 대전(127명), 충남(106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로부터 순유입이 이뤄졌으며, 인천(1,191명), 경기(877명), 경북(734명), 서울(653명) 등의 순으로 순유입 규모가 컸다.³⁾

3)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홍성호·유수영(2012)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층과 젊은 세대 간에 이주결정요인이 상이하며 전자는 지역의 사회복지 여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후자는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강원도의 거주지로서의 매력과 근무지로서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지역 간 이전은 근로자의 지역 간 이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 입장에서 기업의 유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유입 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이전행태와 더불어 인구의 이주행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표 1-5> 연도별 강원도로의 순유입자 수

지역	1980	1990	2000	2010	2020
서울	-16,893	-14,984	-5,042	-62	653
부산	-1,713	-1,412	79	236	288
대구		-1,288	-193	386	452
인천		-5,319	-444	716	1,191
광주		-106	-10	195	141
대전		-1,225	-629	-373	-127
울산			-116	-68	304
세종					-154
경기	-7,993	-14,625	-4,499	557	877
충북	-628	-3,183	-292	-581	398
충남	405	-225	-583	-347	-106
전북	912	-148	22	27	38
전남	1,355	-52	263	186	263
경북	460	-1,978	17	-207	734
경남	-566	-2,879	94	-170	425
제주	12	-213	199	60	80
합계	-24,649	-47,637	-11,134	555	5,457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강원도 내 시·군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00년에 원주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인구의 순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척시(1,694명), 강릉시(1,418명), 태백시(1,245명), 동해시(1,174명) 등에서 큰 규모의 순유출을 나타내고, 삼척시는 도내 시·군 간 이동에서도 916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2,610명의 순유출이 이뤄졌다. 2010년에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만 인구의 순유출을 나타낸다. 강릉시에서 1,408명의 순유출이 발생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해시(768명), 태백시(585명), 속초시(538명)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큰 순유출 규모를 보였다. 반면, 원주시(847명), 춘천시(766명), 철원군(700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순유입이 이뤄졌다. 2020년의 경우 6개 시·군에서만 순유출을 경험하였고, 그 규모 역시 철원군 719명, 삼척시 682명, 태백시 486명 등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인구의 순유입은 원주시에서 2,957명으로 현저

하게 큰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홍천군(1,067명), 속초시(770명), 양양군(624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순유입이 이뤄졌다.

<표 1-6> 연도별 강원도 내 개별 시·군의 순유입자 수

시·군	2000			2010			2020		
	순이동	도내 시·군 간	시도 간	순이동	도내 시·군 간	시도 간	순이동	도내 시·군 간	시도 간
춘천시	1,162	1,965	-803	2,053	1,287	766	1,682	1,258	424
원주시	2,727	2,296	431	3,100	2,253	847	5,161	2,204	2,957
강릉시	-422	996	-1,418	-1,217	191	-1,408	612	366	246
동해시	-791	383	-1,174	-950	-182	-768	355	420	-65
태백시	-1,816	-571	-1,245	-749	-164	-585	-952	-466	-486
속초시	509	748	-239	-379	159	-538	1,075	305	770
삼척시	-2,610	-916	-1,694	-507	-432	-75	-1,717	-1,035	-682
홍천군	-840	-412	-428	-210	-530	320	548	-519	1,067
횡성군	-819	-633	-186	-38	-431	393	251	-386	637
영월군	-1,321	-353	-968	-274	-150	-124	-185	-178	-7
평창군	-963	-608	-355	-310	-371	61	-136	-434	298
정선군	-1,186	-540	-646	-452	-332	-120	-153	-227	74
철원군	-1,017	-99	-918	624	-76	700	-810	-91	-719
화천군	-484	-389	-95	-98	-311	213	-12	-358	346
양구군	-495	-273	-222	322	66	256	-463	-178	-285
인제군	-786	-402	-384	25	-293	318	34	-171	205
고성군	-1,081	-586	-495	-263	-468	205	-267	-320	53
양양군	-901	-606	-295	-122	-216	94	434	-190	62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년도

3. 시대별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강원도 산업정책 개관

2013년부터 추진된 신지역 특화산업은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기존 3단계인 광역선도(광역경제권), 지역전략(광역시도), 지역특화(시·군·구)에서 2단계인 광역선도(광역경제권), 지역특화(광역시도)로 통합 및 단순화하였다. 2015년부터는 지원산업을 주력산업과 협력산업 등으로 재편하였으며, 신지역 특화산업의 선정은 집적도(사업체 수가 50개 이상, 종사자 수 기준 전국 대비 비중이 2%를 초과, 제조업에서 지역 내 비중이 3%를 초과), 특화도(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고 권역의 입지계수를 능가), 성장성(최근 3년간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을 기준으로 한다(지식경제부, 2012).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도입기, 체계화기, 확산기로 구분될 수 있다(김영수, 2007). 도입기는 1999~2001년의 기간으로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경남(기계)의 지역진흥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시기에 해당한다. 체계화기는 2002~2003년에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9개 지역에 걸쳐 사업신설이 이뤄졌다. 확산기는 2004~2008년에 해당하며, 4개 지역 2단계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이명박 정부)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선도산업이 추가되어 추진되었다.

<표 1-7> 지역산업 진흥사업 개관

사업 구분		대상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4개 지역사업	1단계(1999~2003)	부산, 대구, 광주, 경남	· 섬유, 신발, 기계, 광(光) · 인프라, R&D, 인력양성
	2단계(2004~2008)		· 시도별 전략산업 ·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9개 지역사업(2002~2007)		4개 지역 제외 비수도권 9개 지역	· 시도별 전략산업 · 인프라, R&D, 기획단
지역혁신산업기반 구축사업(2005~2009)		비수도권 13개 지역	· 4+9사업을 보완하여 인프라,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지원
Post 4+9(2008~2012)		비수도권 13개 지역	· 시도별 전략산업 · 인프라, R&D, 기업지원, 기획단
테크노파크조성사업(1997~2008)		전국	·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 14개 TP · 인프라 구축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2008~2012)		전국	· 수도권 포함 16개 시도 18개 TP · 지역산업육성거점강화, 기술기업육성 등 기업지원
지방기술혁신사업(2004~2013)		전국	·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 기술개발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13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에 2010년 5,461억 원 투입 - 지식경제부·지자체,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2010. 2. 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지역전략산업은 입지성, 산업의 비교우위 정도, 지역 내 성장 및 고용기여도,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 내 전후방 산업연관 정도, 광역권 내 역할과 연계성,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성, 인적자본의 축적정도,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밀집도 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강원도 지역전략산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을 포함한다.⁴⁾

4)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은 충북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충남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RFT, 문화산업, 광주 광산업, 자동차부품, 정보가전,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대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 울산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부산 기계부품, 영상IT, 해양, 관광컨벤션,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휴, 바이오, 제주 바이오, 디지털컨텐츠, 관광, 친환경농업생명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산업정책-특히, 제조업에 대한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수도권규제정책이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제도화가 논의되었다. 특히, 1964년에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대도시 공장신설 억제, 교육문화시설의 지방설치 등과 1969년에 수도권의 지리적 범위의 확장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 이뤄져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는 1980년대에 와서는 보다 체계화 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규모 공단의 비수도권 내 건설, 서울시의 인구분산계획, 비수도권 대학의 집중육성 등이 1970년대에 추진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등이 1980년대에 이뤄졌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에서 완화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를 계기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요구되었으며, 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외국자본 유치 대기업을 수도권 입지 허용, 수도권 규제특례지역 지정, 수도권 내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 완화,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인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다. 이는 2008년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를테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논의와 논쟁을 야기하게 된다(변용환 외, 2011; 조철주, 2015). 2009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이 급감하였으며, 규제완화 전후 2년의 기간에 이러한 이전기업은 41% 감소하였다(원광희, 2016).

정부는 2007년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혁신여건과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조성해 오고 있다. 이들 혁신도시의 개발은 공통적으로 약 2~5만

명의 인구규모를 계획하며, 3단계의 개발과정을 거친다. 2007~2014년의 1단계는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 2015~2020년의 2단계는 산학연 정착, 2021~2030년의 3단계는 혁신확산을 목표로 한다. 강원도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0만m²에 걸쳐 혁신도시를 조성하며, 생명·건강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생명 관련 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



<그림 1-2> 원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28&stype=1>

II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집적의 경제

1920년 Alfred Marshall은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이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야기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집적지 내 노동자들 간 비공식적인 대면접촉을 통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파급, 보다 큰 노동시장의 고용에서의 유연성(Krugman, 1991), 기업과 노동자 간 보다 나은 매칭(Helsley and Strange, 1990), 그리고 중간재 공급업자의 공유(Vernon, 1972; Saxenian, 1994)로 인해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주장은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지역-산업 혹은 지역 내 고용의 빠른 성장, 신생기업수의 증가, 수출기업화, 그리고 기업의 지역 간 이전(relocation)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Rosenthal and Strange, 2004).⁵⁾

5) 한 도시에서 특정 산업의 성장은 Marshall, Arrow and Romer, Porter, Jacobs 그리고 Storper에 의한 이론과 같은 동적인 외부효과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한 도시에서의 특정 산업의 초기 조건들이 생산성 증가를 촉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식파급을 확대함에 있어 상이한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Lee et al.(2005)은 이러한 이론들을 구분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적용한다. 실증분석은 상이한 산업에 속하는 소규모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때 생산성 증가가 보다 빠름을 나타내며, 이는 Jacobs와 Storper의 이론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특화와 다양성의 효과는 주요 제조업 하위-분류들 간에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린벨트나 과밀억제구역과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의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Lee et al.(2010)은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그리고 지역적 경쟁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집적의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분석의 결과는, 사업체가 보다 지역화/특화되고, 보다 도시화/다양화되며, 보다 경쟁적인 지역에 입지할 때, 이 사업체의 노동자들이 집적

Marshall(1920)은 집적의 경제에 대한 원천으로 암묵적 지식의 파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 산업이 입지를 선정했다면, 그 산업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다; 동일한 숙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상호간에 얻는 이점이 매우 크다. 직업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고, 공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또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잘한 일은 진가를 인정 받고; 기계, 공정 그리고 사업의 일반 조직에서의 발명과 개선은 즉각적으로 그것들의 장점들이 논의된다; 만일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갖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용되고 이들 자신의 제안들과 결합된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원천이 된다.”

Carlton and Kerr(2015)에 의하면, 지식파급은 기업의 수(보다 많은 기업 신설)를 증가시키고 총 고용을 증가시켜 군집된 산업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Carlton(1983)의 세 산업-플라스틱 제품, 전자송신장비, 그리고 전자부품-에 대한 연구에서, 탄력성의 추정치는 0.43에 해당한다. 즉, 산업 내 산출물이 10%만큼 증가하는 경우 신생 기업체의 수가 해당 지역 내 4.3%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Rosenthal and Strange(2003)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고전적 연구에서, 다른 우편번호 지역에 비해 1,000명 이상 소프트웨어 고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편번호 지역은 소프트웨어 고용에서 보다 큰 증가-대략 12개만큼 많은 고용-를 경험한다. 하지만, 집적의 경제로부터의 고용의 증대는 평균적으로 1마일당 대략 50%의 비율로 점차 작아진다.

으로부터의 외부효과로 인해 보다 생산적이 됨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기선택오류(self-selection bias)와 변수누락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omitted variable bias)에 관한 문제는 지역화 경제를 측정하는 변수에 대한 도구변수의 이용과 사업체/지역과 산업/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접근한다. 더불어, 다른 사업체들과의 공간적 접근성으로부터의 외부효과는 사업체의 산업유형, 나이, 규모, 그리고 조직의 법적인 유형에 따라 상이함을 제시한다. 전통적 중공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보다 덜 다양화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외적인 편익을 얻는 반면,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지역화 경제로부터 가장 큰 편익을 얻음을 보여준다. 외부효과는 설립 후 2~7년이 지났거나, 적어도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거나, 법 인체이거나, 혹은 복수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혹은 본사가 아닌)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상대적으로 신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다양한 환경에 보다 더 의존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오래된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동일한 산업의 군집에서 보다 큰 외적인 편익을 얻음을 근거로, Duranton and Puga의 제품수명주기 입지이론(product life-cycle location theory)을 지지한다.

Hong(2014)은 우리나라 개별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기업들의 지역 간 이전을 지역노동시장 내 이전과 지역노동시장 간 이전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근로자들은 주거지의 이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어 이직을 하며 이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의 채용 및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전을 통해 이를 보상할 정도로 충분히 큰 집적의 경제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회귀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집적의 경제가 나타남을 기업들의 지역 간 이전을 통해 제시한다. 더불어, 구교준·조광래(2008)는 강원도를 사례로 공공기관 이전에 비해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보다 큼을 산업연관분석의 결과로 제시한다. 즉, 집적의 경제는 기업의 지역 간 이전행태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힘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이전은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팽창은 혼잡비용이 집적의 효과를 능가하여 수도권으로부터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강원도와 같이 인접한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산맥과 같은 지리적 지형의 장애로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간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기업의 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원도의 산업적 집적이 변화할 것이다.

2.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입지이론

기업의 지역 간 이전은 이윤극대화의 한 과정이며, 생산하는 제품의 수명주기(life-cycle)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건이 상이하다. Duranton and Puga(2001)에 의하면, 제품의 도입기에 기업은 시제품(prototype)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환경은 대도시 내 다양한 산업이 집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제품 및 이의 생산공정이 표준화되어 성숙기에 이르면 추가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대신 지대와 같은 생산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동일한 산업들이 집적된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로 기업들이 이전하게 된다. 전자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에 해당하며, 후자는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에 해당한다. 이들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양한 도시들이 혁신적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위한 보육실로 작용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입지를 바꾼 프랑스 기업들 가운데 70% 이상이 다양한 도시에서 특화된 도시로 이전하였다. 다양한 도시에서 특화된 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빈도는 가장 혁신적인 산업들에서 가장 높다: 이 빈도는 연구개발에 대해 93%, 제약과 화장품에 대해 88%, 그리고 정보기술에 대해 82%에 해당한다. 사업서비스업, 인쇄와 출판, 항공우주 설비, 그리고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다른 산업들은 다양한 도시에서 특화된 도시로의 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갖는다. 대조적으로, 다양한 도시에서 특화된 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빈도는 가구, 식품, 음료, 의복, 그리고 가죽과 같은 보다 덜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동태적 관점에서 집적의 경제가 지역-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Henderson et al.(1995)은 미국의 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초기에 한 지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산업의 고용이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Marshall-Arrow-Romer의 주장과, 특정 산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의해 집적을 이루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Jacobs(1969)의 주장을 검증한다. 분석결

과에 의하면, 성숙기에 있는 자본재 시장은 해당 산업에 의해 특화를 이루는 지역에서 고용의 성장이 보다 빠른 반면에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은 다양한 산업의 집적과 해당 산업의 특화 모두 고용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신산업의 성장이 보다 크고 다양한 산업의 대도시지역에서 이뤄지고, 성숙기에 있는 산업은 보다 작고 특화된 도시들로 분산된다는 도시의 특화 및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부합한다.

Vernon(1972)은 라디오 산업이 뉴욕 대도시지역을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십년 혹은 이 십년 후에, 어쨌든, 이 산업의 기술은 정착되었다. 생산방식은 표준화되었고 기술들은 장기적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현재, 중요한 경쟁적인 질문들은 제품디자인보다 운송비용과 노동비용이 되고 있다. 그 그림에서 작은 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거대한 조립공장들이 국가 전체 시장을 위한 보다 중심적인 지역에 위치한 보다 낮은-지대 입지들에서 나타났다.”

이 이론은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의 지역산업과 경제에 대한 함의를 지닌다. 서울은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기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생기업이나 신산업의 집적지로 적합하다. 하지만, 제품이나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면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대와 인건비가 싼 인근의 강원도로 이전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의 지역 간 이전은 강원도에 특정 산업-특히, 신산업이 아닌, 성숙기의 산업-에서 특화나 집적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

3. 본사기능에 따른 입지이론

Davis and Henderson(2008)은 기업 본사(headquarter)의 집적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사는 기업의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양한 서비스업-특히, 연구개발, 경영자문, 법률, 회계, 광고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본사에는 생산공장에서도 달리 주로 고급인력의 사무직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의 본사들이 집적한 지역에서는 근로자들 간 비공식적 대면접촉에 의한 암묵적 지식의 파급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의 형태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본사들 간 근거리 내 입지를 야기하여 초기에 일부 본사들에 의한 지리적 집적은 해당 지역 내 추가적인 본사의 입지를 유도하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성격을 지닌다.

법인기업들은 산업의 경계를 넘는 집적의 경제-즉, 도시화경제-를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본사를 도시에 입지시킨다. 법인의 임원과 관리자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생산과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신규 공장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며, 법률분쟁을 처리한다. 법인기업들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화된 기업들, 이를테면 회계기업이나 법률기업을 공유하기 위해 군집한다. 다시 말해, 군집은 법인기업들로 하여금 회계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중간재 생산요소의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집적지에서 법인기업들은 또한 그 외의 사업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선전을 제작함에 있어 거대한 규모의 경제가 주어진다면, 법인기업들은 광고회사들을 공유하기 위해 군집하고, 그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특화된 광고선전을 만든다(O'Sullivan, 2018). 더욱이, 사업서비스업체와 의사소통은,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 근거리에 입지하도록 한다.

Duranton and Puga(2005)에 의하면, 도시의 특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왔으며 거대한 도시들은 관리기능에 더욱 특화되었다. 이들은 지난 수 십년간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직 노동자의 비율이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50년 이래로, 가장 큰 도시들-이를테면, 5백만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들-에서 이 비율은 단지 국가 전체 평균을 10% 상회하는 수준에서 평균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대조적으로, 가장 작은 도시들-이를테면, 75,000명과 250,000명 사이의 인구규모를 갖는 도시들-에서 이 비율은 평균보다 단지 2% 낮은 수준에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는 강원도 지역 내 본사의 비중 혹은 분포가 향후 강원도 지역경제 혹은 지역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사의 입지는 추가적인 본사의 입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의 발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나 지역산업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공장 가설

해외직접투자가 현지의 국가경제 혹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본사는 본국에 입지한 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을 위해 생산기지만을 후진국에 입지하는 이른바 분공장(branch plant)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Massey(1984)에 의하면, 경제발전에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체의 본사와 공장 간에 존재하는 노동력의 공간적 분할이라고 언급된다. 통상 본사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입지하는데, 이는 본사가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서비스업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제품의 생산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이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공장은 연구개발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Rees, 1979; Vernon, 1966). Sonn and Lee(2012)은 분공장에 의한 일자리가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에 있어서도 과장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제시한다(Munday, 2000; MacKinnon and Phelps, 2001). 더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고(Morgan, 1991), 지역산업과의 연계(Turok, 1993) 혹은 파급효과(Harris and Robinson, 2004)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원(2001)은 어느 지역이 새로운 산업 혹은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 관련부품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외지의 부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산업 혹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홍성효·임준홍(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법인의 분공장은 1,859개소에 이르며 수도권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 내 타 광역시도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충청, 강원, 호남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에 입지하여 해당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제시한다.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

계, 제조업체의 공장은 본사에 비해 고용의 질-이를테면, 상용근로자 비중, 사무직 비중 등-이 낮고 연구개발활동이 저조하여 분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임금과 부가가치 및 생산에 있어서는 본사에 비해 공장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아 분공장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실증적으로는 혼재된 결과가 관찰됨을 제시한다.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라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이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강원도로 이전하되 본사를 제외한 단순한 가공이나 부품의 조립만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분공장의 형태로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체 이전을 통한 강원도 지역경제 혹은 지역산업의 발전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산업적 패러다임의 급변 등으로 산업 혹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크게 단축됨에 따라 분공장 중심의 지역경제는 경기침체에 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

5.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군집

집적의 경제를 야기하는 원천들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비공식적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에 의한 암묵적 지식의 파급은 기업의 대표(CEO)에게 있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자 성(gender)에 따라 지리적 군집의 정도가 다르며 이는 암묵적 지식의 파급을 통한 지리적 군집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남성 대표자 기업과 여성 대표자 기업 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함축한다. 특히, 기업의 대표자가 기혼여성일 경우에는 가사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입지가 거주지 인근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⁶⁾ 이는 여성 대표자가 다른 기업들과 지리적으로 군집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Liao and Stevens(1994)와 Moore(1990)는 여성의 네트워크가 남성의 네트워크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여 기업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한다. 홍성호(2014)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Ellison and Glaeser(1999)에 의한 감마지수(γ index)의 측정결과 2001~2011년의 기간에 남성기업가의 지리적 군집의 정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여성기업가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신생기업의 입지결정에 있어 집적의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남성기업가에 비해 여성기업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⁷⁾ 또한, 통근소요시간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를 사례로 분석한 홍성호(2018)의 분석결과와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여성의 일자리창출규모가 남성 대표자 기업에 비해

6) Turner and Niemeier(1997)의 가사책임에 대한 가설(household responsibility hypothesis)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에 있어 여성이 가사나 자녀의 양육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간제약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짧은 통근시간과 통근거리를 가능케 하는 거주지 인근의 근무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실제로, Hersch and Stratton(1994)의 미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가사를 위해 남성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함을 보여준다.

7) 지역화경제를 기준으로 신생기업 입지결정에서 집적의 경제가 미치는 영향은 여성기업가의 경우 남성기업가에 비해 1/3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Rosenthal and Strange(2012)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성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여성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지역 내 여성기업가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고찰은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 수출활동에 있어서의 집적의 경제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이들테면, 문화나 종교와 관련한 고유의 소비습관 등에 관한 정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입지하는 기업들간에만 공유되는 클럽재(club good)와 같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신생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군집하는 지역에 입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는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을 가속화함을 예측할 수 있다.

Lovely et al.(2005)은 기업들의 지리적 군집이 집적의 경제를 통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더불어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에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은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는 수출업체들-특히 이들의 본사(headquarters)-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군집하도록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본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본사 간 지리적 군집의 정도를 비교한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수출업체의 본사들은 보다 더 지리적으로 군집함을 제시하고 있다. Greenaway and Kneller(2008)는 영국의 자료를 이용해 수출업체들에 의한 집적이 개별 기업의 수출가능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Greenaway et al.(2004)은 영국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출업체의 존재가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반면에, 멕시코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Aitken et al.(1997)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주(state)에 위치한 개별 공장의 수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수출업체와의 인접 성과는 개별 공장의 수출이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자료를 이용한 Barrios et al.(2003)은 기존 수출업체의 수출활동이나 다국적 기업의 존재가 비수출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Bernard and Jensen(2004)은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수출에 있어서의 집적의 경제-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가 존

재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Koenig(2009)은 수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동일한 수출대상국 내에서만 발생하며 보다 먼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있어 이러한 파급효과가 보다 큼을 보여준다.

한편, Hong(2015)은 연속적 해저드 모형(continuous hazard model)을 적용해 우리나라 제조업 대상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생 사업체가 입지한 지역에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존 수출업체의 수가 이의 표준편차(11.47)만큼 증가하는 경우, 이 신생 사업체가 다음 해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 확률-즉, 해저드 비율-이 19.6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러한 확률은 신생 사업체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받음-즉, 수출이 1년만큼 지연된 경우 다음 해에 수출을 하게 될 확률은 4.6%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해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이 불변이라는 가정을 완화하기 위한 이산적(discrete) 해저드 모형에서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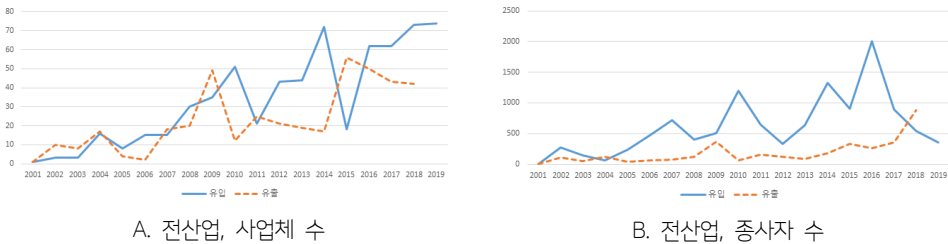
Ⅲ

실증분석

1. 사업체 이전행태분석

1.1. 연도별 유입과 유출

2000~2019년의 기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는 646개로 같은 기간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가 414개임을 고려할 때, 232개 사업체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9년에 강원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수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순유입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2019년에 74개 사업체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2000~2018년 기간의 사업체 순유입은 158개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유입과 유출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이러한 경향은 유입에서 보다 명확하다. 이전을 통한 종사자 수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유입을 통한 강원도 내 고용의 증가는 11,672명에 달하는 반면에 유출로 인한 강원도 내 고용의 감소는 3,393명으로 8,279명의 순증가가 발생하였다. 사업체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로 인한 강원도 내 고용 감소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 내 고용의 순증가는 다소 작아질 것이다. 2019년에 유입된 사업체에 의해 강원도에서 증가한 고용이 353명이며, 2000~2018년 기간의 사업체 이전을 통한 강원도 내 고용의 순증가는 7,926명에 해당한다.



<그림 III-1> 연도별 유입과 유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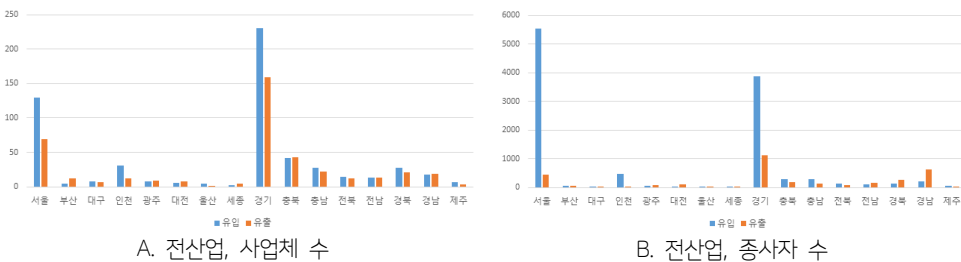
주 : 2019년에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의 확인은 2020년 자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며, 2000년에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는 없음. 종사자 수의 경우 이전을 통한 강원도에서의 고용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t-1년도에 타 지역에 입지하다가 t년도에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t년도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t-1년도에 강원도에 입지하다가 t년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t-1년도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함

이전에 의한 강원도 내 고용의 증가규모는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의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같은 기간 유입하는 사업체의 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유입하는 사업체의 특성상 종사자 수 규모가 원래 작은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체가 개인사업체에 해당하거나 종사자 수가 통상적으로 작은 산업에 속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품의 수명-주기(life-cycle)상 쇠퇴기에 속하는 사업체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유입하는 사업체가 강원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던 경우로, 지역노동시장 간 이전(relocation)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종사자들에게 이주에 따른 비용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해당 사업체는 이전 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원래의 고용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이주에 따른 비용은 이사비용과 새로운 주택의 마련을 위한 금전적 비용과 함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

1.2. 지역 간 이전

2000~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되 강원도로의 유입에서 강원도로부터의 유출을 뺀, 순유입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에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체 수에서 순유입은 158개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경기로부터의 순유입이 7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 61개, 인천 19개로 주로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순유출은 부산으로 8개 사업체, 대전과 세종 각각 2개, 광주와 충북 각각 1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체의 이전으로 강원도의 고용은 7,926명만큼 순증가를 나타내며, 이 가운데 서울로부터의 순유입을 통한 고용 증가가 5,09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2,753명, 인천 440명, 충남 1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전을 통한 고용의 순감소는 경남 401명, 경북 144명, 대전 102명 등으로 나타난다. 경북의 경우 강원도로 유입된 사업체 수는 27개로 강원도로부터 유출된 사업체 수 21개보다 많아, 경북에서 강원으로 6개 사업체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강원도의 고용은 오히려 144명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2> 지역 간 유입과 유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9

주 : 2019년에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의 확인은 2020년 자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며, 2000년에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는 없음. 유입과 유출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에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 및 이의 종사자 수는 분석에서 제외됨. 종사자 수의 경우 이전을 통한 강원도에서의 고용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t-1년도에 타 지역에 입지하다가 t년도에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t년도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t-1년도에 강원도에 입지하다가 t년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t-1년도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함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과 이를 통한 고용의 지역 간 이동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그리고 강원도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업체의 이러한 지역 간 이전행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체가 강원도로 유입되고 어떠한 사업체가 강원도로 부터 유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2019년 기간에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유입된 사업체의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사업체를 비교하면, 평균 고용은 수도권 이 23명으로 비수도권의 8명에 비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수도권이 19.3%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3.2%로 차이가 크며, 평균 업력은 수도권이 5년으로 비수도권의 3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수도권이 46.9%로 비수도권의 60.5%에 비해 낮다.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수도권이 11.6%로 비수도권의 5.9%에 비해 대략 두 배에 달한다. 강원도로 이전하는 사업체가 제조업에 속하는 비중은 수도권이 19.0%로 비수도권(8.8%)의 두 배를 능가한다.

<표 III-1a> 2000~2019년 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구분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평균 고용(명)	23	8
여성 대표자 비중(%)	19.3	33.2
평균 업력(년)	5	3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48.5	36.6
회사법인	46.9	60.5
회사 이외의 법인	2.9	1.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7	1.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84.4	91.7
본사·본점	11.6	5.9
공장·지사(점)·영업소	4.1	2.4
제조업 비중(%)	19.0	8.8

2000~2019년 기간 강원도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고용에서 비수도권이 10명으로 수도권의 7명에 비해 크며 대표자의 여성 비중 역시 비수도권이 31.6%로 25.4%의 수도권에 비해 높다. 업력은 평균 5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없으며, 조직형태별 비중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사나 본점의 비중은 수도권이 8.3%로 비수도권의 4.6%에 비해 다소 높다. 제조업의 비중에서는 수도권이 14.6%로 비수도권의 4.6%에 비해 10%p만큼 높다.

<표 III-1b> 2000~2019년 기간 강원도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구분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수도권으로의 유출
평균 고용(명)	7	10
여성 대표자 비중(%)	25.4	31.6
평균 업력(년)	5	5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48.8	46.6
회사법인	49.6	52.9
회사 이외의 법인	0.8	0.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8	0.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86.7	90.2
본사·본점	8.3	4.6
공장·지사(점)·영업소	4.2	1.7
제조업 비중(%)	14.6	4.6

지역 간 이전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입과 유출 모두 강원도와 수도권 간 이전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강원도와 비수도권 간 이전에서의 그것에 비해 높은 반면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오히려 후자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사업체의 이전행태에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 혹은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및 실행기(1965~1979), 수도권 정비계획

법 도입 및 적용기(1992~2000),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 및 진행기(2000~2007), 적극적 수도권 규제완화기(2008~현재)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변용환 외, 2011; 홍성효·임준홍, 2015). 2008년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2000~2008년과 2009~2018년으로 구분하고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강원도로의 유입이나 강원도로부터의 유출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67개 사업체이며, 2008년 이후의 유입은 325개로 258개만큼 증가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24개에서 156개로 132개만큼 증가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사업체 수의 두 기간 간 증가의 폭보다 작다. 사업체 이전을 통한 고용의 변화에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으로 인한 강원도 내 고용이 2008년까지 2,022명인 반면에 그 이후로는 7,876명에 해당해 2008년 이후에 5,854명만큼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고용의 변화는 2008년까지 299명에서 그 이후 1,122명으로 823명만큼만 증가하여,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진 2008년 이후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사업체 수와 이로 인한 고용이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에 의해 해당 수치들에 비해 오히려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원도로부터의 유출에서 사업체 수는 유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2008년 이후에 보다 커졌으나 고용의 경우는 2008년을 전후로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비해 비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에서 2008년을 전후로 수도권 대상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영(0)보다 크지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는 사업체 수의 경우 순유입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었으나 고용에서는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되어 적어도 지역의 일자리측면에서 강원도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과는 이득을 보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III-2>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전후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

		유입			유출			순유입		
		2001~2008	2009~2018	차이	2001~2008	2009~2018	차이	2001~2008	2009~2018	차이
사업체 수	수도권	67	325	258	44	196	152	23	129	106
	비수도권	24	156	132	36	138	102	-12	18	30
	차이	43	169	126	8	58	50	35	111	76
종사자 수	수도권	2,022	7,876	5,854	393	1,221	828	1,629	6,655	5,026
	비수도권	299	1,122	823	193	1,586	1,393	106	-464	-570
	차이	1,723	6,754	5,031	200	-365	-565	1,523	7,119	5,596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지역 간 그리고 기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가운데 2008년까지는 평균 고용이 30명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9.0%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평균 고용이 22명으로 작아진 대신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21.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서도 유사하게 2008년을 전후로 고용 규모는 작아진 대신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한편,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가운데 2008년을 전후로 65.7%에서 43.6%로 하락하였으나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서는 50.0%에서 61.9%로 상승하여 대조를 이룬다. 사업체의 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과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모두 2008년을 전후로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서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고용 기준 제조업의 비중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과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모두에서 2008년을 전후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폭 또한 공통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a>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 2008년 전후 차이

구분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2000~2008 (N = 67)	2009~2019 (N = 374)	2000~2008 (N = 24)	2009~2019 (N = 181)
평균 고용(명)	30	22	12	7
여성 대표자 비중(%)	9.0	21.1	29.2	33.7
평균 업력(년)	5	4	3	4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32.8	51.3	37.5	36.5
회사법인	65.7	43.6	50.0	61.9
회사 이외의 법인	1.5	3.2	4.2	0.6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1.9	8.3	1.0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70.1	86.9	83.3	92.8
본사·본점	17.9	10.4	8.3	5.5
공장·지사(점)·영업소	11.9	2.7	8.3	1.7
제조업 비중(%)	17.9	19.3	8.3	8.8

강원도에서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지역 간 그리고 기간 간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 고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의 경우 2008년을 전후로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으로 유출의 경우에는 5명에서 1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 업력 역시 수도권으로 유출에서는 1년만큼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으로 유출에서는 2년만큼 증가하여,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유출하는 지역이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경우 2008년까지 65.9%였으나 그 이후에는 45.9%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비수도권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지역으로 유출하든 2008년을 전후로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관찰된다.

<표 III-3b>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 : 2008년 전후 차이

구분	수도권으로의 유출		비수도권으로의 유출	
	2000~2008 (N = 44)	2009~2019 (N = 196)	2000~2008 (N = 36)	2009~2019 (N = 138)
평균 고용(명)	9	6	5	11
여성 대표자 비중(%)	18.2	27.0	22.2	34.1
평균 업력(년)	6	5	4	6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34.1	52.0	47.2	46.4
회사법인	65.9	45.9	50.0	53.6
회사 이외의 법인	0.0	1.0	0.0	0.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1.1	2.8	0.0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77.3	88.8	77.8	93.5
본사·본점	9.1	8.2	5.6	4.3
공장·지사(점)·영업소	9.1	3.1	0.0	2.2
제조업 비중(%)	11.4	15.3	0.0	5.8

1.3. 시기별 이전의 특성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마다 상이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특정 지역에 있어서도 시기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 강원도 도정은 김진선 도지사 재임기간(1998. 7. 1~2010. 6. 30), 이광재 도지사 재임기간(2010. 7. 1~2011. 1. 27), 최문순 도지사 재임기간(2011. 4. 28~)으로 구분되며, 2000년 이후 기간을 두 기간 즉, 2000~2010년과 2011~2019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기간 간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도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체 이전행태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는 2010년을 전후로 평균 고용이 감소하고, 여성 대표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조직형태로서 회사법인의 비중(53.7%에서 50.3%로 감소)과

사업체 유형으로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16.4%에서 7.2%로 감소) 모두 감소하였다. 공장이나 지사 혹은 지점의 비중도 감소하여 단독 사업체의 비중이 78.0%에서 90.0%로 12.0%p 상승하였다. 고용을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은 2010년까지 17.5%였으나 그 이후로는 15.1%로 감소하였다.

<표 III-4a>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2010년 전후 차이

구분	2000~2010년	2011~2019년
평균 고용(명)	23	16
여성 대표자 비중(%)	20.9	24.7
평균 업력(년)	4	4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42.9	45.4
회사법인	53.7	50.3
회사 이외의 법인	1.7	2.6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7	1.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78.0	90.0
본사·본점	16.4	7.2
공장·지사(점)·영업소	5.6	2.8
제조업 비중(%)	17.5	15.1

한편,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특성을 2010년 전후로 비교하면, 평균 고용은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대표자 비중과 평균 업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형태 가운데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각각의 비중이 작은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사업체 유형별 비중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나타난다. 단독 사업체 비중이 80.1%에서 92.3%로 12.2%p 상승하였으나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9.9%에서 5.1%로 그리고 공장이나 지사 혹은 지점의 비중은 4.3%에서 2.6%로 하락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은 9.9%에서 10.6%로 단지 0.7%p 상승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강원도로 유입하는 사업체의 평균 고용은 감소한 반면에 강원도로 부터 유출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 7명만큼 크기 때문에 유출에 비해 유입하는 사업체의 평균적인 고용 규모가 크며, 이는 적어도 개별 사업체 이전에 따른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서 강원도 지역경제에 이득이 됨을 함축한다.

<표 III-4b> 강원도로부터 이전한 사업체 특성의 2010년 전후 차이

구분	2001~2010년	2011~2018년
평균 고용(명)	7	9
여성 대표자 비중(%)	27.0	28.6
평균 업력(년)	5	5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47.5	48.0
회사법인	50.4	51.3
회사 이외의 법인	0.7	0.4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4	0.3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80.1	92.3
본사·본점	9.9	5.1
공장·지사(점)·영업소	4.3	2.6
제조업 비중(%)	9.9	10.6

1.4. 이전하는 사업체의 유형

본사 혹은 본점은 강원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공장이나 지점만이 강원도 내에 입지하는 이른바 분공장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에 2,160개에 해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3,496개로 이 기간 대략 61.9%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공장의 본사 혹은 본점이 수도권에 입지한 경우의 비중은 2011년에 87.2%에서 2015년에 91.4%까지 상승한 후에 2019년에 89.1%로 다소 하락하지만, 수도권의 비

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가운데에는 충북, 대전, 경남 등에서 본사나 본점의 소재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III-5a> 강원도 이외 지역에 본사/본점이 있고 강원도 내 공장/지점이 있는 본사/본점의 분포 : 전산업

본사/본점 소재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1,558	2,004	2,143	2,173	2,285	2,390	2,416	2,435	2,473
부산	30	41	36	36	34	30	39	60	35
대구	11	13	17	18	19	16	20	22	19
인천	24	40	33	36	39	33	38	47	41
광주	34	7	6	4	12	5	33	37	8
대전	52	55	48	61	36	44	50	50	58
울산	6	9	5	4	5	6	6	6	4
세종		3	2	2	3	9	8	8	18
경기	302	431	453	463	498	490	517	541	600
충북	51	67	66	69	63	63	67	116	67
충남	38	39	27	18	20	18	20	17	34
전북	10	16	6	9	6	9	11	9	13
전남	6	4	4	4	16	20	19	18	28
경북	18	25	29	28	22	33	43	31	37
경남	18	29	19	26	25	57	43	45	53
제주	2	1	2	5	4	4	4	5	8
합계	2,160	2,784	2,896	2,956	3,087	3,227	3,334	3,447	3,496

제조업에 한정하여 강원도에 입지한 분공장은 2011년 120개에서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229개에 이르며, 이들의 본사 소재지로서 수도권의 비중은 79.3%(2018년)에서 85.8%(2011년)로 모든 산업에 대한 수치와 유사하게 절대적이다. 특히, 2019년 강원도에 위치한 229개 분공장에 대한 본사는 서울에 120개와 경기도에 60개가 입지한다.

<표 III-5b> 강원도 이외 지역에 본사가 있고 강원도 내 공장이 있는 본사의 분포 : 제조업

본사 소재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75	81	80	87	91	95	103	105	120
부산	3	5	3	3	4	2	3	5	5
대구	2	2	2	2	1	1	1	2	1
인천	3	5	4	5	5	4	3	7	9
광주									
대전	2	2	1	1	1	1	1		2
울산						1	2	2	2
세종		2	1	1	1	4	3	2	2
경기	25	36	30	46	37	41	48	53	60
충북	4	4	6	10	9	10	10	13	11
충남	1	1	1	2	4		2	3	3
전북				2	1	1	3	2	3
전남						2	3	2	2
경북	2	9	6	6	7	8	9	8	5
경남	3	1	2	2	1	2	3	4	4
제주									
합계	120	148	136	167	162	172	194	208	229

<표 III-6a> 강원도 내 본사/본점이 있고 강원도 이외 지역에 공장/지점이 있는 공장/지점의 분포 : 전산업

공장/지점 소재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118	159	172	179	178	204	199	207	259
부산	17	29	28	27	20	27	30	24	36
대구	5	10	12	9	10	13	14	13	15
인천	9	14	17	11	14	22	30	30	29
광주	4	8	7	9	6	8	9	8	9
대전	10	16	15	8	10	13	10	9	12
울산	7	8	10	10	12	12	12	9	6
세종		2	2	1	2	2	6	6	4
경기	72	104	124	155	137	166	173	190	237
충북	13	18	17	27	23	23	30	33	43
충남	6	13	15	18	17	17	17	16	21
전북	9	11	10	11	10	12	13	13	19
전남	3	6	7	6	7	8	14	15	20
경북	9	25	28	22	21	22	26	22	38
경남	6	14	11	12	12	20	24	20	27
제주	5	15	16	14	14	10	8	12	17
합계	293	452	491	519	493	579	615	627	792

이제까지와 반대로 강원도 내 본사 혹은 본점이 있고 강원도 이외 지역에 공장이나 지점이 있는 경우의 분공장은 2011년에 293개에서 2019년 792개로 증가하며, 이들의 수도권 비중은 2011~2019년의 기간에 61.3~68.1%로 강원도 분공장의 본사 혹은 본점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비중(87.2~91.4%)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본사나 본점이 강원도에 있는 분공장은 서울에 가장 많은 259개가 입지하고, 그 다음은 경기(237개), 충북(43개), 경북(38개), 부산(36개), 인천(29개)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본사가 강원도에 입지하고 공장이 강원도 이외 지역에 있는 분공장은 2011년에 25개였으나 2019년에는 106개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수도권 비중은 2011~2019년 기간에 54.7~60.3%에 해당하며, 2019년 기준 경기도에 가장 많은 39개 분공장이 있고 이외 지역에는 충북 16개, 서울 15개, 전남 8개 등으로 분포한다.

<표 III-6b> 강원도 내 본사가 있고 강원도 이외 지역에 공장이 있는 공장의 분포 : 제조업

분공장 소재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5	12	16	13	8	14	11	12	15
부산	0	1	2	1	0	0	2	2	2
대구	0	0	1	1	0	0	1	2	0
인천	1	2	2	1	1	2	7	6	4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1	1	0	1	1	2	2
울산	1	3	3	4	3	4	4	4	4
세종		0	0	0	0	0	2	2	0
경기	8	16	19	21	22	28	29	35	39
충북	5	6	6	5	6	7	9	10	16
충남	0	2	1	2	2	2	2	2	2
전북	2	3	3	2	2	4	4	4	4
전남	1	2	3	3	3	4	5	5	8
경북	2	4	6	4	5	5	3	2	5
경남	0	0	1	0	0	3	3	3	5
제주	0	0	0	0	0	0	0	0	0
합계	25	51	64	58	52	74	83	91	106

2. 집적도의 변화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적 집적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산업적 집적도에서의 지역 간 차이는 집적의 경제를 통해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을 야기한다. 따라서, 강원도의 산업적 집적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강원도 지역경제 및 산업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미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들은 제조업의 지역 내 집적을 위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같은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에 초점을 맞춰 이의 지리적 편중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 지수와 함께 지리적 집중을 절대적 개념에서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상대적 개념에서 측정하는 입지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1. 비유사성 지수

제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Massey and Denton(1988)에 의한 비유사성 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text{비유사성 지수} = \frac{\sum_{i \in j} [t_i | (p_i - P_j) |]}{2T_j P_j (1 - P_j)}$$

여기서, t_i 는 읍면동 i 의 전산업 사업체 수에 해당하고 T_j 는 광역시도 j 의 전산업 사업체 수로 $\sum_{i \in j} t_i$ 와 같다. p_i 는 읍면동 i 내 사업체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P_j 는 광역시도 j 의 제조업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지수의 수치는 제조업이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비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밀집된 읍면동으로부터 해당 광역시도 내 그렇지 않은 읍면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개별

읍면동에 제조업체만 있거나 제조업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유사성 지수의 수치는 최대가 되며, 개별 읍면동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이 해당 광역시도 내 비중과 같을 때 이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강원도의 비유사성 지수는 1994년에 0.201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아 제조업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2019년 역시 0.269로 도내 읍면동 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7> 제조업의 지리적 편중 : 비유사성 지수

광역시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서울	0.315	0.356	0.384	0.429	0.437	0.438
부산	0.337	0.374	0.422	0.468	0.524	0.541
대구	0.453	0.460	0.489	0.532	0.565	0.573
인천	0.441	0.553	0.590	0.610	0.630	0.622
광주	0.281	0.289	0.375	0.413	0.463	0.485
대전	0.259	0.334	0.368	0.444	0.476	0.481
울산		0.302	0.349	0.370	0.436	0.433
세종					0.480	0.504
경기	0.461	0.518	0.573	0.594	0.617	0.610
강원	0.201	0.183	0.203	0.227	0.261	0.269
충북	0.243	0.280	0.314	0.361	0.414	0.422
충남	0.254	0.290	0.313	0.361	0.425	0.440
전북	0.250	0.264	0.300	0.343	0.377	0.399
전남	0.251	0.263	0.287	0.329	0.351	0.357
경북	0.284	0.318	0.372	0.423	0.492	0.495
경남	0.308	0.387	0.456	0.511	0.588	0.583
제주	0.191	0.216	0.228	0.269	0.262	0.240

1.2. 지리적 집중 : 허핀달-허쉬만 지수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을 절대적 기준에서 측정하는 지수로는 허핀달-허쉬만(Herfindahl-Hirschman) 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text{허핀달-허쉬만 지수} = \sum_{i \in j} s_i^2$$

여기서, s_i 는 광역시도 j 내 제조업체수에서 읍면동 i 의 제조업체수 비중에 해당한다. 만일 광역시도 내 읍면동 간 제조업체수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면, 이 지수는 광역시도 내 읍면동 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반면에 특정 읍면동 하나에만 제조업체가 입지한다면, 이 지수는 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특정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함을 의미한다. 1994년에 강원도는 0.0098의 값으로 경북, 전남, 서울, 경남, 경기, 전북, 충남 다음으로 절대적 기준에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 지역의 경우 지수의 값이 크게 상승하나 강원도의 경우 2019년에 0.0103으로 상승폭이 작아 절대적 기준에서도 최근에는 제조업의 분포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III-8>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절대적 집중) : 허핀달-허쉬만 지수

광역시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서울	0.0065	0.0097	0.0113	0.0143	0.0141	0.0143
부산	0.0093	0.0128	0.0150	0.0191	0.0248	0.0273
대구	0.0139	0.0234	0.0277	0.0437	0.0454	0.0475
인천	0.0193	0.0467	0.0480	0.0523	0.0475	0.0494
광주	0.0190	0.0373	0.0455	0.0508	0.0591	0.0652
대전	0.0211	0.0324	0.0329	0.0417	0.0456	0.0454
울산		0.0286	0.0320	0.0342	0.0416	0.0412
세종					0.1159	0.0928
경기	0.0068	0.0079	0.0083	0.0097	0.0098	0.0103
강원	0.0098	0.0101	0.0100	0.0105	0.0105	0.0103
충북	0.0103	0.0120	0.0125	0.0137	0.0158	0.0167
충남	0.0093	0.0090	0.0101	0.0109	0.0129	0.0136
전북	0.0071	0.0086	0.0092	0.0112	0.0133	0.0126
전남	0.0060	0.0060	0.0073	0.0088	0.0099	0.0094
경북	0.0058	0.0066	0.0076	0.0092	0.0124	0.0127
경남	0.0065	0.0121	0.0154	0.0171	0.0196	0.0187
제주	0.0388	0.0382	0.0379	0.0387	0.0399	0.0398

1.3. 지리적 집중 : 입지계수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의 정도를 절대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반면에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제조업의 전국적 분포를 반영하여 상대적 기준에 의해 측정한다.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text{입지계수} = \frac{\text{share}_j^m}{\text{share}^m}$$

여기서, share_j^m 는 사업체 수 기준 광역시도 j 내 제조업의 비중을 나타내고 share^m 는 전국의 해당 비중-즉,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에 의한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이는 전국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이 지역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강원도 입지계수는 1994년에 0.604로 제주 다음으로 낮으며, 이후로도 2015년(0.528)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0.574로 상승한다. 제조업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내 비중에서 너무 과소한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 내 제조업이 단순 가공이나 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경제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쉽게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업체 이전을 통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원도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이 시점에 따라 다르고 해당 사업체의 원래 소재지-즉,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III-9>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상대적 집중) : 입지계수

광역시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서울	1.048	0.973	0.889	0.759	0.710	0.659
부산	0.991	1.026	1.003	1.022	1.000	1.000
대구	1.355	1.270	1.254	1.308	1.258	1.195
인천	1.117	1.279	1.302	1.271	1.218	1.157
광주	0.778	0.760	0.744	0.745	0.694	0.710
대전	0.737	0.719	0.681	0.688	0.650	0.664
울산		0.729	0.737	0.737	0.796	0.841
세종					0.847	0.683
경기	1.270	1.326	1.352	1.366	1.400	1.352
강원	0.604	0.555	0.533	0.529	0.528	0.574
충북	0.761	0.807	0.841	0.881	0.932	1.013
충남	0.895	0.874	0.884	0.913	0.925	1.022
전북	0.836	0.790	0.748	0.773	0.754	0.817
전남	0.841	0.779	0.790	0.813	0.764	0.851
경북	0.890	0.910	0.964	1.041	1.134	1.200
경남	0.891	1.019	1.098	1.190	1.251	1.267
제주	0.451	0.417	0.439	0.414	0.375	0.3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의 제조업은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지역 내 지리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집적의 경제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함축한다. 이는 앞으로 강원도 산업입지정책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집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운데 선택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3.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혹은 특성

우리나라는 민선 자치체제 하에서,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간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은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의 개발과 추진을 야기하였다. 또한, 제도에 의한 지역 간 차이-대표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혹은 이의 완화 관련 정책들로 인한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보이거나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 또는 지역-고유의 기업경영환경 등에서의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 간 경계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 산업분포에서 큰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강원도는 경기, 충북, 경북과 도경계를 공유하며, 이 경계를 따라 인접한 시·군들로 분석 대상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이들테면, 지대나 임금 등-은 유사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 네 지역이 각기 고유의 지역성이나 차별화된 정책을 갖는 경우 도경계를 넘을 때 고용(밀도)이나 창업활동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Holmes, 1998). 더불어, 이는 지역 간 기업입지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강원도의 도경계를 따라 인접하는 시·군들에 한정하여 창업활동에서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이들 시·군 내 개별 읍면동에서의 신생기업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때 강원도 내 지역으로는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태백, 삼척이 포함되고,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는 경기의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충북의 충주, 제천, 단양, 경북의 영주, 봉화, 울진이 포함된다.

강원도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에 대한 강원도 내 지역들과 강원도 외 지역들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신생 사업체 수에서 강원도는 평균 95.8개에 해당하는 반면에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의 시·군들에서는 평균 83.6개로 강원도가 12.1개만큼 많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도경계와 인접하는 지역들로 한정된 강원도의 기업유치에서의 경쟁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인접지역들인 경기, 충북, 경북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경우에 경기는 110.9개, 충북은 85.1개, 경북은 44.1개의 개별 읍면동 내 신생 사업체가 존재하여 강원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경북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있어 강원도가 경북에 비해 기업입지환경에서는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와 경북 간 인접한 시·군들은 강원도의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와 경북의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세 지역 가운데 두 곳이 시지역에 해당하는 반면에 경북의 경우 세 지역 가운데 한 곳만 시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들만을 고려하면 강원도 지역에서 도시화의 정도가 보다 높기 때문에 집적의 경제이론이나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라 신생 기업의 입지로서 강원도 지역들이 보다 선호될 것이다.

<표 III-10> 강원도 경계를 접하는 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의 지역 간 차이(2019년에 창업한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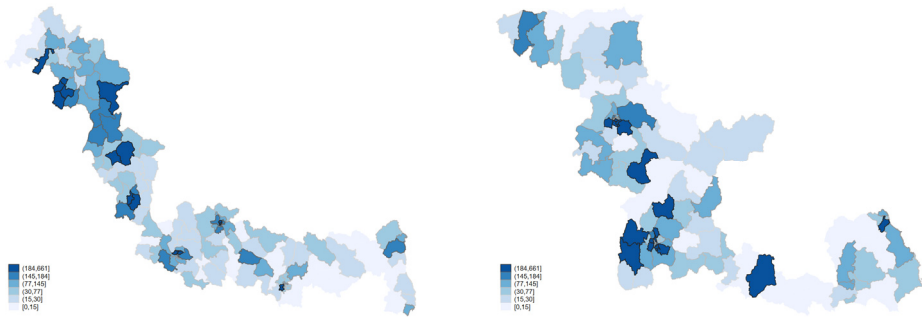
구분	비교 지역	평균		차이(t-값)
		강원	비교지역	
모든 신생 사업체 수	경기, 충북, 경북	95.8	83.6	12.1(0.90)
	경기		110.9	-15.1(-0.75)
	충북		85.1	10.7(0.58)
	경북		44.1	51.7(2.61)*
신생 회사법인수	경기, 충북, 경북	8.49	8.20	0.29(0.18)
	경기		12.54	-4.05(-1.66)+
	충북		7.62	0.87(0.46)
	경북		2.95	5.54(2.74)**
신생 본사 혹은 본점수	경기, 충북, 경북	0.32	0.30	0.02(0.19)
	경기		0.41	-0.09(-0.81)
	충북		0.34	-0.02(-0.22)
	경북		0.10	0.22(2.08)*
신생 제조업체수	경기, 충북, 경북	3.42	6.87	-3.45(-1.85)+
	경기		13.78	-10.36(-3.59)**
	충북		3.62	-0.20(-0.24)
	경북		1.46	1.96(2.37)*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분석에 포함된 지역은 강원도 9개 시·군 내 114개 읍면동, 경기 5개 시·군 내 54개 읍면동, 충북 3개 시·군 내 50개 읍면동, 경북 3개 시·군 내 39개 읍면동에 해당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사업체를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강원도 지역들에서는 읍면동별 평균 8.49개의 회사법인이 창업한 반면에 경기, 충북, 경북 세 지역에서는 8.20개가 창업하여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 12.54개, 충북 7.62개, 경북 2.95개에 해당하여, 강원도 지역들은 경기 지역들에 비해 평균 4.05개만큼 회사법인 창업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으며 경북 지역들에 비해 5.54개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회사법인의 입지로서 인접지역에 한정하여 강원도는 경기도에 비해 경쟁적이지 못하지만 경북에 비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는 그 유형에 따라, 단독 사업체, 본사 혹은 본점, 그리고 공장, 지사(점), 영업소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본사 혹은 본점에 한정하여 신생 사업체의 분포를 지역 간 비교하면, 강원도 지역들에서는 읍면동별 평균 0.32개에 해당하며 경기, 충북, 경북 세 지역에서는 0.30개에 해당한다. 강원도 외 지역들을 구분하면, 경기 0.41개, 충북 0.34개, 경북 0.10개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경북만이 강원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신생 사업체의 대다수가 단독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본사 혹은 본점수에서의 지역 간 차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 A. 인접지역(시·군) : 강원도 이외(경기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충북 충주,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 울진)
- B. 인접지역(시·군) : 강원도 이내(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태백, 삼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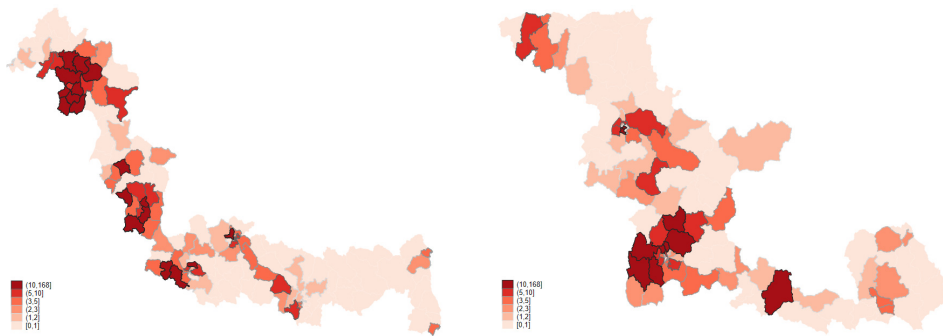
<그림 III-3a> 강원도 경계 인접지역들에서의 2019년 모든 신생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신생 사업체를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 지역들에서는 평균 3.42개의 제조업체들이 창업한 반면에 이와 인접한 지역들에서는 평균 6.87개가 창업하였으며, 이는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로서 강원도가 경쟁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강원도 인접지역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에서는 평균 13.78개, 충북에서는 3.62개, 경북에서는 1.46개의 제조업체가 창업하여 강원도의 비교열위가 주로 경기와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Holmes(1998)나 Black(1999)의 주장과 같이, 인접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들과 경기도 지역들 간 제조업 창업입지로서 물리적 여건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두 지역 간 정책이나 제도에서의 차이 혹은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Rosenthal and Strange(2001)에서와 같이, 이들 신생 제조업체들에 있어 집적의 경제가 중요하고 이의 원천으로서 암묵적 지식의 파급-즉, 근로자들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walking distance) 내에서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에 의한 비공식적 경로(informal channel)를 통해 지식이 파급-이 중요하다면 집적의 경제 또한 제조업 창업에서 지역 간 차이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Dalton, Georgia에서 카펫제조업체들의 군집은 1895년에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Catherine Evans는 결혼선물로 침대보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기법-천 겹면에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실의 술을 붙이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선물은 크게 흥행하였고, 이후 여러 해에 Evans는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 실이 촘촘한 것들도 만들었으며, 일부는 판매되기도 하였다. 그녀가 실 다발을 바탕천에 고정시키는 기법("stitching")과 같은 일부 생산기술을 발견한 이후에 그녀와 그녀의 이웃들은 지역수공업산업을 시작하였으며, 판매를 위한 수제품을 생산하였다. tufted 카펫-바탕천에 tuft용 실을 바늘로 꿰매 만든 카펫-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계가 직물 카펫보다 tufted 카펫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었을 때, 기업들은 카펫산업에 뛰어들었고 바탕천에 tuft용 실을 바늘로 꿰매는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

고 염색이나 바탕천 가공과 같은 중간재 생산요소 공급업체들을 공유하기 위해 Dalton에 입지하였다. 일부 카펫제조업체들은 북동부에서 Dalton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 새로운 기법으로 전환하였다. Dalton은, 이 도시 내 혹은 인근에 입지한 대부분의 최상위 제조업체들이 존재하여, 국가의 카펫수도가 되었다(O' Sullivan, 2018).



A. 인접지역(시·군) : 강원도 이외(경기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충북 충주,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 울진)

B. 인접지역(시·군) : 강원도 이내(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태백, 삼척)

<그림 III-3b> 강원도 경계 인접지역들에서의 2019년 신생 제조업체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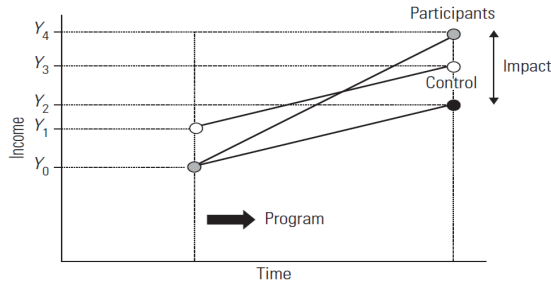
4. 수도권외의 팽창과 수도권 접근성의 개선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 변화 :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농촌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젊은 층의 타 지역 이주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노동공급의 감소 및 정주시설과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수요의 감소는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 공급을 감소시키며, 효율성 측면에서 공적 투자의 타당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물적 인프라가 낙후하여 지역 내 거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반면에, 수도권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어 국토의 불균형은 지속된다. 그럼에도, 수도권외의 팽창으로 인한 수도권 내 지대(land rent)를 비롯한 생산요소 비용의 상승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수도권 인접 비수도권 지역-이른다면, 충남의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으로의 이전(relocation)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연결하는 교통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수도권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사이익을 얻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강일-춘천 구간의 개통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으로부터의 사업체 이전을 촉진하거나 강원도 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보다 나아지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낮추고, 통근가능한 지역의 확대로 기업들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land rent) 등으로 강원도 내 해당 지역에서 신생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나며, 폐업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생산물 시장 및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 개통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로부터 후자를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집단 간 차이의 사건발생 혹은

정책시행 전후 변화를 분석하는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다. 이 분석틀의 적용에 있어 핵심은 대조군의 설정이며, 대조군 설정에 있어 기준으로는 적합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 측면에서 대조군은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적절성 측면에서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영향을 받았어야 한다. 즉, 만일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이 없었다면,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경기변동적 변화추세를 보였을 것을 가정한다. 두 번째 기준을 “적절성”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대해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III-4> 이중차분 분석틀 개념도

자료 : Khandker et al.(2010)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 회귀식은 통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y_{jt} = \alpha + \beta_1 treat_j + \beta_2 post_t + \beta_3 (treat*post)_{jt} + X_{jt}\gamma + \epsilon_{jt} \quad (1)$$

여기서, j 는 횡단면 단위, t 는 기간 단위를 나타낸다. $treat_j$ 은 실험군-즉,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post_t$ 는 분석대상 사건의 발생 혹은 정책의 시행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해당한다. $(treat*post)_{jt}$ 는 이 두 더미변수들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서, 이의 계수인 β_3 의 추정치에 의해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의 영향이 평가된다. X_{jt} 는 종속변수인 y_{jt} 에 영향을 미쳤을 분석대상 사건이나 정책 이외의 요인들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한다. ϵ_{jt} 는 통상의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서울양양선은 구간별로 개통시기가 상이하다. 강일~춘천 구간은 2009년 7월에 개통되었고,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으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 6월에 개통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로서, 비록 개별 사업체의 창업 연도와 월이 자료에 포함되지만 실제 창업한 월과 행정상 신고한 창업 월 간에 불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의 고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월별 고용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여부와 고용의 변화를 연도 단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실증분석 대상은 2009년에 개통된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으로 한정하고, 개통 전의 시점으로는 2007년과 2008년으로 정의하며 개통 후의 시점으로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정의한다. 분석기간을 개통 전후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비록 관측수의 증가와 같은 장점이 있으나 해당 고속도로로 개통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실험군이나 대조군 한 쪽만이 영향을 받는 경우의 통제가 어렵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석기간을 개통 바로 이전 연도인 2008년과 개통 직후인 2010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창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2007년과 2011년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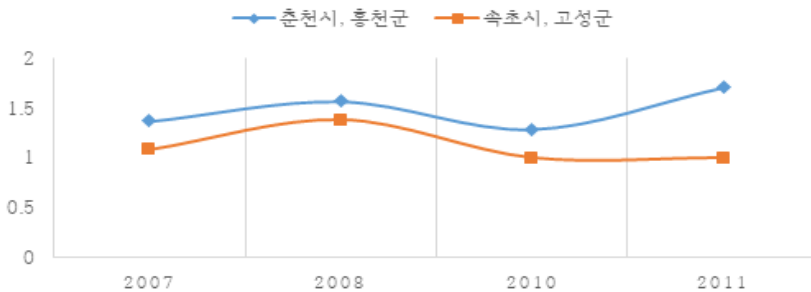


<그림 III-5>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에 따른 춘천시와 홍천군 내 개별 읍면동에서의 신생 제조업체수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1)의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춘천시와 홍천군의 경우 이 구간의 개통으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나 속초시와 고성군은 그렇지 않아 전자를 실험군으로 정의하고 후자를 대조군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식 (1)에서 $treat_j$ 은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은 “1”의 값을 갖고, 속초시와 고성군 내 읍면동은 “0”의 값을 가지며, 종속변수인 y_{jt} 는 읍면동 j 에서 연도 t 에 창업한 제조업체수로 정의된다. 즉, 제조업에 한정하여 두 지역 간 개별 읍면동 단위 신생 사업체수에서의 차이가 고속도로 개통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한다. 이 경우, 일부 읍면동에서는 창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생 사업체 수가 “0”의 값을 가지며 이러한 좌측-단절(left-censoring)을 고려해 토빗(tobit)모형으로 식 (1)을 추정한다.

회귀분석의 결과 이전에, 읍면동 단위 신생 제조업체수의 지역별 평균을 그림을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2011년의 기간에 춘천시와 홍천군이 속초시와 고성군에 비해 줄곧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2010년의 기간에는 두 지역 간 차이가 대체로 유지되나 속초시와 고성군에서는 2011년에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춘천시와 홍천군에서는 증가하였음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그림 III-6>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수의 2009년 전후 지역 간 차이

하지만, 그림을 통한 지역 간 차이의 시점 간 변화와 달리 회귀분석을 통한 창업하는 제조업체의 수에서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Ⅲ-11a는 고속도로(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 개통에 따른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제조업체수에 대한 토빗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열 (1)과 (2)는 개통 전의 시점으로 2007년과 2008년을 포함하고 개통 후의 시점으로 2010년과 2011년을 포함하는 분석결과에 해당하고, 열 (3)과 (4)는 2007년과 2011년의 시점만을 포함하는 분석결과에 해당한다. 한편, 열 (1)과 (3)은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인으로서 집적의 경제를 통제하지 않는 반면에 열 (2)와 (4)는 이를 통제한다. 모든 열에서 개별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관측이 불가능한 시간-불변 지역-고유의 제조업체 입지관련 여타의 요인들을 통제하며, 열 (1)과 (2)에서 개별 연도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개통 이전이나 개통 이후 연도 간 경기변동에 의한 제조업 창업의 변화를 통제한다.

춘천시와 홍천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에 해당하여, 그림을 통한 개별 지역의 시점별 신생 제조업체수와 일치한다. 개통 전후의 변화, 즉 고속도로 개통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춘천시와 홍천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개통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간 교차항, “춘천시와 홍천군*개통 이후”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모든 열에서 양수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다르지 않아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으로 인해 속초시와 고성군에 비해 춘천시와 홍천군에서 제조업체의 창업이 보다 활발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표 III-11a>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신생 제조업체수에 대한 토빗(tobit)모형 추정결과 : 지역 간 차이

구분	2007년과 2008년 vs. 2010년과 2011년		2007년 vs. 2011년	
	(1)	(2)	(3)	(4)
춘천시와 홍천군 (vs. 속초시와 고성군)	1.8560** (8.95)	0.7189** (3.35)	1.3258** (4.79)	0.4948 (1.47)
개통 이후	0.1250 (0.31)	0.1775 (0.38)	-0.1237 (-0.45)	0.0395 (1.59)
춘천시와 홍천군*개통 이후	0.0838 (0.29)	0.1144 (0.33)	0.4403 (0.87)	0.3828 (0.88)
지역화경제		0.0332** (8.31)		0.0586** (27.81)
도시화경제		0.0021** (3.67)		0.0007 (0.94)
상수항	-0.9823** (-4.48)	-2.3470** (-4.98)	-0.3528 (-1.57)	-1.8600** (-4.07)
고정효과				
개별 시·군	4	4	4	4
개별 연도	4	4	-	-
Pseudo R-squared	0.014	0.183	0.015	0.243
Log-L	-334.8	-277.5	-172.5	-132.6
관측수	192	192	96	96
좌측-단절	83	83	37	3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들이 개별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을 가짐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관측수는 읍면동(48개)의 수와 분석에 포함된 시점(연도)의 수 간 곱에 해당함. 일부 읍면동의 특정 연도에 신생 제조업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좌측-단절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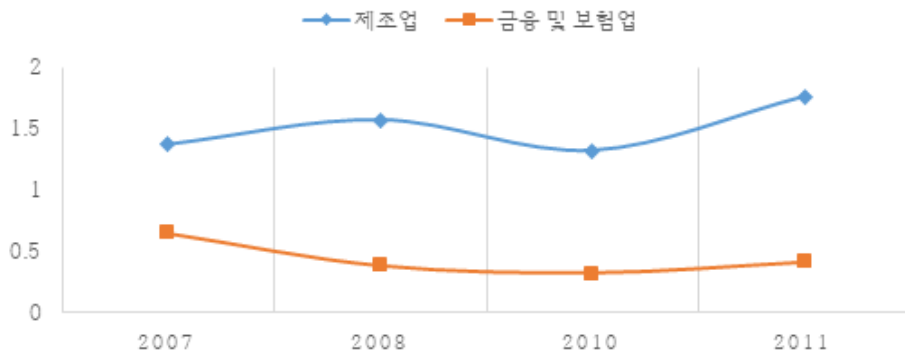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열 (2)와 (4)는 집적의 경제에 의한 제조업 창업활동의 읍면동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를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지역화경제는 해당 연도 이전에 창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읍면동별 수에 의해 정의되고, 도시화경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를 포함하는 전산업으로 정의된다. 열 (2)에서는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적의 경제가 제조업 내에 국한되지 않고 타 산업과 보완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자의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열 (4)에서는 지역화경제만이 유의한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집적의 경제를 추정하기 위한 변수는 사업체 수 혹은 고용으로 정의된다. 전자는 집적의 경제가 주로 지식의 파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노동시장의 풀링(pooling)이나 노동자와 기업 간 보다 나은 매칭(match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고용에 의해 집적의 경제를 정의하는 것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특정 읍면동에서 사업체의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개별 사업체의 고용이 결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용으로 집적의 경제를 정의하고 이를 회귀분석에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읍면동 내 사업체 수가 적은 경우라도 사업체 수의 파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분석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홍천군으로 한정하되 실험군을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대조군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즉, 원자재나 중간재 혹은 최종재의 운송과 관련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절감되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나 금융 및 보험업은 그렇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앞서의 첫 번째 방법은 춘천시와 홍천군 제조업의 경기변동적 추세가 속초시와 고성군 제조업의 그것과 같음을 전제로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춘천시와 홍천군에 한정하여 제조업의 경기변동적 추세가 금융 및 보험업의 그것과 같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산업에 한정하여 지역 간 차이를 이용하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지역에 한정하여 산업 간 차이를 이용한다.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의 적용을 위해, 식 (1)에서 $treat_j$ 은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에 대해 “1”로 정의되고, 춘천시와 홍천군 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 “0”으로 정의된다. 종속변수인 y_{jt} 는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 j 에서 연도 t 에 제조업 혹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창업한 사업체 수로 정의된다.

춘천시와 홍천군 내 개별 읍면동에서 제조업에 속하는 신생 사업체 수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신생 사업체 수 각각에 대한 연도별 평균을 비교하면, 2007~2011년 기간에 제조업의 신생 사업체 수가 금융 및 보험업의 신생 사업체 수에 비해 많았으며 그 격차는 시점

별로 상이하나 적어도 2007년과 2011년 두 시점에 있어서는 커진 것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의 시점 간 변화만을 가지고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식 (1)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그림 III-7>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의 2009년 전후 산업 간 차이

표 III-11b는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간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 차이의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 개통 전후 변화를 토빗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에 해당한다. 열 (1)과 (2)는 개통 전의 시점으로 2007년과 2008년을 포함하고 개통 후의 시점으로 2010년과 2011년을 포함한다. 반면, 열 (3)과 (4)는 개통 전후의 시점으로 각각 2007년과 2011년만을 포함한다. 열 (2)와 (4)는 집적의 경제에 의한 신생 사업체 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 내 긍정적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지역화경제 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열 (1)과 (2)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으로 춘천시와 홍천군의 제조업은 금융 및 보험업에 비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창업하여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열 (3)과 (4)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개통 직후 단기간에 한정됨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으나 분석에 포함되는 표본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

일 수도 있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으나 분석을 개통 직전 연도인 2008년과 개통 직후 연도인 2010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제조업 신생 사업체 수의 상대적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점의 문제가 아닌 표본수 감소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⁸⁾

<표 III-11b>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신생 사업체 수에 대한 토빗(tobit)모형 추정결과 : 춘천시와 홍천군 내 산업 간 차이

구분	2007년과 2008년 vs. 2010년과 2011년		2007년 vs. 2011년	
	(1)	(2)	(3)	(4)
제조업	2.7491**	0.1634	2.4712**	-0.4338
(vs. 금융 및 보험업)	(6.91)	(0.42)	(2.90)	(-0.55)
개통 이후	-0.0173	-0.0904	-0.2335	-0.3836
	(-0.08)	(-0.67)	(-0.72)	(-0.96)
제조업*개통 이후	0.2950**	0.3628**	0.6530	0.8515
	(14.78)	(4.14)	(0.69)	(0.84)
지역화경제		0.0751**		0.0798**
		(6.67)		(6.95)
상수항	-1.8198**	-1.7133**	-1.5812*	-1.3470**
	(-3.68)	(-23.54)	(-2.40)	(-70.53)
고정효과				
개별 연도	4	4	-	-
Pseudo R-squared	0.0583	0.221	0.0580	0.248
Log-L	-365.6	-302.4	-192.6	-153.8
관측수	274	274	137	137
좌측-단절	166	166	79	7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들이 개별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관측수는 읍면동(48개)의 수와 분석에 포함된 시점(연도)의 수 간 곱에 해당함. 일부 읍면동의 특정 연도에 신생 제조업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좌측-단절이 발생함

8) 만일 4년의 분석기간에 춘천시와 홍천군 내 읍면동별로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매년 존재한다면, 열 (1)과 (2)에서 관측수는 8(= 5개 연도*2개 산업)의 배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읍면동의 경우 특정 연도에 제조업 혹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관측수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춘천시 남면의 경우 2007년에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존재하나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읍면동-산업의 횡단면에서 연도 간 상이하여, 분석자료는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이 된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강원도 내 제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은 비단 제조업의 창업 증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기존 제조업체의 매출 증가와 고용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시점 간 고용의 변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사업체조사 2007년과 2011년 자료를 이용하며, 통계청의 원격접근서비스(RAS)를 통한 개별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읍면동 단위 집계자료에서와 유사하게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개통의 기존 사업체 고용변화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에 대한 집계자료 대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체 고용의 두 시점-즉, 고속도로 개통 전후에 해당하는 두 연도, 2007년과 2011년-에 걸친 변화에 대해 전산업 대상 지역 간 차이-즉, 춘천시와 홍천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속초시와 고성군을 대조군으로 하는 지역 간 차이-와 춘천시와 홍천군 대상 산업 간 차이-즉, 제조업을 실험군으로 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대조군으로 하는 산업 간 차이-를 통해 분석한다. 이 경우,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 식 (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Delta e_j = \alpha + \beta_1 treat_j + \beta_2 age_j + X_j \gamma_1 + Z_j \gamma_2 + \epsilon_j \quad (1)$$

여기서, Δe_j 는 사업체 j 의 2011년 고용에서 2007년 고용을 뺀 수치로 고속도로 개통 전후 고용의 변화에 해당한다. $treat_j$ 은 실험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역 간 차이로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추정하는 경우 춘천시와 홍천군 내 사업체는 “1”의 값을 갖고 속초시와 고성군 내 사업체는 “0”의 값을 갖는다. 반면, 춘천시와 홍천군에 한정하여 산업 간 차이로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추정하는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1”의 값을 갖고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0”의 값을 갖는다. age_j 는 2007년 기준 업력을 나타내고, X_j 와 Z_j 는 각각 사업체 j 의 2007년 기준 특성-즉, 대표자의 성, 조직형태, 사업체구분-과 2011년 기준 특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에 해당한다. ϵ_{jt} 는 통상의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분석을 위한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2007년과 2011년의 두 시점

간 시·군 단위에서 입지에 변화가 없고 주력산업이 대분류 기준으로 변화가 없는 사업체들로만 한정한다. 표 Ⅲ-12는 최소자승추정법(OLS)에 의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열은 제조업에 한정하여 속초시와 고성군 대비 춘천시와 홍천군 내 기존 사업체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으로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수익이 증가하여 고용을 증가하였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열은 춘천시와 홍천군 내 사업체에 한정하여 금융 및 보험업 대비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비록 계수의 추정치는 크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은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 비해 사업체의 창업을 촉진하였으며, 속초시와 고성군에 비해 제조업 내 기존 사업체의 고용을 증가시켰다. 저출산·고령화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인력부족, 정주시설 수요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의 악순환의 가속을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인구, 자본, 경제력 등에서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과밀은 지대의 지나친 상승 등과 같은 혼잡비용이 집적의 경제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능가하게 되어, 수도권의 팽창은 비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본 분석결과는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긍정적 영향이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의 활성화, 기존 기업 고용의 증가, 혹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체의 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사업체 이전의 경우 분공장가설과 같은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Ⅲ-12>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원도 내 개별 사업체의 고용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 개별 사업체의 2011년 고용 - 2007년 고용	
	전산업 대상 지역 간 차이	춘천시와 홍천군 대상 산업 간 차이
춘천시와 홍천군 (vs. 속초시와 고성군)	1.083** (5.99)	
제조업 (vs. 금융 및 보험업)		8.681 (1.99)

구분	종속변수 : 개별 사업체의 2011년 고용 - 2007년 고용	
	전산업 대상 지역 간 차이	춘천시와 홍천군 대상 산업 간 차이
사업체 특성		
2007년 기준		
업력	0.045 (2.04)	-0.068 (-0.95)
여성 대표자	0.044 (0.44)	0.664 (2.20)
조직형태		
회사법인	0.061 (0.06)	1.064 (0.57)
회사 이외 법인	1.073 (0.59)	0.259 (0.13)
비법인 단체	0.777 (1.06)	-1.920 (-1.41)
국가·지방자치단체	2.268 (0.87)	-
사업체구분		
본사·본점	-2.769 (-0.35)	5.684 (0.61)
공장·지사(점)·영업소	-1.600 (-1.00)	2.069 (0.90)
2011년 기준		
여성 대표자	-0.107 (-1.28)	-0.711 (-2.04)
조직형태		
회사법인	2.402 (1.37)	-1.250 (-0.93)
회사 이외 법인	0.853 (0.51)	-2.596 (-0.34)
비법인 단체	-0.734 (-0.92)	-
국가·지방자치단체	2.921* (3.34)	-
사업체구분		
본사·본점	5.891+	18.015

구분	종속변수 : 개별 사업체의 2011년 고용 - 2007년 고용	
	전산업 대상 지역 간 차이	춘천시와 홍천군 대상 산업 간 차이
	(3.13)	(2.11)
공장·지사(점)·영업소	-1.906	6.866
	(-0.60)	(1.74)
상수항	-1.217*	-8.049
	(-3.20)	(-1.50)
R-squared	0.0117	0.0613
관측수	20,731	1,00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들이 개별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조직형태와 사업체구분 각각에 대한 기준은 개인 사업체와 단독 사업체임. 개별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되지 않았음

5. 강원도 내 시·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

강원도 내 시·군별 지역경제 혹은 지역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 시·군 내 사업체분포의 연도별 변화를 고찰하며, 이를 다시 창업과 지역 간 이전으로 구분하여 개별 시·군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1.1. 기업분포의 변화

1994년과 2019년 두 시점 간 강원도 내 시·군별 기업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의 지역 간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1994~2019년 자료를 이용해 강원도 내 시·군별로 사업체 수의 변화,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의 변화, 회사법인 비중의 변화, 본사 혹은 본점 비중의 변화, 제조업체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다.

춘천시는 사업체 수가 13,808개에서 23,430개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2%에서 7.3%로 3.1%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1%에서 9.8%로 6.7%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8%로 변화가 없다. 반면, 공장, 지사나 지점, 그리고 영업소의 비중은 3.7%에서 5.2%로 1.5%p 상승하였다. 회사법인 비중의 상승은 개인사업체 비중의 지속적 하락-91.4%에서 81.4%로 하락-과 대조를 이룬다. 평균 업력은 2019년 기준 9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3%에서 2010년에 4.5%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하여 2019년에 5.5%를 나타낸다.

<표 III-13a>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춘천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3,808	17,128	18,247	19,192	21,256	23,430
평균 고용(명)	4	3	4	4	4	5
여성 대표자 비중(%)		40.2	42.0	42.4	42.8	43.6
평균 업력(년)		6	6	8	8	9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1.4	90.1	87.9	86.6	84.3	81.4
회사법인	3.1	3.5	5.0	5.7	7.8	9.8
회사 이외의 법인	4.7	2.6	2.8	2.5	2.9	3.4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8	3.7	4.4	5.1	5.0	5.3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5.5	96.9	97.3	95.1	94.9	94.0
본사·본점	0.8	0.3	0.4	0.7	0.7	0.8
공장·지새점·영업소	3.7	2.8	2.2	4.2	4.4	5.2
제조업 비중(%)	6.3	5.1	5.0	4.5	5.1	5.5

원주시는 사업체 수가 14,146개에서 30,729개로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6%에서 7.2%로 2.6%p 상승하였다. 원주시의 사업체 수 증가율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들 가운데 양양군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4.4%에서 12.3%로 7.9%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4%에서 1.1%로 0.7%p 상승하였다. 단독 사업체의 비중은 90.4%에서 80.8%로 하락하였으며, 회사 이외 법인의 비중 역시 4.1%에서 2.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은 4.2%에서 2005년 3.3%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9년에 6.1%를 나타낸다. 제조업체 비중은 7.7%에서 6.6%로 1.1%p 하락하였다.

<표 III-13b>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원주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4,146	18,604	21,864	22,759	27,338	30,729
평균 고용(명)	4	4	4	4	4	5
여성 대표자 비중(%)		39.8	40.5	41.8	41.1	41.4
평균 업력(년)		5	6	7	8	8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0.4	89.9	87.6	85.2	82.3	80.8
회사법인	4.4	4.4	6.1	7.8	10.9	12.3
회사 이외의 법인	4.1	2.8	1.9	2.0	2.2	2.4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1	2.9	4.4	5.0	4.5	4.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5.3	95.9	96.3	94.7	93.2	92.9
본사·본점	0.4	0.5	0.4	0.8	0.9	1.1
공장·지사(점)·영업소	4.2	3.6	3.3	4.6	5.9	6.1
제조업 비중(%)	7.7	5.9	6.0	5.5	6.3	6.6

강릉시는 사업체 수가 12,197개에서 21,347개로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1%에서 6.3%로 2.2%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2%에서 8.8%로 5.6%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8%에서 0.2%로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0.8%를 회복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7.5%에서 6.0%로 1.5%p 하락하였다.

<표 III-13c>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강릉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2,197	15,991	17,400	17,977	19,419	21,347
평균 고용(명)	4	3	3	3	4	4
여성 대표자 비중(%)		42.4	43.8	45.2	44.8	44.9
평균 업력(년)		6	6	8	9	9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3.0	92.5	89.2	87.8	85.2	84.8
회사법인	3.2	3.4	5.8	6.3	8.2	8.8
회사 이외의 법인	2.2	2.2	1.7	1.6	1.9	2.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5	2.0	3.3	4.3	4.6	4.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5.2	97.1	96.9	95.8	95.1	94.9
본사·본점	0.8	0.2	0.3	0.6	0.7	0.8
공장·지사(점)·영업소	4.0	2.7	2.8	3.6	4.2	4.3
제조업 비중(%)	7.5	5.6	5.9	5.4	5.8	6.0

동해시는 사업체 수가 6,579개에서 8,159개로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6%에서 5.6%로 1.0%p 상승하였다. 강원도 내 시지역들 가운데 동해시에서 사업체 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한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2.8%에서 8.4%로 5.6%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에서 0.6%로 0.3%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9.0%에서 6.0%로 3.0%p 하락하였다.

<표 III-13d>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동해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6,579	7,450	7,839	7,713	7,761	8,159
평균 고용(명)	3	3	3	4	4	4
여성 대표자 비중(%)		46.5	47.0	47.2	47.0	47.0
평균 업력(년)		6	7	9	10	10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3.7	91.1	89.6	87.3	85.8	84.7
회사법인	2.8	4.3	4.9	6.3	7.9	8.4
회사 이외의 법인	2.3	1.7	1.4	1.9	2.1	2.5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2	2.9	4.0	4.5	4.2	4.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0	97.6	97.6	95.9	95.3	95.3
본사·본점	0.3	0.2	0.2	0.4	0.5	0.6
공장·지사(점)·영업소	2.7	2.2	2.2	3.7	4.1	4.1
제조업 비중(%)	9.0	6.4	6.0	5.5	5.6	6.0

태백시는 사업체 수가 3,812개에서 4,697개로 연평균 0.8%의 증가율로 강원도 내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3.5%에서 5.6%로 2.1%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9%에서 7.8%로 5.9%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에서 0.9%로 0.8%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6%에서 4.9%로 1.7%p 하락하였다.

<표 III-13e>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태백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812	4,239	4,006	4,062	4,302	4,697
평균 고용(명)	3	3	4	3	4	4
여성 대표자 비중(%)		46.9	47.1	47.8	45.2	45.0
평균 업력(년)		7	8	10	11	12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2.5	91.0	87.4	86.3	82.8	79.1
회사법인	1.9	2.7	4.0	5.2	7.0	7.8
회사 이외의 법인	4.9	3.4	2.7	2.7	3.5	4.9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7	2.9	5.9	5.8	6.7	8.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1	98.1	98.0	95.7	94.5	93.5
본사·본점	0.1	0.2	0.2	0.6	0.8	0.9
공장·지사(점)·영업소	1.8	1.8	1.8	3.7	4.7	5.6
제조업 비중(%)	6.6	5.6	5.8	5.4	4.6	4.9

속초시는 사업체 수가 5,547개에서 9,068개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0%에서 4.9%로 0.9%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2.6%에서 6.5%로 3.9%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4%에서 0.5%로 0.1%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7.2%에서 4.6%로 2.6%p 하락하였다. 이러한 제조업체 비중의 감소폭은 동해시 다음으로 크다.

<표 III-13f>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속초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5,547	7,582	7,493	7,253	8,077	9,068
평균 고용(명)	3	3	3	3	3	4
여성 대표자 비중(%)		40.4	43.4	45.1	45.4	45.1
평균 업력(년)		5	6	8	9	9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4.9	93.3	91.4	90.5	89.0	87.0
회사법인	2.6	2.4	3.7	3.9	5.1	6.5
회사 이외의 법인	2.0	2.4	1.8	1.3	1.7	1.9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6	1.8	3.1	4.3	4.2	4.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3	97.6	97.1	96.7	96.1	95.7
본사·본점	0.4	0.1	0.2	0.3	0.4	0.5
공장·지사(점)·영업소	3.3	2.3	2.7	3.0	3.5	3.8
제조업 비중(%)	7.2	4.9	4.1	3.9	4.2	4.6

삼척시는 사업체 수가 4,970개에서 6,838개로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2%에서 6.6%로 2.4%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2.3%에서 9.2%로 6.9%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에서 0.7%로 0.6%p 상승하였다. 공장, 지사나 지점, 그리고 영업소의 비중은 2.4%에서 2005년에 1.7%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9년에 4.3%를 나타낸다. 제조업체 비중은 7.3%에서 5.4%로 1.9%p 하락하였다.

<표 III-13g>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삼척시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4,970	5,552	5,270	5,376	6,283	6,838
평균 고용(명)	4	3	3	4	4	4
여성 대표자 비중(%)		48.4	49.8	50.4	48.8	47.7
평균 업력(년)		8	9	11	11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0.6	90.9	88.6	86.6	83.0	81.3
회사법인	2.3	2.9	4.9	6.1	8.0	9.2
회사 이외의 법인	6.1	3.3	1.6	1.4	2.4	3.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0	2.9	5.0	5.9	6.5	6.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5	97.7	98.0	97.0	95.7	95.0
본사·본점	0.1	0.2	0.3	0.6	0.7	0.7
공장·지사(점)·영업소	2.4	2.1	1.7	2.4	3.7	4.3
제조업 비중(%)	7.3	6.0	5.4	5.1	5.0	5.4

홍천군은 사업체 수가 4,321개에서 6,488개로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3.9%에서 6.2%로 2.3%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0%에서 8.1%로 5.1%p 상승한 반면에, 회사 이외 법인의 비중은 9.2%에서 3.1%로 크게 하락하였다.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7%에서 0.6%로 0.1%p 하락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9%로 변화가 없다.

<표 III-13h>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홍천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4,321	4,983	5,094	4,900	6,049	6,488
평균 고용(명)	3	3	3	4	4	4
여성 대표자 비중(%)		38.7	41.4	43.3	42.3	42.9
평균 업력(년)		8	9	10	10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6.1	86.9	87.8	85.2	83.9	82.3
회사법인	3.0	2.1	3.4	5.2	6.9	8.1
회사 이외의 법인	9.2	5.9	1.9	1.8	2.3	3.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7	5.1	7.0	7.9	6.9	6.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0	98.3	98.1	96.9	96.6	95.9
본사·본점	0.7	0.1	0.4	0.5	0.5	0.6
공장·지사(점)·영업소	2.3	1.6	1.5	2.6	2.9	3.6
제조업 비중(%)	6.9	6.1	6.1	5.6	6.0	6.9

횡성군은 사업체 수가 2,503개에서 4,230개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6%에서 5.8%로 1.2%p 상승하였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군지역들 가운데 가장 높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3%에서 10.6%로 7.3%p 상승하였으며, 회사 이외 법인의 비중 역시 하락하였다.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4%에서 1.2%로 0.8%p 상승하였으며, 이는 고성군 다음으로 큰 폭의 상승에 해당한다. 제조업체 비중은 9.9%에서 9.5%로 0.4%p 하락하였다.

<표 III-13i>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횡성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503	3,016	3,056	3,149	3,818	4,230
평균 고용(명)	3	3	3	3	4	4
여성 대표자 비중(%)		39.4	39.7	40.3	41.3	41.2
평균 업력(년)		9	10	11	11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5.2	87.4	84.8	85.0	79.2	77.6
회사법인	3.3	3.5	5.2	5.1	9.1	10.6
회사 이외의 법인	8.8	7.0	2.8	3.0	4.4	5.3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2.7	2.1	7.3	7.0	7.3	6.6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4	96.9	97.3	96.5	95.6	93.5
본사·본점	0.4	0.8	0.4	0.4	0.7	1.2
공장·지사(점)·영업소	2.2	2.3	2.3	3.1	3.6	5.4
제조업 비중(%)	9.9	8.4	8.7	7.5	8.5	9.5

영월군은 사업체 수가 2,943개에서 3,956개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1%에서 6.4%로 2.3%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2.6%에서 8.4%로 5.8%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에서 0.8%로 0.5%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2%에서 7.0%로 0.8%p 상승하였으며,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영월군, 양구군(6.0%에서 6.9%로 0.9%p 상승), 철원군(6.3%에서 6.5%로 0.2%p 상승)만이 상승하였다.

<표 III-13j>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영월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943	3,350	3,194	3,266	3,662	3,956
평균 고용(명)	3	3	3	4	4	4
여성 대표자 비중(%)		39.9	40.9	43.2	42.4	42.5
평균 업력(년)		10	10	12	12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6.5	86.5	85.0	81.7	79.4	78.3
회사법인	2.6	2.9	3.7	5.9	7.6	8.4
회사 이외의 법인	9.4	4.5	3.2	1.9	3.3	4.6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5	6.0	8.1	10.4	9.6	8.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9	97.3	98.4	96.8	95.5	94.6
본사·본점	0.3	0.0	0.2	0.6	0.6	0.8
공장·지사(점)·영업소	2.8	2.6	1.4	2.6	3.9	4.6
제조업 비중(%)	6.2	6.2	5.8	5.2	5.7	7.0

평창군은 사업체 수가 2,862개에서 4,728개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0%에서 4.7%로 0.7%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2%에서 8.4%로 5.2%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에서 1.1%로 0.9%p 하락하였다. 이러한 본사 혹은 본점 비중은 하락폭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크다. 제조업체 비중은 5.9%에서 5.3%로 0.6%p 하락하였다.

<표 III-13k>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평창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862	3,542	3,960	4,027	4,492	4,728
평균 고용(명)	3	3	3	4	4	4
여성 대표자 비중(%)		39.9	39.9	42.7	42.8	42.8
평균 업력(년)		8	8	10	10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6.8	87.7	88.7	86.9	83.4	81.7
회사법인	3.2	4.6	3.8	4.9	7.1	8.4
회사 이외의 법인	6.9	4.9	2.3	1.9	3.5	4.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3.1	2.8	5.2	6.3	6.0	5.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5.3	95.3	98.5	97.0	96.0	94.8
본사·본점	2.0	0.1	0.2	0.6	1.0	1.1
공장·지사(점)·영업소	2.7	4.6	1.3	2.4	3.0	4.0
제조업 비중(%)	5.9	4.9	4.8	4.2	4.7	5.3

정선군은 사업체 수가 3,272개에서 4,110개로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5%에서 4.1%로 0.4%p 하락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8%에서 5.7%로 3.9%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8%에서 0.5%로 0.3%p 하락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5.6%에서 5.4%로 0.2%p 하락하였다.

<표 III-13>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정선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272	3,596	3,410	3,326	3,874	4,110
평균 고용(명)	4	3	4	5	5	4
여성 대표자 비중(%)		41.1	45.4	45.0	45.0	44.2
평균 업력(년)		9	10	11	11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7.0	90.0	86.2	86.1	83.0	82.6
회사법인	1.8	1.4	4.3	3.7	5.3	5.7
회사 이외의 법인	9.5	7.1	3.8	2.7	4.6	4.9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7	1.4	5.7	7.4	7.0	6.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5.0	98.7	96.9	96.7	96.4	95.6
본사·본점	0.8	0.0	0.2	0.4	0.4	0.5
공장·지사(점)·영업소	4.2	1.3	2.8	2.9	3.2	3.8
제조업 비중(%)	5.6	5.7	5.4	5.1	5.0	5.4

철원군은 사업체 수가 3,518개에서 3,914개로 연평균 0.4%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3.8%에서 4.9%로 1.1%p 상승하였다. 0.4%의 사업체 수 증가율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조직형태에서 회사 법인의 비중은 2.8%에서 7.4%로 4.6%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에서 0.4%로 0.3%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3%에서 6.5%로 0.2%p 상승하였다.

<표 III-13m>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철원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518	3,152	3,394	3,295	3,631	3,914
평균 고용(명)	3	3	3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38.7	42.6	44.0	44.5	44.2
평균 업력(년)		8	8	10	10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0.1	90.5	88.8	87.5	85.5	83.1
회사법인	2.8	2.3	3.0	4.0	5.5	7.4
회사 이외의 법인	6.7	4.3	2.1	1.5	2.5	3.3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4	2.9	6.0	7.0	6.6	6.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3	96.3	97.7	97.6	97.2	96.4
본사·본점	0.1	0.2	0.3	0.4	0.3	0.4
공장·지사(점)·영업소	2.7	3.5	2.1	2.0	2.5	3.2
제조업 비중(%)	6.3	5.0	6.0	5.5	5.6	6.5

화천군은 사업체 수가 1,771개에서 2,326개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3.1%에서 4.7%로 1.6%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6%에서 6.7%로 5.1%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4%에서 0.7%로 0.3%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3%에서 5.6%로 0.7%p 하락하였다.

<표 III-13n>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화천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771	1,935	1,754	1,680	2,061	2,326
평균 고용(명)	3	3	3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4.8	46.3	44.5	45.6	46.8
평균 업력(년)		9	11	13	12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9.4	87.8	86.0	82.9	81.2	80.2
회사법인	1.6	3.0	3.0	4.2	5.7	6.7
회사 이외의 법인	8.3	6.3	2.4	2.5	3.2	3.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7	2.9	8.5	10.4	9.9	9.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9	97.7	98.4	97.4	97.1	96.2
본사·본점	0.4	0.3	0.1	0.5	0.7	0.7
공장·지사(점)·영업소	1.7	2.0	1.5	2.1	2.3	3.1
제조업 비중(%)	6.3	5.4	5.1	4.8	5.2	5.6

양구군은 사업체 수가 1,573개에서 2,128개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2.7%에서 5.3%로 2.6%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0.6%에서 9.2%로 8.6%p 상승하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에 해당한다.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에서 0.8%로 0.7%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0%에서 6.9%로 0.9%p 상승하여, 도내 시·군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다.

<표 III-13o>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양구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573	1,739	1,638	1,624	1,849	2,128
평균 고용(명)	3	3	3	4	3	4
여성 대표자 비중(%)		42.8	44.0	46.1	45.4	46.0
평균 업력(년)		9	10	11	12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2.1	90.8	87.8	83.5	80.5	79.8
회사법인	0.6	1.6	3.0	5.8	8.7	9.2
회사 이외의 법인	6.3	4.2	3.2	2.8	3.4	4.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9	3.5	6.0	7.9	7.3	6.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8	98.0	97.9	97.0	96.4	95.1
본사·본점	0.1	0.0	0.3	0.6	0.7	0.8
공장·지사(점)·영업소	1.1	2.0	1.8	2.5	2.8	4.1
제조업 비중(%)	6.0	6.8	7.1	5.2	6.1	6.9

인제군은 사업체 수가 2,484개에서 3,492개로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3.3%에서 5.8%로 2.5%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4%에서 8.0%로 6.6%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에서 0.7%로 0.4%p 상승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7.0%에서 5.8%로 1.2%p 하락하였다.

<표 III-13p>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인제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484	2,654	2,796	2,775	3,309	3,492
평균 고용(명)	3	3	3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0.0	42.5	43.5	45.7	44.6
평균 업력(년)		8	9	11	10	1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1.1	92.3	90.8	88.3	84.4	82.7
회사법인	1.4	1.4	2.1	3.8	6.4	8.0
회사 이외의 법인	6.4	4.6	2.0	1.8	3.2	4.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1	1.7	5.1	6.0	6.0	5.3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6	98.4	98.4	97.6	97.0	96.1
본사·본점	0.3	0.1	0.2	0.5	0.7	0.7
공장·지사(점)·영업소	2.1	1.6	1.4	1.9	2.3	3.3
제조업 비중(%)	7.0	5.4	5.2	4.9	5.6	5.8

고성군은 사업체 수가 2,309개에서 3,070개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5%에서 5.7%로 1.2%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6%에서 8.2%로 6.6%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0%에서 0.9%로 0.9%p 상승하였다. 이러한 본사 혹은 본점의 상승폭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크다. 제조업체 비중은 8.7%에서 7.4%로 1.3%p 하락하였다.

<표 III-13q>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고성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309	2,530	2,647	2,505	2,701	3,070
평균 고용(명)	3	3	3	3	3	4
여성 대표자 비중(%)		36.4	42.1	44.5	44.7	45.4
평균 업력(년)		9	10	12	13	12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0.2	90.0	88.1	86.2	82.5	81.9
회사법인	1.6	2.0	4.3	4.5	7.4	8.2
회사 이외의 법인	7.4	4.5	2.4	2.0	3.1	3.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8	3.5	5.2	7.3	7.0	6.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7	98.5	98.3	97.1	95.9	95.2
본사·본점	0.0	0.1	0.3	0.6	0.8	0.9
공장·지사(점)·영업소	1.3	1.4	1.4	2.4	3.3	3.8
제조업 비중(%)	8.7	6.9	5.6	4.8	6.6	7.4

양양군은 사업체 수가 1,873개에서 4,105개로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은 4.1%에서 4.5%로 0.4%p 상승하였다.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1.9%에서 7.0%로 5.1%p 상승하였으며, 사업체유형에서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1.0%에서 0.7%로 0.3%p 하락하였다. 제조업체 비중은 6.4%에서 5.6%로 0.8%p 하락하였다.

<표 III-13r> 연도별 지역 내 사업체 분포 : 양양군

구분	1994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873	3,022	3,101	3,387	3,635	4,105
평균 고용(명)	3	3	3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38.3	42.4	43.1	43.2	41.8
평균 업력(년)		8	8	10	11	10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88.8	91.0	88.3	87.0	85.9	83.1
회사법인	1.9	2.2	4.0	4.6	5.0	7.0
회사 이외의 법인	8.7	4.8	2.1	1.9	2.7	3.4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6	2.1	5.5	6.6	6.3	6.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0	97.3	97.6	97.0	96.7	95.6
본사·본점	1.0	0.1	0.3	0.5	0.4	0.7
공장·지사(점)·영업소	3.0	2.6	2.1	2.5	2.8	3.7
제조업 비중(%)	6.4	6.9	6.2	5.5	5.6	5.6

이상의 시·군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시·군에서 사업체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1994년 기준 시·군 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가 입지해 있던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 수 증가율을 나타내어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적으로, 1994년에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원주시의 경우 강원도 전체 사업체 수에서 지역의 비중이 15.6%였으나 2019년에는 20.9%로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1994년 기준 사업체 수가 가장 적었던 양구군의 경우 해당 비중이 1.7%에서 2019년에 1.4%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절대적 수준의 증가는 집적의 경제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상대적 수준의 변화는 지역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고용이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비중은 춘천시에서 4.2%에서 7.3%로 3.1%p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 역시 원주시(2.6%p)와 강릉시(2.2%p)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선군의 경우 해당 비중이 4.5%에서 4.1%로 유일하게 하락하였으며, 양구군(2.6%p 상승), 인제군(2.5%p 상승), 영월군(2.3%p 상승), 홍천군(2.3%p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들에서는 2%p 미만의 상승을 나타낸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서 상승하였으며, 속초시(3.9%p 상승), 정선군(3.9%p 상승), 철원군(4.6%p 상승)을 제외하면 상승폭도 5.0%p 이상을 기록한다. 본사나 본점의 비중은 1.0%p 이하의 상승을 나타내거나 평창군(0.9%p 하락), 정선군, 양양군, 홍천군에서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비중은 양구군(0.9%p 상승), 영월군(0.8%p 상승), 철원군, 홍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 하락하여, 강원도에서 제조업 기반은 과거에서부터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창업

2000~2019년의 기간에서 연도별로 도내 시·군에서의 창업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시·군별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2,274~3,016개로, 이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에서 대표자가 여성이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2.9%~8.6%에 해당한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0.4%에 불과하며, 제조업 비중은 1.2%~2.6%를 나타낸다.

<표 III-14a>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춘천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839	2,274	2,805	2,876	3,016
평균 고용(명)	3	3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6.4	50.8	49.5	46.8	48.8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4.3	94.5	92.6	90.1	85.9
회사법인	3.8	2.9	5.0	7.1	8.6
회사 이외의 법인	0.5	1.1	0.7	1.6	1.5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3	1.6	1.7	1.1	3.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2	98.4	96.4	96.0	96.1
본사·본점	0.3	0.2	0.3	0.1	0.4
공장·지사(점)·영업소	2.5	1.5	3.3	3.8	3.5
제조업 비중(%)	2.6	1.8	1.2	2.5	2.6

원주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3,291~4,616개로, 이 가운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3.9%~9.5%에 해당하며, 2005년 이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1%~0.5%로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비중은 1.8%~3.8%로 2000년(3.4%)과 2019년(3.8%)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II-14b>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원주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329	3,291	3,462	4,142	4,616
평균 고용(명)	3	3	2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5.2	47.6	49.7	47.9	46.0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3.4	93.6	92.3	88.6	87.4
회사법인	4.8	3.9	4.8	9.0	9.5
회사 이외의 법인	0.8	0.8	0.5	0.7	1.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0	1.8	2.3	1.7	2.2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1	98.0	97.3	94.8	96.4
본사·본점	0.5	0.2	0.1	0.3	0.4
공장·지사(점)·영업소	3.5	1.8	2.5	4.9	3.2
제조업 비중(%)	3.4	2.9	1.8	2.6	3.8

강릉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2,085~2,875개로, 이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2005년, 2010년, 2015년에 50%를 상회하였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3.7%~6.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를 넘지 못하였으며, 제조업 비중은 2.0%~2.9%를 나타낸다.

<표 III-14c>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강릉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472	2,085	2,227	2,234	2,875
평균 고용(명)	3	3	2	2	3
여성 대표자 비중(%)	46.8	50.6	50.4	51.1	48.3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4.4	94.1	94.0	90.1	90.8
회사법인	3.7	4.0	4.2	6.7	6.5
회사 이외의 법인	0.5	0.6	0.2	1.4	0.8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4	1.2	1.6	1.7	1.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0	98.0	97.4	95.7	97.4
본사·본점	0.1	0.0	0.1	0.3	0.3
공장·지사(점)·영업소	2.8	2.0	2.5	4.1	2.3
제조업 비중(%)	2.9	2.3	2.0	2.5	2.4

동해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에 1,075개에서 2010년 803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 932개에 해당한다. 모든 연도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며, 조직형태에서 회사법인의 비중은 3.1%~8.2%의 범위를 나타내며, 200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4d>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동해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075	982	803	924	932
평균 고용(명)	3	2	2	3	3
여성 대표자 비중(%)	53.8	55.3	50.8	57.4	51.3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3.5	94.5	93.3	90.0	88.3
회사법인	4.6	3.1	5.2	6.5	8.2
회사 이외의 법인	0.6	0.3	0.4	1.9	0.8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4	2.1	1.1	1.5	2.8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4	99.1	97.0	95.6	97.9
본사·본점	0.3	0.0	0.2	0.1	0.2
공장·지사(점)·영업소	2.3	0.9	2.7	4.3	1.9
제조업 비중(%)	2.6	3.3	3.1	2.3	2.6

태백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419~500개로, 이 가운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2010년에 56.8%로 높았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1.3%~7.7%의 범위를 나타내나 시점별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00년에만 0.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에는 0.2%를 넘지 못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1.5%~3.6%를 나타낸다.

<표 III-14e>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태백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500	478	419	456	443
평균 고용(명)	3	2	2	2	2
여성 대표자 비중(%)	52.0	56.3	56.8	50.4	51.2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4.8	96.0	90.9	87.3	81.5
회사법인	3.4	1.3	6.2	4.2	7.7
회사 이외의 법인	1.0	0.4	0.5	3.1	4.3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8	2.3	2.4	5.5	6.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8	100.0	96.7	96.1	95.7
본사·본점	0.6	0.0	0.2	0.2	0.2
공장·지사(점)·영업소	1.6	0.0	3.1	3.7	4.1
제조업 비중(%)	3.6	1.7	2.6	1.5	2.7

속초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883~1,336개로, 이 가운데 회사법인의 비중은 2000년 1.8%에서 2019년 5.8%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한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 이하를 나타내며, 제조업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0년 1.0%까지 하락한 이후에 2019년 3.2%로 상승한다.

<표 III-14f>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속초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336	931	883	1,040	1,212
평균 고용(명)	3	2	3	2	2
여성 대표자 비중(%)	46.6	51.6	55.4	51.2	49.9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7.3	95.6	94.7	92.7	90.8
회사법인	1.8	2.4	2.3	4.1	5.8
회사 이외의 법인	0.5	0.6	1.0	1.5	0.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4	1.4	2.0	1.6	2.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4	98.7	98.0	96.5	97.6
본사·본점	0.1	0.0	0.3	0.3	0.2
공장·지사(점)·영업소	1.6	1.3	1.7	3.2	2.1
제조업 비중(%)	1.9	1.6	1.0	2.3	3.2

삼척시는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 603개에서 2005년 472개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721개에 해당한다. 2005년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57.6%로 높았으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3.0%~8.0%에 해당한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 이하를 나타내며,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은 2015년에 5.8%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은 1.5%~2.3%를 나타낸다.

<표 III-14g>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삼척시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603	472	548	689	721
평균 고용(명)	3	2	3	3	2
여성 대표자 비중(%)	47.8	57.6	52.6	52.1	53.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2.7	95.6	94.2	85.9	86.4
회사법인	5.1	3.0	4.2	7.7	8.0
회사 이외의 법인	0.0	0.4	0.0	2.6	1.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2.2	1.1	1.6	3.8	3.9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0	99.4	98.4	94.2	97.2
본사·본점	0.2	0.0	0.2	0.0	0.3
공장·지사(점)·영업소	2.8	0.6	1.5	5.8	2.5
제조업 비중(%)	2.3	2.1	1.5	1.5	1.9

홍천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 356개에서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706개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2010년(52.3%)에 한하여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법인의 비중은 2000년 1.4%에서 2019년 8.9%로 매년 상승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2%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제조업 비중은 2.5%~3.7%의 범위를 나타낸다.

<표 III-14h>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홍천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56	486	459	679	706
평균 고용(명)	3	2	2	2	2
여성 대표자 비중(%)	43.0	49.8	52.3	48.0	48.0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7.2	94.9	93.7	90.4	87.7
회사법인	1.4	3.3	4.4	5.7	8.9
회사 이외의 법인	0.8	0.0	0.2	1.6	0.8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6	1.9	1.7	2.2	2.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6	99.0	98.9	97.3	97.9
본사·본점	0.0	0.2	0.0	0.1	0.0
공장·지사(점)·영업소	1.4	0.8	1.1	2.5	2.1
제조업 비중(%)	2.5	2.5	2.6	2.5	3.7

횡성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 246개에서 2019년 439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2005년 이래로 50%를 넘지 못하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2005년에 1.4%로 가장 낮았다가 2019년에 1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줄곧 0.2% 이하에 해당하다가 2019년에 0.5%를 나타낸다. 제조업 비중은 3.0%~8.4%의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낸다.

<표 III-14i>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횡성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46	276	336	431	439
평균 고용(명)	3	2	2	2	3
여성 대표자 비중(%)	50.0	48.2	48.5	46.4	47.6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2.7	96.7	93.2	86.3	80.9
회사법인	6.1	1.4	3.3	8.4	12.8
회사 이외의 법인	1.2	1.1	0.6	2.3	3.0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0.7	3.0	3.0	3.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3	99.3	98.8	97.0	93.2
본사·본점	0.0	0.0	0.0	0.2	0.5
공장·지사(점)·영업소	3.7	0.7	1.2	2.8	6.4
제조업 비중(%)	5.3	3.6	3.0	5.8	8.4

영월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277~372개로, 이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절반을 밑돌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1.1%~8.2%의 범위를 나타낸다. 2000년과 2005년에는 회사법인의 비중이 각각 2.3%와 1.1%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 7.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8.1%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10년에는 0.4%에 해당하고 다른 연도에는 거의 본사 혹은 본점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창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공장, 지사나 지점, 그리고 영업소의 비중은 2015년에 7.9%로 높았으나 그 외의 시점에는 3.0% 이하의 수준에 해당한다. 제조업 비중은 2015년까지 2.2% 이하의 수준을 보이거나 2019년에는 5.9%로 상승하였다.

<표 III-14>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영월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06	277	243	341	372
평균 고용(명)	4	2	3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4.8	48.0	46.1	47.8	41.7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5.8	95.3	90.5	83.9	82.8
회사법인	2.3	1.1	7.0	8.2	8.1
회사 이외의 법인	0.7	1.4	0.0	4.7	3.5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3	2.2	2.5	3.2	5.6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9.0	99.3	97.1	92.1	97.0
본사·본점	0.0	0.0	0.4	0.0	0.0
공장·지사(점)·영업소	1.0	0.7	2.5	7.9	3.0
제조업 비중(%)	2.0	2.2	2.1	2.1	5.9

평창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381~482개로, 평균 고용은 2~3명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44.5%~47.7%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2005년에 최저인 1.9%에서 2019년에 9.4%까지 상승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며,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은 2005년 0.5%에서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에 4.4%에 해당한다. 제조업에 속하는 신생 사업체의 비중은 1.7%~2.4%를 나타낸다.

<표 III-14k>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평창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407	421	381	482	481
평균 고용(명)	2	2	3	2	3
여성 대표자 비중(%)	44.5	45.1	45.7	47.7	45.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6.6	96.4	94.5	88.6	86.1
회사법인	2.7	1.9	2.6	7.3	9.4
회사 이외의 법인	0.2	1.0	1.3	1.7	1.2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5	0.7	1.6	2.5	3.3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3	99.5	98.2	96.5	95.4
본사·본점	0.0	0.0	0.3	0.2	0.2
공장·지사(점)·영업소	1.7	0.5	1.6	3.3	4.4
제조업 비중(%)	2.0	2.4	1.8	2.1	1.7

정선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250~398개로, 2000년의 경우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3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 고용은 2000년에 5명이었으나 이후에는 3명 이하에 해당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1.5%~5.3%의 범위를 나타내며,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19년에만 0.3%에 해당할 뿐 이외의 연도에서는 본사 혹은 본점의 경우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비중은 1.1%~2.3%를 나타낸다.

<표 III-14>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정선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50	342	269	395	398
평균 고용(명)	5	2	2	3	2
여성 대표자 비중(%)	39.2	55.0	54.3	49.6	47.5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7.2	95.0	96.7	87.3	87.9
회사법인	1.6	2.3	1.5	4.3	5.3
회사 이외의 법인	1.2	1.5	0.4	3.5	3.3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1.2	1.5	4.8	3.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9.2	97.1	99.6	96.7	97.5
본사·본점	0.0	0.0	0.0	0.0	0.3
공장·지사(점)·영업소	0.8	2.9	0.4	3.3	2.3
제조업 비중(%)	2.0	1.5	1.1	2.0	2.3

철원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357~458개로, 연도별로 전년 대비 등락을 반복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45.9%~55.6%의 범위를 나타내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1.1%~5.6%에 해당한다. 비법인단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대체로 점차 상승하여 2019년에는 3.5%를 나타냈으며, 이는 개인사업체 비중이 95.5%에서 89.8%로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00년에 0.6%에서 이후 0.0%에 머물다가 2019년에 0.3%로 다소 상승하였다. 공장, 지사나 지점, 그리고 영업소의 비중은 3.1%에서 1.1%로 2.0%p 하락하였으며, 단독 사업체 비중은 96.4%에서 98.7%로 상승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1.4%~5.1%를 나타낸다.

<표 III-14m>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철원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57	458	369	394	373
평균 고용(명)	3	2	2	2	2
여성 대표자 비중(%)	45.9	48.7	49.1	55.6	53.1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5.5	93.7	97.6	91.9	89.8
회사법인	4.2	3.5	1.1	4.3	5.6
회사 이외의 법인	0.3	0.2	0.3	1.5	1.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2.6	1.1	2.3	3.5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6.4	97.6	99.2	98.7	98.7
본사·본점	0.6	0.0	0.0	0.0	0.3
공장·지사(점)·영업소	3.1	2.4	0.8	1.3	1.1
제조업 비중(%)	3.4	2.2	1.4	2.8	5.1

화천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131~234개로, 2000년을 제외하고 여성 대표자인 경우가 절반을 상회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2.2%~5.3%의 범위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3.8%로 낮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10년에 한해 0.8%로 신생 사업체 가운데 본사 혹은 본점이 존재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2.7% 이하를 나타낸다. 화천군의 경우 연도별로 신생 사업체 수에서 등락을 보이며, 그 수가 크지 않아 사업체들의 속성에서도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표 III-14n>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화천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84	137	131	207	234
평균 고용(명)	3	2	2	3	3
여성 대표자 비중(%)	48.9	56.2	52.7	53.1	53.8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5.1	96.4	92.4	92.8	89.3
회사법인	3.8	2.2	3.8	5.3	3.8
회사 이외의 법인	1.1	1.5	1.5	1.0	2.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0.0	2.3	1.0	4.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9	99.3	97.7	98.6	98.3
본사·본점	0.0	0.0	0.8	0.0	0.0
공장·지사(점)·영업소	1.1	0.7	1.5	1.4	1.7
제조업 비중(%)	2.7	0.0	1.5	1.0	1.7

양구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160~236개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 대표자에 해당하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0.5%~8.0%에 해당하나 최근에는 6.8%로 다소 낮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10년에 한해 0.6%에 해당하며, 이외의 연도에는 본사 혹은 본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업 비중은 2.1%~4.4%를 나타낸다.

<표 III-14o>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양구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160	182	164	224	236
평균 고용(명)	2	2	2	2	3
여성 대표자 비중(%)	58.1	52.2	53.7	55.4	54.7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8.1	97.3	92.1	89.3	89.8
회사법인	0.6	0.5	3.0	8.0	6.8
회사 이외의 법인	1.3	1.1	3.0	1.3	1.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1.1	1.8	1.3	1.7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1	100.0	95.7	97.3	97.5
본사·본점	0.0	0.0	0.6	0.0	0.0
공장·지사(점)·영업소	1.9	0.0	3.7	2.7	2.5
제조업 비중(%)	4.4	4.4	2.4	3.6	2.1

인제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 205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377개를 나타낸다. 평균 고용은 2명에 해당하고, 여성 대표자 비중은 50% 전후를 나타낸다. 조직형태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2005년에 98.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9년에 88.6%로 하락하였으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0.0%~6.9%에 해당한다. 2000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개인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조직형태에서 그 비중이 상승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3% 이하에 불과하며, 단독 사업체의 비중이 2000년에 97.6%이며, 이후에는 98.1% 이상을 나타낸다. 제조업 비중은 1.6%~4.4%의 범위를 나타내며, 2015년에 4.4%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 반면에 2019년에는 다시 2.9%로 낮아졌다.

<표 III-14p>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인제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05	245	251	367	377
평균 고용(명)	2	2	2	2	2
여성 대표자 비중(%)	50.7	47.8	46.6	52.6	48.0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7.6	98.8	96.8	91.3	88.6
회사법인	2.0	0.0	2.4	4.1	6.9
회사 이외의 법인	0.5	0.4	0.0	1.9	2.1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0	0.8	0.8	2.7	2.4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7.6	100.0	99.2	98.1	98.7
본사·본점	1.0	0.0	0.0	0.3	0.0
공장·지사(점)·영업소	1.5	0.0	0.8	1.6	1.3
제조업 비중(%)	2.4	2.0	1.6	4.4	2.9

고성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2000년 270개에서 2010년 182개로 하락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 307개에 해당한다. 2015년에만 여성 대표자 비중이 52.5%로 절반을 넘었고 다른 연도에는 절반 이하로 나타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2.2%~9.4%에 해당하며, 2010년까지는 2.0%대였으나 그 이후에 크게 상승하였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2000년에 0.4%였으나 이후에는 본사나 본점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1.3%를 나타낸다. 제조업 비중은 1.5%~5.0%의 범위를 나타낸다.

<표 III-14q>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고성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270	195	182	238	307
평균 고용(명)	2	3	2	3	2
여성 대표자 비중(%)	44.8	47.7	46.7	52.5	45.3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5.2	93.8	96.7	89.5	87.0
회사법인	2.2	2.6	2.2	7.1	9.4
회사 이외의 법인	1.5	2.6	0.5	0.8	1.3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1.1	1.0	0.5	2.5	2.3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5	99.0	99.5	97.5	95.1
본사·본점	0.4	0.0	0.0	0.0	1.3
공장·지사(점)·영업소	1.1	1.0	0.5	2.5	3.6
제조업 비중(%)	1.9	1.5	2.2	5.0	3.6

양양군은 신생 사업체 수가 연간 248~424개로, 2000년 363개에서 2010년 248개 까지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424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41.3%~50.2%로 최근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형태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2000년 97.0%에서 2019년 82.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2.5%~9.4%에 해당한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0.4% 이하에 해당하며, 공장, 지사나 지점, 그리고 영업소의 비중은 2000년에 1.1%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의 경우 3.5%로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2000년에 5.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5년에 2.0%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에 3.8%로 다소 상승하였다.

<표 III-14r> 연도별 지역 내 신생 사업체 분포 : 양양군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사업체 수	363	307	248	342	424
평균 고용(명)	2	2	2	2	2
여성 대표자 비중(%)	47.9	50.2	47.6	45.6	41.3
조직형태 비중(%)					
개인사업체	97.0	94.5	90.7	93.0	82.1
회사법인	2.5	2.6	6.5	3.5	9.4
회사 이외의 법인	0.0	1.6	0.8	1.5	1.7
비법인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	0.6	1.3	2.0	2.0	6.8
사업체유형 비중(%)					
단독 사업체	98.9	98.0	96.8	98.0	96.2
본사·본점	0.0	0.0	0.4	0.3	0.2
공장·지사(점)·영업소	1.1	2.0	2.8	1.8	3.5
제조업 비중(%)	5.2	4.9	3.6	2.0	3.8

1.3. 기업의 이전

다음은 200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연도별로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도로 이전해 온 사업체들 대상 도내 시·군별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춘천시로 이전한 사업체는 112개로 이들에 의해 지역 내 창출된 고용은 1,962명에 이른다.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의 비중은 29.5%이며, 사업체 유형에서 회사법인에 속하는 비중은 57.1%에 해당한다. 제조업체의 비중은 4.5%로 높지 않으며, 업력은 평균 4년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경기와 서울로부터 이전해 온 사업체는 각각 43개와 42개에 해당하며, 서울로부터 이전한 사업체에 의해 춘천시 내 고용이 1,297명만큼 증가하였다.

<표 III-15a> 2001-2019년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전한 사업체의 도내 시·군별 분포

시·군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기준 비중(%)					고용(명)	평균 업력 (년)
		10인 이상 고용	여성 대표자	회사법인	본사/본점	제조업		
춘천시	112	29.5	19.6	57.1	12.5	4.5	1,962	4
원주시	224	33.0	19.6	47.3	12.9	10.7	6,563	8
강릉시	58	24.1	27.6	41.4	1.7	1.7	681	4
동해시	27	33.3	22.2	70.4	3.7	7.4	467	4
태백시	20	30.0	40.0	70.0	10.0	5.0	149	3
속초시	21	14.3	23.8	28.6	4.8	0.0	100	3
삼척시	18	11.1	33.3	77.8	5.6	0.0	147	6
홍천군	30	23.3	23.3	36.7	3.3	0.0	340	5
횡성군	33	48.5	18.2	60.6	21.2	15.2	602	7
영월군	14	14.3	21.4	28.6	0.0	14.3	81	5
평창군	13	23.1	7.7	53.8	15.4	7.7	89	2
정선군	7	14.3	42.9	57.1	14.3	0.0	43	3
철원군	24	12.5	50.0	41.7	0.0	4.2	111	3
화천군	5	0.0	60.0	60.0	0.0	0.0	22	1
양구군	10	30.0	20.0	60.0	0.0	0.0	61	4
인제군	12	25.0	33.3	58.3	8.3	0.0	87	2
고성군	8	25.0	25.0	87.5	12.5	0.0	68	7
양양군	10	20.0	30.0	50.0	10.0	0.0	99	3

원주시로 이전해 온 사업체의 수는 224개로 이들에 의해 창출된 고용은 6,563명으로 이전기업에 의해 강원도 전체적으로 창출된 고용 11,672명에서 56.2%를 차지한다. 이들의 평균 업력은 8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10.7%에 해당한다.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비중이 33.0%이고, 회사법인의 비중은 47.3%에 해당한다. 경기로부터 100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고 이들에 의한 고용은 1,933명인 반면에, 서울에서 이전한 44개 사업체에 의한 고용은 3,729명에 해당한다.

강릉시의 경우 58개 사업체가 이전하여 지역 내 68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1.7%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경기와 서울로부터 이전해 온 사업체는 각각 17개 사업체와 13개로 이들에 의한 고용은 각각 235명과 278명에 해당한다. 경북으로부터 6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나 이들에 의해 창출된 고용은 29명으로 고용 기준 사업체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시로 이전해 온 사업체는 27개이며, 이들에 의한 고용은 467명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70.4%가 회사법인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7.4%로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동해시 역시 경기와 서울에서 각각 7개와 6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며, 경기로부터 이전한 사업체의 고용이 322명으로 이전기업에 의한 동해시 전체 고용에서 69.0%를 차지한다.

태백시로 이전한 사업체는 20개이며, 이들은 태백시 내에서 1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의 비중은 40.0%로 상대적으로 높고, 회사법인의 비중도 70.0%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경기에서 이전해 온 사업체가 5개로 가장 많고 이들에 의한 고용은 51명이며, 4개 사업체가 회사법인에 해당한다.

속초시로 21개의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며,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14.3%), 회사법인(28.6%), 본사 혹은 본점(4.8%), 제조업(0.0%)의 비중이 시지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들에 의해 창출된 고용은 100명이고, 평균 업력은 3년에 해당한다. 서울과 경기로부터 각각 6개와 5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며, 경북과 충

남으로부터의 이전을 통해 속초시 내 41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18개 사업체가 삼척시로 이전했으며, 이들은 1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회사법인은 77.8%로 높은 편이며, 모두 비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경기로부터 5개 사업체가 이전하여 가장 많으나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북으로부터 3개 사업체가 이전하여 삼척시에서 53명을 고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천군으로 이전해 온 사업체는 30개이며, 이를 통해 340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들 가운데 23.3%가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이며, 36.7%가 회사법인에 속하고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의 비중은 23.3%로 나타난다. 경기로부터 16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며, 홍천군 내에서 2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횡성군으로 33개 사업체가 이전하여 602명의 고용을 지역 내에서 창출하였으며, 60.6%가 회사법인에 해당한다. 본사나 본점의 비중은 21.2%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15.2%로 이 두 비중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경기로부터 가장 많은 20개 사업체가 이전해 왔으며, 고용규모는 410명에 이른다.

철원군으로 24개 사업체가 이전하였으며, 이들을 통한 고용은 111명에 해당한다. 사업체 수 기준, 회사법인 비중 41.7%, 제조업 비중 4.2%, 여성 대표자 비중 50.0%,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비중 12.5% 등으로 분포한다. 가장 많은 15개 사업체가 경기로부터 이전하였고, 이들의 철원군 내 고용은 49명에 해당한다.

나머지 군지역들에 대해서는 영월군 14개 사업체와 81명 고용, 평창군 13개 사업체와 89명 고용, 인제군 12개 사업체와 87명 고용, 양양군과 양구군 각각 10개 사업체, 고성군 8개 사업체, 정선군 7개 사업체, 화천군 5개 사업체가 이전하였다.

강원도로 사업체의 이전은 주로 시지역-사업체 수 기준 74.3%, 고용 기준 86.3%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인접한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의 비중은 사업체 기준 66.3%와 고용 기준 82.2%로 사업체 수에 비해 고용의 비중이 훨씬 커, 이들의 이전이 강원도 내 고용창출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200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연도별로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들 대상 도내 시·군별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도내 시·군들 가운데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수는 원주시에서 13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춘천시 58개, 강릉시 36 등의 순이다. 군지역들 가운데에서는 영월군이 24개로 가장 많다. 사업체 이전을 통한 해당 지역 내 고용의 감소 역시 원주시에서 1,318명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감소한 고용(3,393명)에서 38.8%를 차지한다.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비중은 고성군(50.0%), 양구군(33.3%), 정선군(30.0%) 등의 순으로 높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제군으로 절반에 해당하며, 동해시(47.4%)와 태백시(46.7%) 역시 높은 편에 속한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고성군(75.0%), 정선군(70.0%), 횡성군과 양양군(6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양구군에서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춘천시 15.5%, 홍천군 11.8%, 정선군 10.0% 등의 순으로 높다. 제조업체는 네 지역-정선군(10.0%), 홍천군(5.9%), 원주시(2.2%), 춘천시(1.7%)-에서만 존재한다.

사업체 수를 기준 주요 이전 지역으로는 원주시의 경우 경기(70개), 충북(16개), 서울(16개)에 해당하며, 춘천시의 경우 서울(20개)과 경기(19개)에 해당한다. 반면에 고용을 기준으로 하면 원주시는 경기(471명), 경남(377명), 충북(90명), 서울(81명)의 순이고, 춘천시는 경북(170명), 서울(153명), 경기(141명)의 순이다. 원주시와 춘천시를 제외하면, 사업체가 이전하는 지역들 가운데 수도권-특히, 경기와 서울-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영월군의 경우 충북으로 가장 많은 12개 사업체가 이전하여 59명의 지역 내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영월군이 충북의 단양군과 제천시에 인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5b> 2000~2018년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의 도내 시·군별 분포

시·군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기준 비중(%)					고용(명)	평균 업력 (년)
		10인 이상 고용	여성 대표자	회사법인	본사/본점	제조업		
춘천시	58	19.0	19.0	50.0	15.5	1.7	576	6
원주시	139	21.6	25.9	56.8	7.9	2.2	1,318	6
강릉시	36	16.7	27.8	47.2	0.0	0.0	165	4
동해시	19	26.3	47.4	63.2	10.5	0.0	261	5
태백시	15	6.7	46.7	33.3	0.0	0.0	86	5
속초시	10	10.0	30.0	30.0	0.0	0.0	39	5
삼척시	15	6.7	40.0	53.3	0.0	0.0	76	6
홍천군	17	5.9	17.6	58.8	11.8	5.9	83	6
횡성군	15	26.7	13.3	66.7	0.0	0.0	117	4
영월군	24	25.0	29.2	37.5	0.0	0.0	144	3
평창군	14	21.4	42.9	35.7	7.1	0.0	148	6
정선군	10	30.0	40.0	70.0	10.0	10.0	62	5
철원군	12	16.7	41.7	25.0	8.3	0.0	43	4
화천군	6	0.0	33.3	16.7	0.0	0.0	12	4
양구군	6	33.3	16.7	33.3	16.7	0.0	142	7
인제군	8	12.5	50.0	50.0	0.0	0.0	32	5
고성군	4	50.0	0.0	75.0	0.0	0.0	33	3
양양군	6	16.7	0.0	66.7	0.0	0.0	56	6

2000~2019년 기간 강원도 내 시·군 간 사업체의 이전행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62개 사업체가 이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원주시에서 83개의 가장 많은 사업체가 유출되었고 이를 통한 원주시 지역고용의 감소는 726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춘천시(62개 사업체, 420명), 강릉시(56개 사업체, 300명), 속초시(46개 사업체, 240명), 동해시(44개 사업체, 290명) 등에서 많은 유출이 발생하였다. 정선군의 경우 19개 사업체가 유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8.4%가 회사법인에 해당한다.

유출지(시·군)별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이전해 간 지역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홍천군(16개 사업체), 원주시는 횡성군(33개 사업체), 강릉시는 원주시(17개 사업체), 동해시는 삼척시(21개 사업체), 태백시는 삼척시(4개 사업체), 속초시는 영양군(16개 사

업체), 삼척시는 동해시(23개 사업체), 홍천군은 춘천시(19개 사업체), 횡성군은 원주시(27개 사업체), 영월군은 원주시(8개 사업체), 평창군은 원주시와 강릉시(각 8개 사업체), 정선군은 원주시(6개 사업체), 철원군은 춘천시(2개 사업체), 화천군은 춘천시(5개 사업체), 양구군은 춘천시(8개 사업체), 인제군은 춘천시와 홍천군(각 4개 사업체), 고성군은 속초시(16개 사업체), 양양군은 속초시(16개 사업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사업체가 유출한 원주시의 경우, 고용이 10인 이상인 사업체는 13.3%,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25.3%, 조직형태가 회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39.8%, 사업체유형이 본사나 본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2%, 그리고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는 3.6%를 차지하였다. 영월군의 경우 비록 유출한 사업체의 수가 11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8.2%가 본사 혹은 본점에 해당하여 비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표 III-16a> 2000-2018년 강원도 내 시·군 간 이전한 사업체의 분포 : 유출지 기준

유출 시·군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기준 비중(%)					고용(명)	평균 업력 (년)
		10인 이상 고용	여성 대표자	회사법인	본사/본점	제조업		
춘천시	62	22.6	16.1	51.6	1.6	0.0	420	6
원주시	83	13.3	25.3	39.8	1.2	3.6	726	5
강릉시	56	16.1	19.6	48.2	0.0	0.0	300	6
동해시	44	20.5	38.6	31.8	0.0	2.3	290	6
태백시	17	29.4	23.5	58.8	0.0	0.0	113	4
속초시	46	13.0	28.3	26.1	2.2	0.0	240	5
삼척시	38	15.8	34.2	34.2	2.6	0.0	213	7
홍천군	36	19.4	30.6	41.7	0.0	0.0	210	6
횡성군	36	11.1	55.6	30.6	0.0	0.0	126	5
영월군	11	18.2	27.3	36.4	18.2	0.0	113	5
평창군	24	12.5	25.0	29.2	4.2	0.0	139	7
정선군	19	10.5	26.3	68.4	10.5	0.0	142	7
철원군	3	33.3	33.3	66.7	0.0	0.0	27	6
화천군	8	37.5	25.0	62.5	0.0	0.0	72	7
양구군	14	21.4	35.7	35.7	7.1	0.0	68	2
인제군	14	7.1	21.4	35.7	7.1	0.0	52	7
고성군	25	8.0	60.0	28.0	0.0	0.0	92	6
양양군	26	19.2	26.9	46.2	7.7	0.0	240	5

한편, 유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원주시로 가장 많은 107개의 사업체가 유입되었고 이를 통한 원주시 지역고용의 증가는 791명으로 65명의 순증가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춘천시(63개 사업체, 523명), 강릉시(61개 사업체, 483명), 속초시(43개 사업체, 305명), 동해시(42개 사업체, 184명), 삼척시(38개 사업체, 234명), 횡성군(37개 사업체, 253명), 홍천군(37개 사업체, 158명) 등에서 많은 유입이 이뤄졌다. 춘천시의 경우 유입된 63개 사업체 가운데 55.6%가 회사법인에 해당하며,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6.3%로 나타난다. 원주시로 유입된 사업체들 가운데 고용이 10인 이상인 사업체의 비중은 17.8%로 다소 낮으며, 회사법인의 비중은 39.3%,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3.7%, 제조업의 비중은 0.9%에 해당한다. 강릉시로 이전한 61개 사업체 가운데 1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갖는 경우의 비중은 26.2%였으며, 32.8%가 여성 대표자에 해당하였다. 회사법인의 비중은 37.7%로 낮은 수준이 아니었으나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은 1.6%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횡성군으로 유입된 37개 사업체 가운데 8.1%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치는 나머지 시·군에서 1.0% 미만임을 고려할 때 현저한 차이에 해당한다.

<표 III-16b> 2000~2018년 강원도 내 시·군 간 이전한 사업체의 분포 : 유입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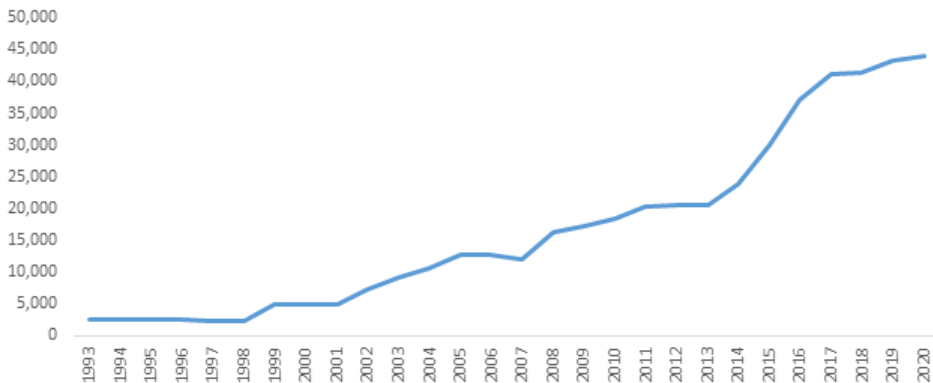
유입 시·군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기준 비중(%)					고용(명)	평균 업력 (년)
		10인 이상 고용	여성 대표자	회사법인	본사/본점	제조업		
춘천시	63	30.2	17.5	55.6	6.3	0.0	523	5
원주시	107	17.8	31.8	39.3	3.7	0.9	791	6
강릉시	61	26.2	32.8	37.7	1.6	0.0	483	6
동해시	42	14.3	31.0	21.4	0.0	0.0	184	5
태백시	10	0.0	40.0	50.0	20.0	0.0	28	5
속초시	43	18.6	44.2	27.9	2.3	0.0	305	3
삼척시	38	26.3	31.6	42.1	2.6	0.0	234	6
홍천군	37	8.1	35.1	27.0	2.7	0.0	158	6
횡성군	37	16.2	24.3	32.4	8.1	8.1	253	3
영월군	15	20.0	33.3	20.0	6.7	0.0	172	7
평창군	14	21.4	28.6	50.0	0.0	0.0	87	5
정선군	3	33.3	33.3	33.3	33.3	0.0	20	3
철원군	8	50.0	37.5	62.5	25.0	0.0	97	6
화천군	11	27.3	18.2	63.6	0.0	0.0	88	7
양구군	10	40.0	40.0	80.0	0.0	0.0	141	5
인제군	12	16.7	25.0	50.0	0.0	0.0	79	4
고성군	21	9.5	28.6	47.6	0.0	0.0	73	3
양양군	30	10.0	33.3	36.7	0.0	0.0	181	6

유입지(시·군)별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이전해 온 지역을 살펴보면, 춘천시는 홍천군(19개 사업체), 원주시는 횡성군(27개 사업체), 강릉시는 동해시(13개 사업체), 동해시는 삼척시(23개 사업체), 태백시는 원주시와 정선군(각 3개 사업체), 속초시는 고성군(16개 사업체), 삼척시는 동해시(21개 사업체), 홍천군은 춘천시(16개 사업체), 횡성군은 원주시(33개 사업체), 영월군은 원주시(9개 사업체), 평창군은 원주시(4개 사업체), 정선군은 춘천시(2개 사업체), 철원군은 화천시(2개 사업체), 화천군은 춘천시(8개 사업체), 양구군은 춘천시(4개 사업체), 인제군은 춘천시와 홍천군(각 3개 사업체), 고성군은 속초시(12개 사업체), 양양군은 속초시(16개 사업체)에 해당한다.

6. 원주시의 혁신도시와 의료기기산업

1.1. 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585천㎡의 면적에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4,928명)의 이전과 31,021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되고 있다. 단계별로는 2007~2012년의 클러스터 기반구축, 2013~2020년의 기업유치 및 네트워크구축, 2021~2030년 혁신성과확산 및 공유가 핵심 목표에 해당한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 원주시 반곡관설동(1998년까지 반곡동)의 연도별 인구를 살펴보면, 1993년 2,552명에서 줄곧 증가하여 2007년 12,044명에서 2008년 16,29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20,481명에서 2015년 30,089명, 2017년 41,195명으로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원주혁신도시 조성에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8> 원주시 반곡관설동의 연도별 인구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 1998년까지 행정구역명은 반곡동이었으나 이후 반곡관설동으로 변경됨

1.2. 의료기기산업

강원도는 원주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주시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의 수는 2007년 55개에서, 2010년 65개, 2015년 111개, 2019년 142개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93개 업체에서 234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체 수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통한 상대적 증가-즉, 해당 산업 비중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인 증가-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의 전산업 대비 비중에서 강원도는 2007년에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입지계수가 1을 겨우 넘는 정도이며 이후에도 상승을 나타내지 못한다. 강원도 대비 원주시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 입지계수는 2007~2019년의 기간에 2.90과 3.09 사이로 높은 수준이나 시계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 못한다.⁹⁾

<표 Ⅲ-17> 의료용 기기 제조업의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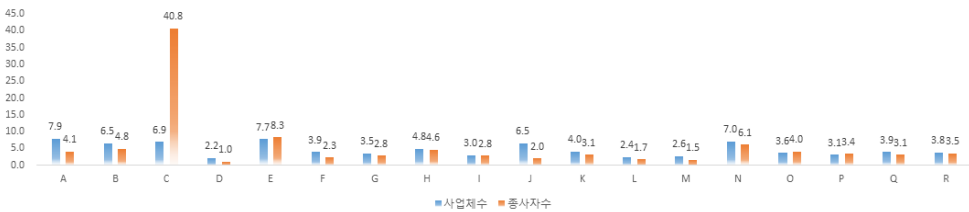
연도	전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입지계수	
	전국	강원도	원주시	전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2007	3,262,925	116,705	22,327	2,716	93	55	0.96	3.09
2010	3,355,470	118,266	22,759	3,128	116	65	1.05	2.91
2015	3,874,156	133,517	27,338	4,963	181	111	1.06	3.00
2019	4,176,549	146,815	30,729	6,466	234	142	1.03	2.9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7, 2010, 2015, 2019

9) 사업체 수 대신에 고용을 이용하여 입지계수를 산출할 수도 있으나 개별 사업체 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지역-산업 내 사업체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고용이 결측으로 처리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를 지닌다.

7. 서비스 산업

산업의 급속한 변화 및 신산업의 지속적 등장으로 인해 다수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사업체의 지역 간 이전(relocation)은 지역산업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별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강원도의 산업적 지역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에 사업체 수 기준 강원도의 전국 대비 비중은 서비스업 가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7.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8.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통신업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6.5%)은 높으나 종사자 수 비중(2.0%)은 낮아 이 산업에 속한 강원도 소재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전국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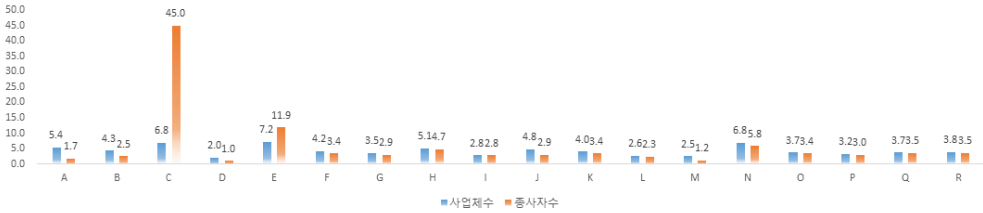


<그림 III-9a>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1994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994

주 :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2000년 역시 서비스업 가운데 강원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사업체 수 기준 7.2%, 종사자 수 기준 11.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 행정(사업체 수 기준 6.8%, 종사자 수 기준 5.8%), 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체 수 기준 5.1%, 종사자 수 기준 4.7%) 등을 포함한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강원도 내 산업별 종사자 수에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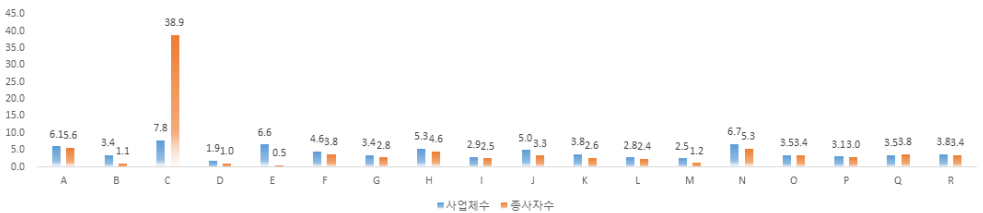


<그림 III-9b>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00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0

주 :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2005년에는 서비스 산업 가운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사업체 수 기준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이 6.7%로 가장 높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5.3%로 가장 높다. 하지만, 강원도 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각 32,841개와 77,873명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 대부분에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용규모에서 평균적으로 영세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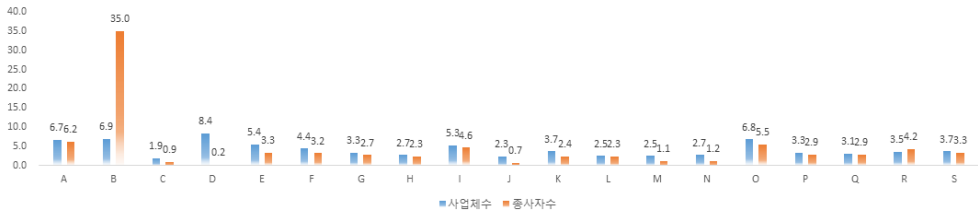


<그림 III-9c>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05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5

주 :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2010년의 경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강원도 내 가장 큰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도내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28.3%와 종사자 수 기준 20.3%를 차지한다. 한편,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은 서비스 산업 가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사업체 수 기준 8.4%로 가장 높으나 126개 사업체로 그 수는 크지 않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그 다음으로 높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6.8%,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5.5%에 해당한다. 절대적 규모가 가장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의 해당 수치는 각각 5.3%와 4.6%로 상대적 규모 역시 비교적 크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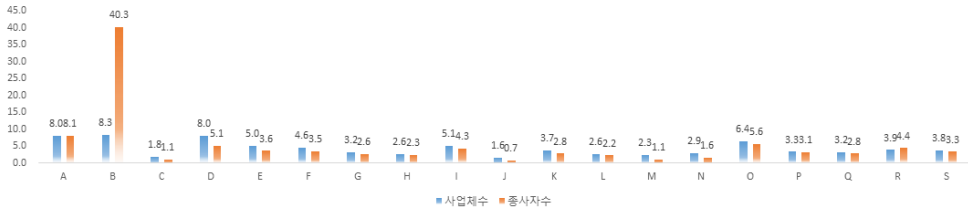


<그림 III-9d>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0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157개와 506명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하면, 강원도 내 서비스 산업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전국 대비 상대적 규모에서 가장 크고 도내 산업들 간 절대적 규모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경향은 2005년 이래로 지속되어 2015년에도 여전히 나타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도내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27.1%와 종사자 수 기준 18.8%로 2010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9e>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5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2019년 기준 강원도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93.6%, 종사자 수 기준 91.6%에 해당하고, 산업별로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에서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4%),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각각 5.1%) 등의 순으로 높다.



<그림 III-9f>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강원도 비중(%) : 2019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2.5%, 종사자 수 기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강원도 내 제조업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 혹은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의 입지 여건 가운데 하나는 해당 지역 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발달 여부일 것이다.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패턴과 기술발달로 인해 제조업체가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보다는 전문기업에 외주(outsourcing)를 통해 생산하는 수직적 분화(vertical disintegration)가 보편화되고 있다.¹⁰⁾ 또한, 신산업의 경우 이의 최적 입지는 제품수명주기이론에 의해 주장되는 바와 같이 시제품(prototype)의 생산이나 이의 성능 검사 등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산업이 집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로부터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특정 지역 내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발달에 있어 어느 산업이 먼저 집적을 이뤄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공동으로 성장함은 명확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4개의 소분류 산업들로 구분되며, 2019년 기준 강원도 내 산업별 비중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721)이 사업체 수 기준 22.4%와 종사자 수 기준 33.8%로 가장 높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 법무관련 서비스업(KSIC 711) 14.0%,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KSIC 729) 12.5%, 사진 촬영 및 처리업(KSIC 733) 12.0%, 광고업(KSIC 713) 8.6%,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KSIC 701) 7.8%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10) Holmes(1999)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군집한 지역에서 기업들 간 외부-효과, 수직적 분화가 보다 활발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수직적 분화의 정도를 지역-산업의 산출물에서 지역 내 다른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생산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Silicon Valley와 Boston Route 128을 비교한 Saxenian(1996)의 결과는 생산활동에 있어 외주가 보다 활발한 Silicon Valley 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달성함을 제시한다.



<그림 III-10> 강원도 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분류 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 : 2019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

8. 인구이동

사업체의 이전(relocation)과 더불어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노동은 자본과 함께 핵심적인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우려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 내 인구의 감소는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의 감소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주시설 혹은 정주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전자는 해당 지역의 기업경쟁환경을 악화시키고 후자는 해당 지역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기업과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낮춰 지역공공재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불가능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또한, 김우영·홍성호(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별 대졸자 비중은 절대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이를테면, 1985년 11.8%에서 2010년 33.8%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가 1%만큼 증가하는 경우 대졸자 비중은 1985년에 5.6%p만큼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8.2%p만큼 증가하였음) 지역(시·군·구) 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테면, 초기에 지역 내 대졸자 비중이 높을수록 일정 기간에 걸친 지역 내 대졸자 비중의 증가폭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지역발전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인적자본의 지역 간 이동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적 관점에서 분석의 대상이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1.1. 대졸자이동경로¹¹⁾

지역의 인구규모 자체가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로서 혹은 젊은 세대에 대한 역할모델(role model)이나 지역의 인적자본으로서 지역 내 대졸자의 비중이 중요하다. 한국고

11) 대졸자이동경로조사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이며,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을 포함한다.

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가운데 52.2%가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하였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으로는 12.9%, 경기도 소재 대학으로는 9.0%, 인천 소재 대학으로는 2.7%가 진학하여 수도권으로의 대학진학에 따른 이동의 비중이 강원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4명 가운데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지역으로는 대전(4.9%), 경북(4.7%), 충북(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표 Ⅲ-18a> 대학진학에 따른 지역 간 이동

소재지	강원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에 따른 이동의 대학 소재지별 비중	강원도 소재 대학 입학자의 대학진학에 따른 이동의 졸업고교 소재지별 비중
서울	12.9	22.5
부산	1.6	1.1
대구	1.3	0.2
인천	2.7	4.5
광주	1.1	0.4
대전	4.9	1.2
울산	0.8	0.2
세종	0.4	0.1
경기	9.0	25.5
강원	52.2	36.6
충북	4.0	2.2
충남	2.1	1.3
전북	1.5	0.1
전남	0.4	0.3
경북	4.7	2.4
경남	0.0	1.1
제주	0.4	0.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강원도 소재 대학 입학자 가운데 졸업고교의 소재지별 분포에서는 강원도가 가장 높은 36.6%에 해당한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비중은 25.5%,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중은 22.5%로, 4.5%에 해당하는 인천을 포함하며, 강원도

소재 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에 의해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들 중에는 경북이 2.4%, 충북이 2.2%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절대적 기준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역 내 대학으로 진학한 비중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강원도의 경우 52.2%에 해당하며 이는 부산(68.1%), 광주와 전북(62.1%), 제주(59.9%), 대전(57.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강원도의 비중은 36.6%에 해당하며, 이는 제주(83.4%), 경남(71.5%), 전남(59.0%), 부산(58.1%), 대구와 전북(57.1%), 울산(55.3%), 광주(53.7%)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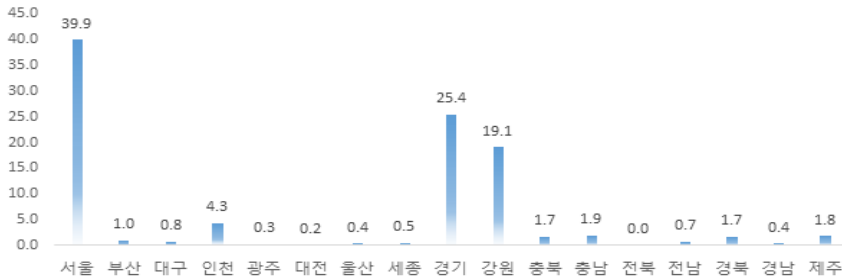
<표 III-18b> 지역 내 대학진학의 비중

소재지	고교 졸업자 가운데 지역 내 대학 진학의 비중	대학 입학자 가운데 지역 내 고교 출신의 비중
서울	44.1	41.4
부산	68.1	58.1
대구	45.5	57.1
인천	19.1	34.2
광주	62.1	53.7
대전	57.3	38.4
울산	29.2	55.3
세종	2.0	0.3
경기	40.7	49.8
강원	52.2	36.6
충북	51.7	35.3
충남	40.4	21.3
전북	62.1	57.1
전남	38.6	59.0
경북	47.8	36.0
경남	44.9	71.5
제주	59.9	83.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강원도 이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을 통한 현 직장 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 내 취업이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수도권 내 직장에 취업하는 비중은 서울 39.9%, 경기 25.4%, 인천 4.3%로 거의 70%에 육박하여,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대학 졸업 후에는 다시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내 대학의 정원 가운데 63.4%가 강원도 이외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의해 채워지지만, 이들 가운데 19.1%만 강원도 내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나머지 80.9%는 강원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 인적자원의 지역 내 유치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교육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된 외지 출신의 인적자원이 지역 내에 남지 않고 외부로 다시 유출하는 이유는 이들의 부모나 가족이 있는 생활기반이 여전히 강원도 이외의 출신지역이거나 강원도의 일자리 여건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마땅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가 어려울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노동시장의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에서의 상대적인 열악성, 지역 내 일자리와 대학에 개설된 전공 간 불일치, 젊은 세대를 위해 정주환경의 미흡, 고학력 부부(power couple)의 공동거주(co-location) 문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²⁾

12) Costa and Kahn(2000)은 미국에서 고학력 부부가 대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의 적어도 일부는 이들의 공동거주 문제(colocation problem)에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고학력 노동자의 일자리는 보다 전문화 되어 대도시에서 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고학력인 경우에는 공동거주를 위해 대도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유인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III-11> 강원도 이외 지역 고등학교와 강원도 내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의 직장 소재지별 비중(%)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대졸자이동경로조사에서 강원도 내 대졸 학력의 취업자 가운데 출신대학의 소재지별 분포는 강원도가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8.7%, 경기 7.2%, 경북 5.4%, 대구 3.2%, 충북 3.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현 직장이 강원도 내에 있고 산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비중은 강원도가 69.0%로 가장 높으며, 경기 17.6%, 충남 6.0%, 경북 5.0%, 서울 2.4%의 분포를 나타낸다. 현 직장이 강원도 내에 있고 직업이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해당하는 경우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비중은 역시 강원도가 64.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10.8%, 경기 4.9%, 경북 4.1%, 인천 3.5%, 충남 3.1%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현 직장이 강원도 내에 있고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비중은 강원도가 제일 높으나 49.6%로 절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12.9%, 경기 10.0%, 부산 4.9%, 인천 4.4%, 충북 3.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대졸자의 지역 간 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역노동시장 간 임금의 차이에 해당할 것이다. 강원도가 대졸의 청년층에게 있어 어느 정도 매력적인 노동시장에 해당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받는 평균임금을 지역 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출신대학 소재지별 임금격차는 출신대학의 인적자원양성과 관련한 생산성에서의 차이에 기

인할 수도 있으나 설문조사에 포함된 대졸 취업자 개인의 속성-성별, 연령, 경력, 전공평점, 계열, 직업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업의 속성-규모, 산업-에서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이후에 출신대학 소재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과 직장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의 추정을 통해 출신대학 소재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다.

$$y_j = \alpha + X_j\beta + F_j\gamma + \sum_k^5 \zeta_k area_{jk} + \epsilon_j$$

여기서, y_j 는 대졸자 j 의 월평균 임금(log 만 원/월)을 나타내고, X_j 는 대졸 취업자 개인의 속성, F_j 는 대졸 취업자가 근무하는 현 직장의 속성, $area_{jk}$ 는 대졸 취업자의 출신대학 소재지 k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그리고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졸 청년층의 임금은 성, 연령, 졸업 평점, 전공계열, 학교 유형, 경력, 직장의 고용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통상의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개인의 속성이 통제된 이후에도 출신대학의 소재지 간 평균임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현 직장 소재지-즉, 지역노동시장-의 평균임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강원도는 서울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규직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속변수를 임금 대신에 1~5점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직장 만족도로 정의하고 회귀식을 추정하는 경우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강원도 내 직장 근무자는 서울 내 직장 근무자와 직장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¹³⁾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대졸 청년층에 있어 강원도가 지역노동시장으로서 경쟁력이 부족하지는 않음을 함축한다. 다만,

13) 종속변수가 임금인 경우 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에 의해 추정하고, 직장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해 추정한다.

대졸의 전문인력 배출에 있어 강원도 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지역 산업과 지역대학 간 전공에서의 불일치로 지역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⁴⁾

<표 III-19a> 임금과 직장 만족도의 출신대학 소재지와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차이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직장 만족도 (정규직, 1-5점 척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남성	0.115** (12.83)	0.086** (11.91)	0.263** (4.41)
연령	0.004* (2.54)	0.006** (5.20)	0.023** (2.75)
졸업 평점	0.036** (4.14)	0.031** (4.36)	0.456** (7.13)
전공계열(기준 : 인문)			
사회	0.051** (3.74)	0.033** (2.86)	-0.097 (-1.02)
교육	0.274** (11.14)	0.209** (9.50)	0.151 (0.84)
공학	0.082** (5.49)	0.057** (4.54)	0.006 (0.06)
자연	0.023 (1.32)	0.051** (3.81)	0.001 (0.01)
의약	0.205** (8.31)	0.180** (8.92)	0.265 (1.59)
예체능	0.043* (2.23)	0.007 (0.46)	-0.159 (-1.18)
학교유형(기준 : 2~3년제)			
4년제	0.070** (7.29)	0.085** (10.54)	0.025 (0.36)
교육대	0.178** (7.57)	0.113** (5.17)	0.494* (2.10)

14) 비록 회귀분석이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노동생산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직장 만족도 (정규직, 1-5점 척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졸업 이후 경과년수	0.043** (4.30)	0.029** (3.73)	-0.114+ (-1.81)
직장 경력년수	0.023** (7.92)	0.024** (11.73)	0.018 (1.21)
현 직장 기업체 종사자 수 규모(기준 : 1~4명)			
5~9명	-0.007 (-0.30)	0.026 (1.46)	-0.066 (-0.40)
10~29명	0.033 (1.56)	0.084** (4.86)	-0.220 (-1.44)
30~49명	0.042+ (1.80)	0.093** (4.59)	-0.247 (-1.50)
50~99명	0.042+ (1.95)	0.094** (4.92)	-0.299+ (-1.87)
100~299명	0.087** (4.18)	0.145** (8.04)	-0.309* (-1.97)
300~499명	0.128** (5.68)	0.198** (10.04)	-0.225 (-1.28)
500~999명	0.141** (6.03)	0.232** (11.15)	-0.193 (-1.06)
1000명 이상	0.190** (9.27)	0.292** (16.08)	0.117 (0.76)
출신대학 소재지(기준 : 서울)			
부산	-0.083** (-4.35)	-0.082** (-5.00)	-0.075 (-0.59)
대구	-0.091** (-4.15)	-0.058** (-3.20)	0.057 (0.32)
인천	-0.036* (-2.09)	-0.027+ (-1.73)	-0.135 (-0.91)
광주	-0.051* (-2.20)	-0.055** (-2.66)	-0.106 (-0.51)
대전	-0.103** (-5.71)	-0.086** (-5.36)	-0.026 (-0.20)
울산	-0.149** (-4.81)	-0.121** (-4.07)	-0.358 (-1.49)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직장 만족도 (정규직, 1-5점 척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세종	-0.025 (-0.52)	-0.019 (-0.59)	-0.056 (-0.20)
경기	-0.066** (-5.58)	-0.068** (-6.88)	-0.102 (-1.21)
강원	-0.078** (-3.78)	-0.096** (-5.10)	-0.363* (-2.34)
충북	-0.074** (-3.75)	-0.069** (-4.47)	-0.062 (-0.43)
충남	-0.106** (-7.09)	-0.092** (-7.60)	-0.181+ (-1.68)
전북	-0.027 (-1.09)	-0.063** (-3.74)	-0.100 (-0.68)
전남	-0.095** (-3.38)	-0.116** (-5.74)	-0.012 (-0.06)
경북	-0.127** (-7.10)	-0.119** (-7.59)	-0.134 (-0.96)
경남	-0.085** (-3.99)	-0.089** (-5.22)	-0.091 (-0.61)
제주	0.010 (0.16)	-0.077 (-1.57)	0.009 (0.03)
사업체 소재지(기준 : 서울)			
부산	-0.046* (-2.07)	-0.033+ (-1.84)	0.150 (0.96)
대구	0.021 (0.71)	-0.028 (-1.30)	0.143 (0.77)
인천	0.007 (0.41)	-0.020 (-1.16)	-0.179 (-1.27)
광주	-0.089** (-3.10)	-0.081** (-3.25)	0.159 (0.66)
대전	-0.030 (-1.31)	-0.065** (-3.04)	0.232 (1.46)
울산	0.079* (2.50)	0.084** (2.86)	0.557** (2.58)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직장 만족도 (정규직, 1-5점 척도)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세종	0.023 (0.73)	0.026 (1.05)	-0.145 (-0.61)
경기	0.021* (1.98)	-0.006 (-0.67)	0.122 (1.63)
강원	-0.041 (-1.55)	-0.037+ (-1.76)	0.160 (0.83)
충북	0.075** (3.29)	0.009 (0.49)	0.530** (2.89)
충남	0.081** (3.97)	0.028+ (1.87)	0.131 (0.95)
전북	-0.048+ (-1.71)	-0.084** (-3.94)	0.259 (1.21)
전남	0.052* (2.12)	0.026 (1.36)	0.318 (1.56)
경북	0.081** (4.00)	0.055** (2.98)	0.150 (0.92)
경남	0.012 (0.59)	-0.017 (-0.97)	-0.047 (-0.32)
제주	-0.109* (-2.33)	-0.099** (-2.83)	0.360 (1.23)
정규직	0.147** (12.49)		
상수항	4.866** (53.61)	4.856** (75.47)	
고정효과			
산업	19	19	19
직업	10	10	10
관측수	10,158	7,890	7,895
Adjusted R-squared/Pseudo R-squared	0.3314	0.4201	0.033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출신대학 소재지를 강원도로 한정된 후에 현 근무지 소재지 간 임금 격차를 통해 지역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경우, 대졸 청년층에 대한 지역노동시장으로서 강원도는 서울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부산, 울산, 충북, 전남, 경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대구, 인천, 충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표 III-19b>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지역노동시장 간 차이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남성	0.081* (2.51)
연령	-0.001 (-0.30)
졸업 평점	0.088* (2.13)
전공계열(기준 : 인문)	
사회	-0.124+ (-1.92)
교육	0.125 (1.14)
공학	-0.068 (-1.00)
자연	-0.068 (-0.99)
의약	-0.016 (-0.17)
예체능	-0.184* (-2.10)
학교유형(기준 : 2~3년제)	
4년제	0.116** (2.73)
교육대	0.168* (2.12)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졸업 이후 경과년수	-0.017 (-0.41)
직장 경력년수	0.049** (5.22)
현 직장 기업체 종사자 수 규모(기준 : 1~4명)	
5~9명	-0.080 (-1.02)
10~29명	0.008 (0.13)
30~49명	0.171 (1.44)
50~99명	0.007 (0.09)
100~299명	0.037 (0.57)
300~499명	0.120 (1.56)
500~999명	0.223** (3.04)
1000명 이상	0.232** (3.20)
사업체 소재지(기준 : 서울)	
부산	0.219* (2.05)
대구	-0.180+ (-1.94)
인천	-0.237** (-2.89)
광주	-0.003 (-0.02)
대전	0.045 (0.67)
울산	0.530** (4.09)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세종	-
경기	0.040 (0.93)
강원	-0.036 (-0.91)
충북	0.153* (2.40)
충남	-0.329** (-2.67)
전북	-
전남	0.374** (4.12)
경북	0.122* (2.16)
경남	-0.067 (-1.21)
제주	0.134 (0.67)
상수항	4.605** (19.09)
고정효과	
산업	19
직업	10
관측수	331
Adjusted R-squared	0.4867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현 근무지를 강원도로 한정된 후에 출신대학 소재지 간 임금 격차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경우, 강원도 내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¹⁵⁾ 즉, 강원도 내 직장에 한정하는 경우 출신대학의 소재지 간 평균 임금-즉, 노동생산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수요측 요인에 의해 대졸자의 이동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19c> 강원도 소재 사업체 근무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출신대학 소재지 간 차이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남성	0.070 (1.55)
연령	-0.002 (-0.46)
졸업 평점	0.109* (2.25)
전공계열(기준 : 인문)	
사회	-0.081 (-1.05)
교육	0.098 (0.85)
공학	-0.006 (-0.07)
자연	-0.086 (-0.93)
의약	0.112 (0.84)
예체능	-0.206 (-1.00)
학교유형(기준 : 2~3년제)	
4년제	0.066 (1.51)
교육대	0.108 (1.14)
졸업 이후 경과년수	0.014 (0.22)

15) 한편, 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직장 경력년수	0.049** (7.64)
현 직장 기업체 종사자 수 규모(기준 : 1~4명)	
5~9명	-0.022 (-0.13)
10~29명	0.052 (0.59)
30~49명	0.029 (0.20)
50~99명	0.067 (0.68)
100~299명	0.095 (0.85)
300~499명	0.184+ (1.66)
500~999명	0.248+ (1.79)
1000명 이상	0.213* (2.22)
출신대학 소재지(기준 : 서울)	
부산	0.064 (0.47)
대구	0.226* (2.17)
인천	0.105 (1.16)
광주	0.128 (1.32)
대전	-0.001 (-0.01)
울산	-0.133* (-2.09)
세종	-

구분	임금(log 만 원/월, 정규직에 한정)
경기	-0.027 (-0.44)
강원	-0.056 (-0.87)
충북	0.062 (0.82)
충남	0.110 (0.98)
전북	0.047 (0.51)
전남	0.057 (0.46)
경북	0.020 (0.26)
경남	0.154 (0.89)
제주	0.134 (0.82)
상수항	4.494** (17.53)
고정효과	
산업	19
직업	10
관측수	211
Adjusted R-squared	0.484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1.2. 인구이동과 특성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2015년 2% 표본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의 수는 141,891명으로 5년전의 거주지별 비중은 경기도가 3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 29.5%, 인천 7.1%, 충북 4.7%, 경북 3.5%, 부산 3.3%, 충남 3.1%, 대전 2.7%, 대구 2.6%, 경남 2.4%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¹⁶⁾ 부산에서 강원도로의 이주에서 여성의 비중이 57.3%로 가장 높고, 세종에서 강원도로의 이주에서 여성의 비중이 22.5%로 가장 낮다. 서울에서 강원도로의 이주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8.5%로 광역시도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남(7.3%), 광주(6.9%), 경기(6.3%), 충북(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5년전 거주지별로 이주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중은 세종으로부터의 이주에서 100.0%로 가장 높으며, 전남으로부터의 이주에서 71.3%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이러한 연령대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는 경우의 비중은 대전으로부터의 이주에서 76.3%에 해당하여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16) 분석은 2015년 기준 거주지와 2010년 기준 거주지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 시점 사이의 이주행태는 고려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2010년에 서울에 거주하다가 2012년에 충북으로 이주했다가 2014년부터 강원도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강원도로 이주하기 직전의 거주지가 충북임에도 5년전 거주지인 서울에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료에는 1년전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1년전 거주지로 분석하는 경우 이주에 대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 5년전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III-20>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인 경우의 5년전 거주지별 특성

5년전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서울	41,899	29.5	45.1	8.5	82.9	75.1
부산	4,620	3.3	57.3	5.5	85.6	69.7
대구	3,659	2.6	55.4	2.5	80.4	75.0
인천	10,080	7.1	43.0	3.3	87.3	63.9
광주	1,025	0.7	50.1	6.9	78.5	75.4
대전	3,884	2.7	40.9	1.5	83.7	76.3
울산	1,238	0.9	26.9	0.0	84.2	55.3
세종	102	0.1	22.5	0.0	100.0	22.5
경기	51,366	36.2	47.8	6.3	81.5	70.8
충북	6,626	4.7	51.4	6.2	82.4	66.9
충남	4,332	3.1	45.0	4.3	81.2	69.5
전북	1,948	1.4	52.9	3.7	81.0	69.8
전남	2,061	1.5	40.7	7.3	71.3	74.0
경북	4,932	3.5	44.5	5.1	84.8	60.5
경남	3,446	2.4	49.4	1.7	82.8	76.0
제주	673	0.5	33.1	0.0	90.8	48.3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2010년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2015년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경우, 이들의 도내 시·군별 비중은 원주시에서 2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춘천시(17.2%), 강릉시(10.4%), 동해시(6.7%), 삼척시(5.2%), 홍천군(4.6%) 등으로 높아 도내 시·군들 간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시지역의 비중이 69.9%에 해당하여, 도내 지역들 간 인구의 불균형이 외지로부터의 이주에 의해서도 가중됨을 볼 수 있다. 시·군별로 강원도 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양구군에서 56.9%로 가장 높은 반면에 고성군에서 39.2%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횡성군에서 18.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평창군 11.9%, 정선군 10.0%, 영월군 9.6% 등의 순으로 높고 양구군의 경우 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주하는 사람의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강릉시에서 88.6%로 가장 높고 이와 더불어 홍천군(88.0%), 태백시(86.9%), 삼척시(86.1%)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화천군에서 75.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동해시(76.2%)와 영월군(76.6%) 역시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한다. 19세 이상 64세 이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고성군에서 85.0%로 가장 높고, 강릉시(80.9%), 화천군(80.4%), 춘천시(79.8%), 양구군(76.8%) 등에서 역시 높은 반면에 홍천군에서 50.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표 III-21a>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춘천시	24,461	17.2	49.5	6.2	79.3	79.8
원주시	34,400	24.2	48.2	4.5	85.8	70.7
강릉시	14,747	10.4	40.2	7.5	88.6	80.9
동해시	9,462	6.7	46.2	3.0	76.2	68.0
태백시	3,534	2.5	49.5	6.2	86.9	69.8
속초시	5,194	3.7	53.2	3.7	78.2	62.7
삼척시	7,395	5.2	40.6	5.5	86.1	71.7
홍천군	6,494	4.6	40.9	7.8	88.0	50.7
횡성군	3,722	2.6	40.8	18.4	77.0	56.6
영월군	3,875	2.7	46.0	9.6	76.6	55.4
평창군	3,860	2.7	52.0	11.9	79.5	61.4
정선군	2,916	2.1	48.5	10.0	80.1	54.9
철원군	4,791	3.4	44.5	5.5	80.9	69.5
화천군	3,871	2.7	50.6	5.5	75.3	80.4
양구군	3,229	2.3	56.9	1.5	78.6	76.8
인제군	4,307	3.0	47.6	5.4	81.2	69.4
고성군	3,067	2.2	39.2	6.9	80.7	85.0
양양군	2,566	1.8	46.6	7.6	83.8	61.4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강원도 내 시·군별 비중과 특성을 살펴 보면, 비중은 원주시(24.4%), 춘천시(19.4%), 강릉시(11.2%)에서 절반 이상(55.0%)을 차지하며 이외의 지역들은 2.0%에서 4.9%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여성의 비중은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양구군에서 55.0%로 가장 높은 반면에 강릉시에서 37.9%로 가장 낮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횡성군(19.4%), 평창군(13.5%), 영월군(1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양구군(1.9%), 동해시(4.0%), 속초시(4.8%), 원주시(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비록 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주한 65세 이상의 경우에서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각각 40.4%와 4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Chen and Rosenthal(2008)에 의하면, 보다 나은 기업경영환경을 갖춘 도시들은 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지닌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반면에 소비자-친화적인 환경(consumer amenities)을 갖춘 도시들은 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화함을 제시한다. 특히, 은퇴자들이 고학력인 경우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후와 자연환경에서 노년을 즐길 수 있는 휴양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며 이는 미국의 남부해안(sun-belt)의 도시들이 번성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함을 제시한다. 한편,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Im and Hong(2019)은 고학력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기업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고령자의 경우 경제력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즉,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주에서 이러한 이주 요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강릉시에서 90.9%로 가장 높은 반면에 영월군에서 75.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강릉시로의 이주에서 82.8%로 가장 높은 반면에 홍천군으로의 이주에서 50.8%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III-21b>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자가 수도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춘천시	20,032	19.4	48.2	6.7	79.0	80.6
원주시	25,241	24.4	46.7	5.1	84.3	72.2
강릉시	11,533	11.2	37.9	7.1	90.9	82.8
동해시	4,477	4.3	48.0	4.0	77.7	67.6
태백시	2,402	2.3	51.0	7.1	84.6	73.4
속초시	4,054	3.9	54.2	4.8	80.2	60.4
삼척시	4,769	4.6	47.6	5.8	85.1	77.9
홍천군	5,064	4.9	42.3	8.9	86.2	50.8
횡성군	2,900	2.8	40.6	19.4	76.5	51.4
영월군	2,502	2.4	47.4	12.7	75.3	57.5
평창군	3,027	2.9	47.7	13.5	79.8	58.0
정선군	2,032	2.0	48.7	8.4	84.9	62.7
철원군	3,353	3.2	42.8	7.2	81.8	65.6
화천군	2,125	2.1	52.5	7.6	77.6	73.4
양구군	2,611	2.5	55.0	1.9	77.6	78.3
인제군	2,614	2.5	49.5	7.7	78.7	65.9
고성군	2,420	2.3	38.2	6.6	83.9	81.8
양양군	2,189	2.1	44.8	6.3	83.6	55.3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충청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강원도 내 거주 시·군별 비중은 원주에서 34.5%로 다른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춘천시 9.9%, 강릉시 7.8%, 동해시 7.0%, 화천군 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¹⁷⁾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평창군에서 78.6%로 가장 높고, 이외에도 양구군(66.0%), 양양군(54.0%), 화천군(53.1%) 등에서 높으나 삼척시의 경우 10.5%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횡성군에서 2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정선군(15.5%), 삼척시(10.5%), 인제군(9.3%), 영월군(7.9%), 화천군(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5.0%를 밑도는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태백시, 홍천군, 양양군에서 100.0%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정선군에서 50.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고성군과 양양군으로의 이주에서 100.0%로 가장 높은 반면에 영월군으로의 이주에서 45.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17)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주에서 원주시의 비중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주에 대한 해당 비중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화천군 모두 상대적으로 충청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이 이주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충청권에서 원주시로의 이주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이 3.5%로 높지 않고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이 86.4%로 비교적 높아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원주시로의 이주가 상대적으로 보다 빈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정적일 수 없고 하나의 가능성이 불과하며, 이들의 직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이전(relocation)행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개연성 있는 원인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I-21c>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자가 충청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춘천시	1,484	9.9	45.8	3.7	90.6	74.6
원주시	5,151	34.5	49.9	3.5	86.4	58.8
강릉시	1,171	7.8	39.0	2.6	75.4	80.9
동해시	1,051	7.0	42.8	0.0	87.6	76.1
태백시	305	2.0	45.9	0.0	100.0	75.1
속초시	290	1.9	43.4	0.0	87.9	50.2
삼척시	372	2.5	10.5	10.5	89.5	76.3
홍천군	513	3.4	46.8	0.0	100.0	78.9
횡성군	606	4.1	44.4	20.0	71.5	81.5
영월군	697	4.7	50.4	7.9	77.8	45.8
평창군	295	2.0	78.6	0.0	93.2	81.8
정선군	444	3.0	39.0	15.5	50.5	65.6
철원군	639	4.3	37.6	3.4	76.4	85.5
화천군	876	5.9	53.1	5.9	67.8	89.4
양구군	350	2.3	66.0	0.0	70.0	81.6
인제군	335	2.2	42.4	9.3	90.7	71.1
고성군	315	2.1	41.9	0.0	52.4	100.0
양양군	50	0.3	54.0	0.0	100.0	100.0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2010년과 2015년 두 시점 사이 영남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강원도 내 2015년 기준 거주 시·군별 비중은 동해시(17.5%), 원주시(14.7%), 춘천시(14.1%), 삼척시(10.8%), 강릉시(9.3%), 인제군(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5.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주자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양군(74.2%), 양구군(67.4%), 원주시(6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삼척시(30.1%), 철원군(31.8%), 횡성군(32.4%) 등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양양군에서 31.3%로 다른 지

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정선군(18.5%)과 강릉시(11.1%)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홍천군(7.8%)과 평창군(3.5%)을 제외한 나머지 군지역들에서는 65세 이상의 경우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횡성군, 양구군, 고성군에서 100.0%를 나타내며, 양양군의 경우에는 68.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고성군에서 100.0%로 가장 높고 화천군(91.3%), 양양군(89.6%), 속초시(86.8%) 등에서도 비교적 높으나 정선군과 홍천군의 경우 각각 23.1%와 34.2%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1d>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자가 영남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춘천시	2,518	14.1	58.9	2.6	76.4	76.7
원주시	2,639	14.7	63.2	2.7	94.5	76.0
강릉시	1,671	9.3	54.2	11.1	86.8	63.9
동해시	3,128	17.5	48.7	0.9	72.8	68.5
태백시	731	4.1	43.5	4.5	89.1	52.4
속초시	414	2.3	48.8	0.0	87.7	86.8
삼척시	1,931	10.8	30.1	4.5	85.8	62.9
홍천군	722	4.0	34.3	7.8	92.2	34.2
횡성군	216	1.2	32.4	0.0	100.0	60.2
영월군	614	3.4	36.2	0.0	80.3	63.3
평창군	453	2.5	57.8	3.5	79.7	66.8
정선군	287	1.6	49.1	18.5	81.5	23.1
철원군	393	2.2	31.8	0.0	88.8	79.7
화천군	613	3.4	44.7	0.0	82.9	91.3
양구군	218	1.2	67.4	0.0	100.0	51.8
인제군	935	5.2	50.9	0.0	81.2	68.8
고성군	230	1.3	52.6	0.0	100.0	100.0
양양군	182	1.0	74.2	31.3	68.7	89.6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호남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강원도 내 거주 시·군별 비중은 원주시가 20.9%로 여타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나, 동해시 10.4%, 속초시 8.7%, 춘천시 8.5%, 철원군 8.1%, 인제군 8.0%, 강릉시와 삼척시 각각 6.4% 등으로 비교적 높은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이 강원도와 인접하는 반면에 호남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내 개별 시·군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이주를 통한 거주지 결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주자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철원군(81.8%)과 평창군(8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홍천군(12.8%), 고성군(25.5%), 인제군(29.0%) 등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고성군(52.0%)과 평창군(41.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이외에 강릉시(20.9%), 태백시(15.6%), 동해시(13.6%), 춘천시(12.4%)를 제외하면 매우 낮거나 0.0%의 수준을 나타낸다.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삼척시,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에서 100.0%를 나타내며, 평창군(20.0%), 속초시(44.7%), 고성군(48.0%) 등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강릉시, 태백시,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에서 100.0%에 해당하며, 영월군과 정선군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1e>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5년전 거주자가 호남권인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유입자수	비중	유입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춘천시	427	8.5	69.1	12.4	74.2	83.0
원주시	1,052	20.9	39.3	0.0	93.2	85.7
강릉시	320	6.4	60.0	20.9	60.6	100.0
동해시	522	10.4	35.2	13.6	59.2	65.0
태백시	96	1.9	66.7	15.6	84.4	100.0
속초시	436	8.7	54.4	0.0	44.7	73.8
삼척시	323	6.4	34.7	0.0	100.0	33.7
홍천군	195	3.9	12.8	0.0	87.2	28.8
횡성군	0					
영월군	62	1.2	40.3	0.0	80.6	0.0
평창군	85	1.7	81.2	41.2	20.0	100.0
정선군	153	3.0	71.9	0.0	100.0	0.0
철원군	406	8.1	81.8	0.0	73.4	67.8
화천군	257	5.1	40.9	0.0	64.2	85.5
양구군	50	1.0	48.0	0.0	100.0	100.0
인제군	403	8.0	29.0	0.0	88.6	87.4
고성군	102	2.0	25.5	52.0	48.0	100.0
양양군	145	2.9	35.9	0.0	100.0	100.0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2010년에 강원도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에는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137,465명으로 파악되며, 2015년 기준 거주지별 비중은 경기가 3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 23.0%, 인천 5.9%, 충북 5.8%, 충남 5.7%, 대전 4.7%, 부산 3.9%, 경북 3.8%, 경남 3.6%, 대구 3.0%, 전남 2.2% 등의 비중을 나타낸다. 지역별 이주에서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에 해당하며 그 비중은 54.3%이다. 한편, 여성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경우는 광주로의 이주로 31.9%에 해당한다. 이주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은 강원도에서 제주로의 이주에서 가장 높은 15.3%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경우는 인천으로의 이주이며 6.1%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강원도로의 유입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서울에서

강원도로의 이주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이 8.5%인 반면에 강원도에서 서울로의 이주 가운데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이 4.9%에 해당하여 유출에서 3.6%p 높다. 이주자 가운데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중은 광주로의 이주에서 93.4%로 가장 높으며, 세종으로의 이주에서 66.6%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 연령대의 이주자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는 경우의 비중은 서울로의 이주에서 88.6%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제주로의 이주에서 48.4%로 가장 낮다. 세종의 경우, 강원도와의 이주에서 유입과 유출 간 대학 이상 학력의 비중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세종에서 강원도로의 이주에서는 22.5%에 불과하나 강원도에서 세종으로의 이주에서는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III-22a> 2010년 기준 강원도 거주자 가운데 2015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2015년 거주지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	강원도로부터 유출자수	비중	유출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서울	31,565	23.0	54.3	4.9	82.9	88.6
부산	5,405	3.9	40.4	5.2	79.3	76.9
대구	4,130	3.0	40.7	1.5	74.6	76.2
인천	8,158	5.9	41.8	6.1	77.3	71.8
광주	1,113	0.8	31.9	0.0	93.4	78.8
대전	6,443	4.7	45.4	2.1	76.9	86.0
울산	2,120	1.5	44.3	0.0	89.6	57.8
세종	2,105	1.5	43.0	2.2	66.6	82.2
경기	44,206	32.2	46.0	5.6	78.9	71.8
충북	7,981	5.8	47.0	5.6	86.3	52.2
충남	7,856	5.7	48.4	2.7	83.5	62.3
전북	2,292	1.7	47.5	5.1	73.0	55.9
전남	2,989	2.2	38.7	1.6	83.2	76.8
경북	5,195	3.8	39.7	4.5	87.8	65.9
경남	4,954	3.6	36.9	2.4	82.5	67.1
제주	953	0.7	47.8	15.3	66.9	48.4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이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그 비중은 수도권 61.1%, 충청권 17.7%, 영남권 15.9%, 호남권 4.7% 등을 나타낸다. 이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수도권이 48.7%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인 경우의 비중 또한 수도권에서 5.4%로 가장 높다.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권역 간 유사하며, 이들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의 비중은 수도권으로 이주에서 78.3%로 가장 높고 충청권으로의 이주에서 66.1%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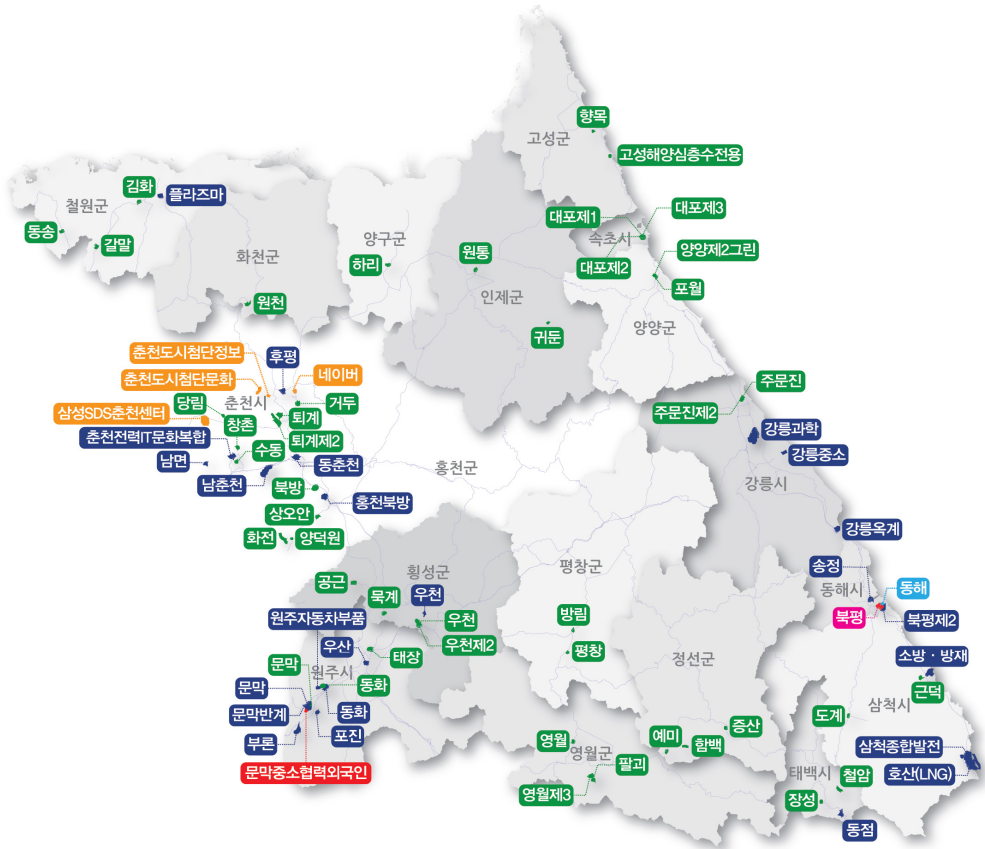
<표 III-22b> 2010년 기준 강원도 거주자 가운데 2015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2015년 거주지(권역)별 특성

2015년 기준 거주지(권역)	강원도로부터 유출자수	비중	유출자 가운데 비중			
			여성	65세 이상	19~64세	19~64세 가운데 대학 이상의 학력
수도권	83,929	61.1	48.7	5.4	80.2	78.3
충청권	24,385	17.7	46.6	3.5	81.2	66.1
영남권	21,804	15.9	39.9	3.2	82.2	69.7
호남권	6,394	4.7	40.7	2.6	81.3	70.5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9. 산업클러스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하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에는 25,973천㎡의 면적에 걸쳐 7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14,078천㎡의 분양 대상 산업시설구역 가운데 88.7%(전국의 해당 수치는 94.5%)가 분양되었다. 입주업체의 수는 1,788개에 해당하고 이들을 통한 고용이 30,181명, 생산이 8,609,888백만 원, 수출이 1,505,964천 달러에 달한다. 입주업체 가운데 1,488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이 83.2%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의 91.2%에 비해 8.0%p가량 낮은 수준이다. 강원도의 전국 대비 비중은 산업단지 지정면적 기준 1.8%, 입주업체 기준 1.7%에 해당하나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중은 1.4%로 일자리창출에 있어 강원도 내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생산액과 수출액 각각의 비중 역시 0.9%와 0.5%로 낮아 생산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2> 강원도 내 산업단지 지리적 분포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국가산업단지는 동해시에 북평국가산업단지 1개소(4,030천㎡)가 조성되어 있으며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들을 통한 고용은 817명, 생산액은 95,948백만 원, 수출액은 2,033천 달러에 해당한다.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평지구와 동해지구로 구분된다. 동해지구는 자유무역지구에 해당하고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북평지구에 비해 고용규모는 21.9%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17.2%만큼 많아 생산성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23a>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국가산업단지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달러)
							남	여	계		
동해시	북평국가	완료	4,030	1,866	59	41	690	127	817	95,948	2,033
동해시	북평	완료	3,782	1,624	43	29	605	65	670	44,166	-
동해시	동해 (자유무역)	완료	248	242	16	12	85	62	147	51,782	2,033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 전국산업단지 현황

일반산업단지는 24개소가 14,440천㎡에 걸쳐 조성되어 있고, 458개 업체가 입주하여 9,11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액과 수출액은 각각 3,594,343백만 원과 870,250천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주시에 7개소, 춘천시에 5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이들의 지정면적 기준 비중은 각각 16.6%와 19.7%로 강원도 전체 일반산업단지에서 36.3%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 두 지역의 비중은 입주업체 수를 기준으로 48.0%, 고용을 기준으로 77.2%, 생산액을 기준으로 85.8%에 해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일자리창출과 생산성에서 원주시와 춘천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주시 소재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의한 수출액은 582,406천 달러로 강원도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에 의한 수출액의 83.9%를 차지한다.

<표 III-23b>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일반산업단지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 달러)
							남	여	계		
강릉시	강릉과학	완료	1,487	1,487	179	151	953	362	1,315	331,772	67,217
강릉시	강릉중소	완료	164	164	38	25	360	11	371	77,080	19,270
원주시	원주자동차부품	완료	93	93	6	6	133	45	178	29,558	633
춘천시	남면	완료	65	65	1	1	X	X	X	X	X
춘천시	전력IT문화복합	완료	354	354	13	13	251	57	308	77,757	913
홍천군	홍천북방	완료	525	525	2	2	X	X	X	X	X
횡성군	우천	완료	756	755	14	7	109	36	145	11,420	-
삼척시	삼척종합발전	조성중	2,583	2,583	1	-	-	-	-	-	-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 달러)
							남	여	계		
삼척시	소방·방재 (구 방재)	조성중	782	782	-	-	-	-	-	-	-
춘천시	남춘천	조성중	1,453	1,454	12	-	-	-	-	-	-
동해시	북평제2	조성중	599	599	-	-	-	-	-	-	-
강릉시	강릉옥계	조성중	484	482	1	1	X	X	X	X	-
동해시	송정	완료	323	323	1	1	X	X	X	X	X
원주시	동화	완료	409	409	23	22	871	333	1,204	522,350	89,171
원주시	부론	조성중	609	609	-	-	-	-	-	-	-
철원군	플라즈마	조성중	316	315	-	-	-	-	-	-	-
태백시	동점 (구 태백스포츠타)	완료	219	219	1	-	-	-	-	-	-
원주시	문막	완료	410	410	31	22	581	335	916	411,599	46,518
원주시	문막반계	완료	423	419	22	20	522	146	668	296,999	5,477
원주시	문막반계	완료	327	324	18	16	430	107	537	235,404	4,644
원주시	문막중소협력외 국인	완료	96	95	4	4	92	39	131	61,595	833
원주시	우산	완료	355	355	25	17	1,026	579	1,605	640,896	440,607
원주시	포진	조성중	96	96	-	-	-	-	-	-	-
춘천시	후평 [재생사업지구]	완료	444	443	69	63	561	336	897	249,055	3,900
삼척시	호산(LNG)	완료	982	980	1	1	X	X	X	-	-
춘천시	동춘천(구 봉명)	완료	538	538	18	10	317	111	428	317,898	20,495

주 : 가동업체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정보는 개별 업체정보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 전국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의 조성은 계획입지를 통해 개별 입지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기업들을 지리적으로 군집시킴으로써 집적의 경제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공공에 의한 연구개발기능과 입주업체 기업지원서비스를 갖춤으로써 클러스터(cluster)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책수단이다.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상당수는 신생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이전(relocation)을 통한 것이고 산업단지의 개발시 입주업체를 특정 산업에 한정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은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부터 강원도로 기업의 이전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¹⁸⁾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352천㎡의 면적에 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34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5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7,449백만 원의 생산과 167천 달러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와 달리, 도시화된 지역의 인근에 조성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업단지가 위치한 시·군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과거에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공해나 소음 혹은 오폐수를 방출하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거주지와 이격되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산업단지가 위치한 시·군이 아닌 인근의 보다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 및 소비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주분리에 따른 통근시간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과 함께 산업단지가 위치한 시·군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이들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산업단지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더불어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고자 하는 국내외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일본은 정주자립권 구상이라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시골 지역을 한계부락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인근 중소도시와 연계하여 지역이 공생하도록 하는 정주자립권 구상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통상, 5만 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도시에는 정주나 생활편의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병원, 양로시설, 고등학교, 주택, 일터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계 상향에 있는 촌락과 인근 중소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간 도로를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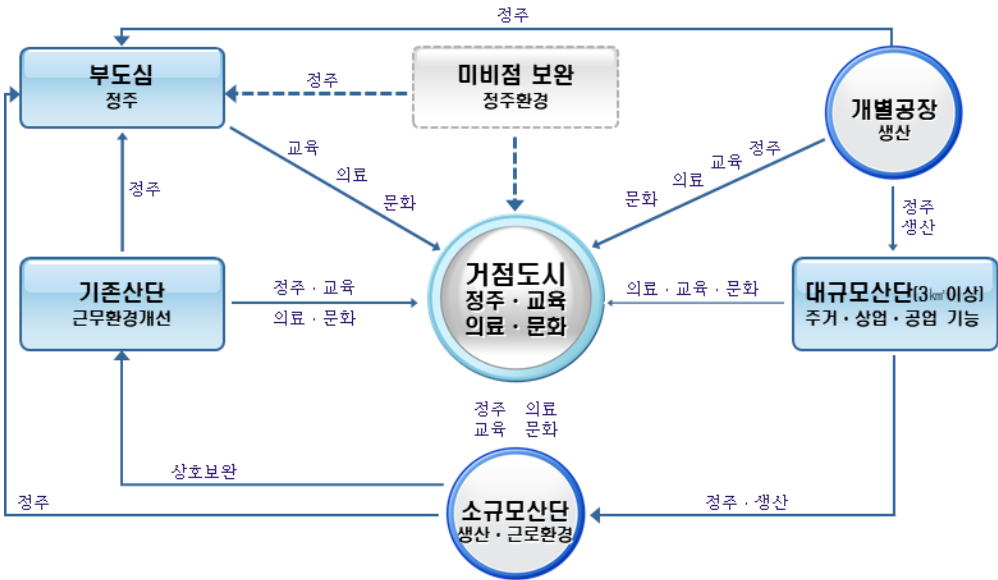
18)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광역시도 간 경계를 넘어 이전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이를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사업체 이전행태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수단의 정비와 통신망의 설치 등을 확대함으로써 촌락의 주민들이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더불어,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대학 등이 소재한 대도시와의 연계나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고도의 정주자립권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주자립권 구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나가노현 남부의 이다시와 주변 14개 마을을 연계한 인구 17만4천 명의 지역자립권 미나미신슈 구상이다. 외지에 본사를 둔 공장을 뜻하는 분공장(branch plant)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지역 내에 본사를 두고 거기서 상품을 개발해 브랜드화하는 자립구조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산 농산물을 다루는 통신판매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다시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족을 데려와 정착하도록 직접 상담에 나섰다. 그 결과 상담 시작(2006년 2월) 이후 2년 동안 112명이 외지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日 ‘1村 1都’ 짝짓기 공리중 촌락들 저출산·도시이주 붓물로 붕괴 직전 1시간 생활권내 중소도시와 공생구역 추진』, 한국일보 2008년 3월 19일).

국내의 관련 정책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지식경제부의 Quality of Work Life 조성사업,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3터(일터, 배움터, 즐길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5가지의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QWL 벨리 조성계획은 이러한 5가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세부사업은 오피스텔,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유소 등과 같은 복지 및 편의시설과 진입로, 고가차도,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R&D, 컨벤션, 창업지원 등의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등을 포함한다.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이라는 정책 과제를 위해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며,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를 위해 「소외지역 문화순회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실시하고(문광부), 단지별로 「산업단지의 날」을 제정하여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포함한다.



<그림 III-13>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구상도

자료 : 충남도청 투자입지과, 상생산업단지 구상도

충남 내 기존 산업단지가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도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빈번하게 이직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주분리가 관찰된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산업단지의 지역경제성장 기여에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혹은 가족의 지역 내 거주비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하여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충남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1세대, 제2세대, 그리고 제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세대는 초기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내륙은 경공업, 임해지역은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단지가 개발된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산업단지 토지이용은 공장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단순한 생산시설의 지리적 집적화에 치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세대는 지역 간 균형이 강조되고 산업단지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화된 시기로서 생산기능 이외에 연구기능을 추가하여 산업클러스터화를 추진한 시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산업단지는 지원시설, 녹지시설, 주거시설을 일부 포함하는 복합단지의 성격을 지니기 시작한다. 제3세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과 근로자 간 상생도모하는 상생산업단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특히, 산업단지를 단순히 생산과 기술 중심의 일터로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생산현장이 곧 정주환경이 될 수 있는 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융합된 복합적인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표 III-23c>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도시첨단 산업단지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 달러)
							남	여	계		
춘천시	춘천도시첨단문화	완료	187	187	31	25	239	141	380	17,449	167
춘천시	춘천도시첨단정보	완료	25	25	1	1	X	X	X	-	-
춘천시	삼성SDS춘천센터	완료	40	40	1	1	X	X	X	-	-
춘천시	네이버도시첨단	완료	100	100	1	1	X	X	X	-	-

주 : 가동업체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정보는 개별 업체정보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 전국산업단지 현황

농공단지 45개소(7,124천㎡)가 조성되어, 1,23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를 통해 19,249명의 고용, 4,902,148백만 원의 생산, 633,512천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3개 농공단지가 노후산업단지에 해당하여 입주업체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농공단지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4차년도 산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229억 원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에 투입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이 거점-연계형의 광역클러스터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대상 농공단지를 98곳으로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산학연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의 영세성, 불리한 입지여건, 부실한 공단운영, 낮은 가동률 등으로 인해 업체당 생산은 국가 및 일반단지의 절반, 1인당 생산액은 국가단지의 50% 수준, 업체당 수출은 국가단지의 20% 수준을 보이며,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가 전체 421개 가운데 51.5%인 2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내일신문, 2011년 7월 15일자 기사).

이상의 분석결과는 강원도 내 산업단지가 일자리창출과 생산성에 있어 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잠재적인 요인으로는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에 걸친 노후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직주분리, 연구기능이나 정주여건이 결여된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계획입지정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을 유치하고 제조업의 지리적 균집을 통해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I-23d> 강원도 산업단지 현황 : 농공단지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 달러)
							남	여	계		
강릉시	주문진	완료	143	143	39	39	330	416	746	142,205	370
삼척시	근덕	완료	130	130	25	25	169	43	212	35,305	798
삼척시	도계	완료	71	68	10	10	41	9	50	2,478	-
속초시	대포제2	완료	106	106	30	28	175	189	364	76,280	966
원주시	동화	완료	332	332	53	40	745	468	1,213	139,895	61,556
원주시	문막	완료	501	501	47	35	1,775	428	2,203	1,043,664	33,512
원주시	태장	완료	298	297	156	115	881	492	1,373	411,958	38,026
춘천시	거두	완료	297	297	27	25	630	526	1,156	335,232	152,446
춘천시	당림	완료	53	53	1	1	X	X	X	X	-
춘천시	창촌	완료	114	114	25	24	168	44	212	86,058	1,273
춘천시	퇴계	완료	341	341	167	162	1,448	856	2,304	443,187	20,996
춘천시	수동	완료	77	77	6	6	1,236	563	1,799	320,328	15,273
태백시	장성	완료	137	137	17	13	74	62	136	20,788	12
태백시	철암	완료	127	127	29	27	149	95	244	79,956	1,948
고성군	고성해양심층수전용	완료	104	103	25	20	74	49	123	21,596	15,296
고성군	항목	완료	34	33	11	11	61	53	114	34,912	-
양구군	하리	완료	143	142	27	22	101	34	135	-	-
양양군	포월	완료	117	115	39	39	183	175	358	4,008	624
영월군	영월	완료	114	114	17	14	93	33	126	67,360	506
영월군	영월제3	완료	259	259	6	3	43	10	53	6,596	-
영월군	팔괴	완료	143	143	31	26	165	94	259	44,138	2,877
인제군	원통	완료	144	144	36	35	127	79	206	62,123	401
정선군	예미	완료	107	107	5	4	62	45	107	1,600	-
정선군	증산	완료	118	118	22	22	103	42	145	6,000	-
정선군	함백	완료	100	100	5	5	48	19	67	3,200	-
철원군	갈말	완료	129	129	6	4	93	23	116	118,217	1,535
철원군	김화	완료	148	148	33	26	197	142	339	100,648	5,459
평창군	방림	완료	62	62	8	8	61	52	113	38,527	290
평창군	평창	완료	106	106	35	35	183	40	223	50,315	-
홍천군	상오안	완료	127	127	24	20	154	157	311	44,536	7,613
홍천군	양덕원	완료	42	42	2	2	X	X	X	X	X
홍천군	화전	완료	269	269	19	12	146	133	279	62,860	895
화천군	원천	완료	112	112	26	25	106	67	173	19,200	1,000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현황(명)			누계생산 (백만 원)	누계수출 (천 달러)
							남	여	계		
횡성군	공근	완료	329	329	30	29	462	187	649	164,828	6,808
횡성군	목계	완료	176	175	24	12	327	442	769	284,312	35,652
횡성군	우천	완료	173	173	24	19	225	102	327	54,684	1,184
횡성군	우천제2	완료	329	329	26	20	376	228	604	154,240	8,652
속초시	대포제3	완료	162	162	47	40	255	238	493	104,246	2,148
철원군	동송	조성중	164	159	12	8	192	145	337	110,966	-
양양군	양양제2그린	완료	103	103	11	5	18	25	43	2,412	-
강릉시	주문진제2	완료	158	158	19	10	70	59	129	36,123	-
속초시	대포제1	조성중	177	177	35	31	191	185	376	50,012	4,663
인제군	귀둔	조성중	54	54	-	-	-	-	-	-	-
홍천군	북방	미개발	101	101	-	-	-	-	-	-	-
춘천시	퇴계제2	미개발	91	91	-	-	-	-	-	-	-

주 : 가동업체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정보는 개별 업체정보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 전국산업단지 현황

10. 직주분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2015년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광역 시도 수준에서 거주지와 근무지가 상이한 직주분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주분리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정주환경 간 불균형이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주분리현상은 해당 근로자에게 보다 장거리의 통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야기하며,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서 생활 및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주분리의 정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는 정책을 설계 및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광역 시도별로 해당 지역 내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은 서울 24.9%, 부산 5.4%, 대구 4.4%, 인천 14.8%, 광주 3.7%, 대전 6.8%, 울산 8.1%, 세종 39.4%, 경기 14.1%, 강원 3.6%, 충북 8.0%, 충남 10.8%, 전북 2.2%, 전남 7.7%, 경북 10.5%, 경남 8.3%, 제주 0.1%에 해당한다.

근무지가 강원도이나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인 근로자의 수는 25,451명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19.6%이고, 연령대별로는 34세 이하 21.4%, 35세 이상 49세 이하 41.5%, 50세 이상 37.1%의 분포를 보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는 67.9%에 이른다. 혼인상태에서 기혼의 비중은 73.0%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중은 13.3%, 그리고 직업이 관리자 혹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의 비중은 30.5%에 해당한다. 이들의 거주지별 분포는 경기가 4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32.7%), 충북(14.7%), 인천(4.5%), 경북(3.2%)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7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가 수도권 인접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지리적 이점(advantage)에 의한 기업경영환경에서 경쟁적임에도 근로자의 정주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해 이들로 하여금 지역 내 거주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이는 수도권 기업의 강원도 내 이전

(relocation)이 강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정주환경 가운데 주택, 교육, 교통, 문화여가 등 어느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근무하는 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강원도 내 근로자 가운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은 거주지별로 충북과 충남이 각각 23.8%와 23.3%로 가장 높으며, 더불어 인천(21.8%), 대전(19.5%), 경기(15.2%), 경북(11.4%), 서울(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근로자의 직업을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한정하는 경우에 직주분리의 비중은 서울(47.3%)과 대전(40.6%)에서 뚜렷하게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III-24a> 근무지가 강원도이고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인 근로자의 거주지별 비중과 특성

거주지	근로자 수	비중								
		지역	여성	34세 이하	35~49세	50세 이상	대학 이상	기혼	제조업	관리자/전문가
전체	25,451		19.6	21.4	41.5	37.1	67.9	73.0	13.3	30.5
서울	8,313	32.7	23.9	21.7	37.4	40.9	87.0	75.5	5.1	47.3
부산	53	0.2	100.0	0.0	100.0	0.0	0.0	0.0	0.0	0.0
대구	232	0.9	19.0	49.1	30.6	20.3	79.7	50.9	0.0	20.3
인천	1,136	4.5	17.3	21.5	48.1	30.5	52.2	81.0	21.8	24.1
대전	303	1.2	15.8	0.0	59.4	40.6	100.0	84.2	19.5	40.6
울산	108	0.4	0.0	0.0	100.0	0.0	100.0	100.0	0.0	0.0
세종	51	0.2	0.0	0.0	100.0	0.0	100.0	100.0	0.0	0.0
경기	10,374	40.8	17.3	22.1	41.8	36.1	61.3	70.7	15.2	27.0
충북	3,729	14.7	17.3	17.6	48.2	34.2	52.2	73.3	23.8	14.0
충남	335	1.3	21.8	34.3	42.7	23.0	80.6	46.3	23.3	0.0
경북	817	3.2	18.1	25.9	21.2	52.9	30.4	77.4	11.4	5.5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한편, 근무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이고 거주지가 강원도인 근로자의 수는 18,133명에 해당하고, 이들의 근무지별 비중은 경기 52.1%, 서울 27.1%, 경북 9.4%, 충북 8.2%,

인천 1.1%, 충남 1.0%, 대전 0.6%, 세종 0.3%, 광주 0.2%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직주분리 근로자들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25.5%에 해당하고, 근무지별로 대전 52.8%, 서울 30.5%, 경기 26.0%, 충북 2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는 34세 이하의 비중이 24.2%, 35세 이상 49세 이하의 비중이 50.7%, 50세 이상의 비중이 25.1%에 해당하며, 근무지별로 세종의 경우 모두가 34세 이하이고 광주는 35세 이하 49세 이하의 비중이 100.0%이며 경북의 경우 50세 이상의 비중에서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의 비중은 67.7%이며, 근무지별로는 대전, 세종, 충남에서 100.0%를 보인다. 기혼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68.3%에 해당하고, 근무지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높은 74.7%에 해당한다. 제조업의 비중은 13.8%이며, 근무지별로는 세종에서 100.0%, 충남에서 88.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직업의 구분에서 관리자이거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중은 27.6%에 해당하고, 서울(34.8%)과 충남(34.2%)에서 해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I-24b> 근무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이고 거주지가 강원도인 근로자의 근무지별 비중과 특성

근무지	근로자 수	비중								
		지역	여성	34세 이하	35~49세	50세 이상	대학 이상	기혼	제조업	관리자/전문가
전체	18,133		25.5	24.2	50.7	25.1	67.7	68.3	13.8	27.6
서울	4,911	27.1	30.5	28.8	56.6	14.6	80.9	60.8	9.1	34.8
인천	200	1.1	12.0	47.5	40.5	12.0	79.0	33.0	33.0	12.0
광주	41	0.2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전	108	0.6	52.8	47.2	52.8	0.0	100.0	52.8	0.0	0.0
세종	48	0.3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경기	9,450	52.1	26.0	22.7	48.7	28.7	64.1	74.7	13.6	27.8
충북	1,492	8.2	23.7	17.9	47.6	34.5	58.3	64.6	18.8	20.6
충남	187	1.0	11.8	65.8	34.2	0.0	100.0	34.2	88.2	34.2
경북	1,696	9.4	12.8	14.4	50.8	34.7	51.5	70.0	12.3	16.5

주 :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업체의 이전행태를 중심으로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에 분석을 주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들과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들을 고찰하며 이의 강원도 지역산업 및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들의 강원도에 대한 함의가 현실에서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1994~2019년 원자료와 이들 가운데 일부(2000~2019년)에 한해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분석한다.

실증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사업체 이전과 관련하여, 2000~2019년 기간에 강원도로 유입한 사업체는 646개로 강원도로부터 유출한 사업체(414개)에 비해 많으며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이전을 통한 강원도 내 고용의 증가규모는 2016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업체의 이전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원도로 유입하거나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경우 모두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과의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충북, 충남, 경북 등의 비중도 작지 않다.

이전에 있어 강원도 이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경우 간 이전하는 사업체들의 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도로 유입하는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이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에 비해 평균 고용, 업력, 본사 혹은 본점의

비중, 제조업 비중에서 현저하게 큰 반면에 여성 대표자 비중, 회사법인 비중, 단독 사업체 비중은 오히려 작다. 강원도로부터 유출하는 사업체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본사 및 본점의 비중,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의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비수도권으로의 유출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전하는 사업체의 특성은 이전의 방향(즉, 유입과 유출) 간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08년을 전후로 변화를 보이며, 도지사 재임기간에 따라 2010년을 전후로 구분한 경우에도 사업체의 이전행태에서 변화를 보인다. 아쉽게도, 2008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아 이러한 분석결과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정에서의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업체 이전을 통한 강원도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분공장 여부를 2011~2019년의 기간에 연도별 그리고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내 공장이나 지사 혹은 영업소가 소재하고 본사 혹은 본점은 강원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분공장 가운데 본사 혹은 본점의 소재지별 비중에서 수도권은 연도별로 87.2%~91.4%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강원도로 사업체의 이전이 많으나 이들에 의한 강원도 내 지역경제 기여는 제한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의 이러한 비중은 79.3%~85.8%로 여전히 높다.

지역 간 사업체의 이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 집적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집적의 정도에 따라 집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적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집적의 경제의 유형-즉,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혹은 동태적 관점에서 MAR효과와 Jacobs효과-이 달라지게 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편중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201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아 제조업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2019년 역시 0.269로 도내 읍면동 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절대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에서 강원도는 1994년에 0.0098의 값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상위 8위에 하나 이후에 타 지역의 경우 지수의 값이 크게 상승하나 강원도의 경우 2019년에 0.0103으로 상승폭이 작아 절대적 기준에서도 최근에는 제조업의 분포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기준에서 제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는 1994년에 0.604로 제주 다음으로 낮으며, 이후로도 2015년(0.528)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0.574로 상승한다. 제조업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내 비중에서 너무 과소한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역 내 제조업이 단순 가공이나 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경제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은 쉽게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기업유치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업체 이전을 통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강원도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제조업 비중이 시점에 따라 다르고 해당 사업체의 원래 소재지-즉,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입지에서 강원도의 지역성(고유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lmes(1998)에서와 같이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입지조건이 유사하도록 강원도와 경기, 충북, 경북이 접하는 시·군들만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신생 사업체 수를 비교한다. 강원도는 경북에 비해 입지로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회사법인, 본사 혹은 본점, 제조업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회사법인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며, 제조업에 한정하는 경우 모든 인근 지역-즉, 경기, 충북, 경북-에 비해 강원도가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한 강원도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속도로 서울양양선 강일~춘천~동홍천 구간의 개통에 따른 춘천시와 홍천군 내 제조업의 변화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 구간은 2009년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강원도-특히, 춘천시와 홍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들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신생 제조업체수 혹은 기존 제조업체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읍면동별 집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권 팽창 및 접근성 개선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 사업서비스업의 발전과 같은 기업 지원서비스의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강원도 내 제조업체가 단순 가공이나 조립이 아닌 첨단-산업의 집적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내 시·군별로 시기별 사업체의 분포와 이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특성을 분석한다. 18개 시·군별 사업체의 속성별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의 시계열적 변화에서도 일부 상이함이 나타난다. 시지역과 군지역 간 상이하고 경기, 충북, 경북과의 인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전행태에서 유입과 유출 역시 시·군 간 차이를 나타낸다.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가운데 52.2%가 강원도 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수도권으로의 대학진학에 따른 이동의 비중이 강원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4명 가운데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소재 대학 입학자 가운데 졸업고교의 소재지별 분포에서 비록 강원도가 가장 높으나 36.6%에 그친다. 강원도 내 대학의 정원 가운데 63.4%가 강원도 이외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의해 채워지지만, 이들 가운데 19.1%만 강원도 내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나머지 80.9%는 강원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외부 인적자원의 지역 내 유치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대졸 청년층에 있어 강원도가 지역노동시장으로서 경쟁력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대졸의 전문인력 배출에 있어 강원도 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기준 강원도 내 거주자 가운데 2010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의 수는 141,891명으로 2010년의 거주지별 비중은 경기가 3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 29.5%, 인천 7.1% 등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72.8%에 이른다. 외지에서 강원도로 이주 가운데 24.2%는 원주시에 거주하며, 충청권으로부터의 이주로 한정하

는 경우 원주시 거주 비중은 34.5%로 더욱 상승한다. 반면, 영남권으로부터의 이주시 동해시 거주 비중이 17.5%로 가장 높고, 호남권으로부터 이주에서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20.9%로 가장 높다. 반면에, 2010년 강원도에 거주하다가 2015년에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137,465명으로 이 가운데 32.2%가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며 강원도로의 유입과 마찬가지로 유출 역시 수도권 비중이 61.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강원도 내 산업단지는 일자리창출과 생산성에 있어 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에 걸친 노후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직주분리, 연구기능이나 정주여건이 결여된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및 같은 계획입지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 광역시도별로 해당 지역 내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비중에서 강원도는 3.6%로 제주(0.1%)와 전북(2.2%)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직주분리현상은 해당 근로자에게 보다 장거리의 통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야기하며,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 내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서 생활 및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직주분리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정주환경 간 불균형이 크음을 의미하며, 이는 외지 기업의 강원도 내 유치에도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근무지가 강원도이나 거주지가 강원도 이외 지역인 근로자의 수는 25,451명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19.6%이고, 연령대별로는 34세 이하 21.4%, 35세 이상 49세 이하 41.5%, 50세 이상 37.1%의 분포를 보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는 67.9%에 이른다. 혼인상태에서 기혼의 비중은 73.0%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중은 13.3%, 그리고 직업이 관리자 혹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의

비중은 30.5%에 해당한다. 이들의 거주지별 분포는 경기가 4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32.7%), 충북(14.7%), 인천(4.5%), 경북(3.2%)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7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1.1. 정책적 함의

강원도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과거에는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기업의 이전과 인구의 이주가 이뤄졌으나 수도권의 과밀은 혼잡비용이 집적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능가하여 이동의 방향이 역전되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기업과 인구의 유입을 단순히 양적으로 극대화하려 하기 보다는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내 토착기업 및 지역민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강원도로 이전해 온 기업의 인력채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들로부터 중간재나 원자재의 구입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전기업의 강원도 내 정착과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대도시로서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신생 첨단기술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있어 최적의 입지일 것이다. 한편, 강원도는 이러한 수도권에 인접하고 지대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품이나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한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대상지(place to relocate)로 적지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른 입지경로는 강원도의 지역산업과 경제에 있어 기회이자 잠재적 위기로 볼 수 있다. 단순히 분공장의 집적지로 전락하는 경우 지역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해당 산업-고유의 경기침체시 강원도 지역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환경과 더불어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함께 개선될 때,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영향이 극대화된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로부터 강원도 일부 지역들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젊은 세대, 고학력 전문인력 등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강원도와 수도권 간 고속도로나 고속열차의 개통은 두 지역 간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하고 강원도 내 기업

들의 수도권 고객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수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원도 내 직장에 근무하지만 정주여건이 보다 우수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주분리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야기하여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 혹은 거주자의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로 시계열적 변화와 같은 개괄적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특정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 및 이에 기초한 세밀한 정책의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업체의 이전(relocation)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결과에 근거하여, 집적의 경제를 야기하는 원천들 간 영향력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강원도의 지역성과 연관 지은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후속과제로서 인구 혹은 근로자의 지역 간 이주(migra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입지로서의 강원도의 경쟁력과 함께 거주지로서의 매력도를 고찰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인구감소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강원도 역시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지역 내 인구규모는 정주관련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지역노동시장에서 기업들에 의한 노동수요와 함께 노동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나 근로자의 지역 간 이주에 대한 변화가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인구의 이주를 통한 변화와 함께 세대별 이주를 결정하는 요인과 이러한 요인들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에 대한 고유의 변천과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관련 보고서·논문 및 발표자료

- 김우영·홍성호(2015). “지역별 인적자본 불평등의 심화와 그 원인에 관한 탐색”,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 연구」
- 변용환·류종현·전태영(2011).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지역사회학 13(1) : 149-184
- 조철주(2015).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산업부문별 차이와 지역적 분화 : 지역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5): 123-146
- 지식경제부(2012).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개편 가이드라인」
- 원광희(2016).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시문제 51: 10-13
- 이민원(2001). “지역경제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광주지역”, 국토연구 통권233호: 39-47
- 홍성호(2014). “여성기업가와 집적의 경제 : 가사와 자녀양육부담에 의한 지리적 불일치”, 아시아여성연구 53(1): 7-31
- 홍성호(2018). “여성기업가와 여성고용: 대구시 사례”, 지역개발연구 50(1): 143-160
- 홍성호·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홍성호·임준홍(2014). “분공장과 지역경제: 고용, 연구개발활동,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정책 1(2): 131-150
- 홍성호·임준홍(2015).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입지변화 분석”, 공간과사회 25(1): 212-234
- Aitken, B., Hanson, G.H., and Harrison, A.E.(1997). “Spillovers,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behavio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3: 103-132

- Barrios, S., Görg, H., and Strobl, E.(2003). “Explaining firms’ export behavior: R&D spillovers and the destination marke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4): 475-496
- Bernard, A., and Jensen, J.B.(2004). “Why do some firms exxpor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561-569
- Black, S.(1999). “Do better schools matter? Parental valu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2): 577-599
- Calino, G., and Kerr, W.(2015). “Agglomeration and innovation,” Chapter 6 in *Handbook of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Volume 5*, edited by Cilles Duranton, J. Vernon Henderson, and William C. Strange. Amsterdam: Elsevier
- Carlton, D.W.(1983). “The location and employment choices of new firm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440-449
- Chen, Y., and Rosenthal, S.(2008). “Local amenities and life-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3): 519-537
- Costa, D., and Kahn, M.(2000). “Power couples: Changes in the locational choice of the college educated, 1940-199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4): 1287-1315
- Duranton, G., and Puga, D.(2001). “Nursery cities: Urban diversity, process innovation,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454-1477
- Duranton, G, and Diego, P.(2005). “From sectoral to functional specializ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7: 343-70.
- Ellison, G., and Glaeser, E.(1999). “The geographic concentration of industry: Does natural advantage explain agglomer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311-316

- Greenaway, D., and Kneller, R.(2008). “Exporting, productivity and agglomer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2: 919-939
- Greenaway, D., Suousa, N., and Wakelin, K.(2004). “Do domestic firms learn to export from multinationals?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 1027-1043
- Harris, R., and Robinson, C.(2004). “Industri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its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plants, 1990-1998,”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 528-543
- Helsley, R., and Strange, W.(1990). “Matching and agglomeration economies in a system of citi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 189-212
- Henderson, V., Kuncoro, A., and Turner, M.(1995). “Industrial development in c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5): 1067-1090
- Hersch, J., and Stratton, L.(1994). “Housework, wage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ime for employed spous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120-125
- Holmes, T.(1998). “The effect of state policies on the location of manufacturing: Evidence from state bord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4): 667-705
- Holmes, T.(1999). “Localization of industry and vertical disintegr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2): 314-325
- Hong, S.(2014). “Agglomeration and relocation: Manufacturing plant relocation in Korea,” *Papers in Regional Science* 93(4): 803-818
- Hong, S.(2015). “Agglomeration economies in Korean export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20(2): 122-139
- Im, J., and Hong, S.(2019). “Local amenities and geographic disparity in population and industry distribution in Korea,” *Asia-Pacific Contemporary*

Finance and Development 26: 53-68

- Jacobs, J.(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Khandker, S., Koolwal, G., and Samad, H.(2010). Handbook of impact evaluation: Quantitative methods and practice. The World Bank
- Koenig, P.(2009). “Agglomeration and the export decisions of French firm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6: 186-195
- Krugman, P.(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483-499
- Lee, B. S., Jang, S., and Hong, S.(2010). “Marshall’s scale economies and Jacobs’ externality in Korea: the role of age, size and the legal form of organisation of establishments,” Urban Studies 47(14): 3131-3156
- Lee, B. S., Sosin, K., and Hong, S.(2005). “Sectoral manufacturing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regions,” Urban Studies 42(7): 1201-1219
- Liao, T., and Stevens, G.(1994), “Spouses, homophily, and social networks,” Social Forces 73: 693-707
- Lovely, M., Rosenthal, S., and Sharma, S.(2005). “Information, agglomeration, and headquarters of U.S. exporter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 167-191
- MacKinnon, D., and Phelps, N.(2001). “Regional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 in Wales and north east England,” Geoforum 32: 255-269
- Marshall, A.(1920).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London
- Massey, D.(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New York, Methuen
- Massey, D., and Denton, N.(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281-315

- Morgan, K.(1991).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 electronics: What are the prospects for Britain? ,”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1459-1482
- Munday, M.(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Wales: Lifeline or leash? ” in J. Bryan & C. Jones (eds.), *Wales in the 21st century* 39: 214-223. London: MacMillan
- O’Sullivan, A.(2018). *Urban Economics*. 9th edition,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 Rees, J.(1979). “Technological change and regional shifts in American manufacturing,” *Professional Geographer* 31: 45-54
- Rosenthal, S., and Strange, W.(2001). “The determinants of agglomer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0: 191-229
- Rosenthal, S., and Strange, W.(2003). “Geography, industrial organization, and agglomer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377-393
- Rosenthal, S., and Strange, W.(2004). “Evidence on the nature and sources of agglomeration economies,” in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edited by Vernon Henderson and Jacques-Francois Thisse
- Rosenthal, S., and Strange, W.(2012). “Female entrepreneurship, agglomeration, and a new spatial mismat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3): 764-788
- Saxenian, A.(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xenian, A.(1996). “Inside-out: Regional networks and industrial adapta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2(2): 41-60
- Sonn, J., and Lee, D.(2012).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Review of literatur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advanced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6(3): 243–259

- Turner, T., and Niemeier, D.(1997). “Travel to work and household responsibility: New evidence,” *Transportation* 24: 397–419
- Turok, I.(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 *Regional Studies* 27: 401–417
- Vernon, R.(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190–207
- Vernon, R.(1972). “External Economies,” in *Readings in Urban Economics*, eds. M. Edel and J. Rothenberg. New York: Macmillan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and Locality of Gangwon-do's Industry and Economy: Focusing on Business Relocation Behavior

Sung Hyo Ho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locality of Gangwon-do's industry and economy by focusing on business relocation behavio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s diverse theoretical arguments of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and their empirical results while drawing on implications for the regional industry and economy in Gangwon-do Province. For tes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implications drawn from such arguments to Gangwon-do, this study analyzes the 1994 - 2019 National Business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and their partial data from 2000 to 2019 through the remote access service.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oncerning business relocations, the number of firms that came to Gangwon-do from 2000 to 2019 was 646, which is more than the number of exiting firms during the same period (414 firms). Despite the annual fluctuation, the overall pattern suggests an increase. However, the employment growth through the

business relocation in Gangwon-do has been shown to decline since 2016. If we examine business relocation by region, the relocation from and to Seoul and the capital areas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Gangwon-do's business relocation episodes. With regards to the number of business relocations, i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Chungbuk, Chungnam, and Gyeongbuk is not small.

By examining business relocation cases by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separately, one can observ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relocated firms. Of the companies that came to Gangwon-do, those from the capital areas tend to have more average employment and industry experience, a higher headquarter or head office proportion and a higher manufacturing proportion than those from non-capital regions. However, they tend to have fewer female CEOs, corporations, and single-unit companies than those from non-capital areas. Among the companies that left Gangwon-do, those relocated to the capital areas have a higher headquarter and head office proportion, more factories, branches, and higher manufacturing proportions than those moving to non-capital regions. Concerning other features, no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between the companies relocated to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he features of relocating companies vary by the direction of relocations (inflows and outflows). Moreover,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before and after 2008, when there were substantial changes in regulations in the capital areas. At the same time, one can find meaningful changes in business relocation patterns around the 2010 election of Governor of Gangwon-do. Unfortunately, due to the short time frame covered in this analysis, between 2008 and 2010, it is not possible to ascertain whether these results to the national-level policy or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y changes in Gangwon-do Province.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business relocations on the regional economy of Gangwon-d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mpanies have branch factories in the region between 2011 and 2019 by each year and the location of headquarters and head off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branch factories that have facilities, branches, or business offices located in Gangwon-do Province while headquarters or head offices outside the Gangwon-do Province, 87.2% to 91.4% of them have their headquarters and head offic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s. This implies that although there are many businesses relocated to Gangwon-do from the capital areas, their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economy could be limited. If we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 instance, the percentage of firms with headquarters and head offices remaining in the capital areas is high, from 79.3% to 85.8%.

The business relocations across regions affect the level of industrial agglomera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industrial concentration, relocations not only affect the economy of agglomeration but also changes the types of economic agglomeration based on how industrial compositions change—that is, localized economies and urbanized economies, or the MAR and Jacobs effects in the dynamic perspectives. With the index of dissimilarity that measures the uneven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Gangwon-do had a low score of 0.201 in 1994, which is right below Jeju Island. This means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not clustered over a certain region in Gangwon-do Province. As the index has been consistently low (0.269 in 2019) for Ganwon-do, we can say th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evenly spread out across the region. With the Herfindal-Hershman Index that measures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bsolute terms, Gangwon-do scored a 0.0098 in 1994 and ranked the top 8 among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However, since then, other regions' score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le Gangwon-do has sustained its level (0.0103 in 2019). Thus, in absolute terms, the distribu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Gangwon-do is not skewed. With the location quotient that measures the spatial concent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 relative term, Gangwon-do had a low score of 0.604 in 1994, which is right below Jeju Island. The index continued to decline to 2015 (0.528) while bouncing back to 0.574 in 2019.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and industry, a low level of manufacturing industry would limi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lthough there could be a huge difference between manufacturers for simple processing or assembly and high-tech manufacturers, we can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the region's economic foundation. By carefully designing regional policies to attract businesses, Gangwon-do's foundation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can be transformed through business relocations. Because the share of manufacturing businesses of companies that come to Gangwon-do varies over time and by the original locations—capital areas or non-capital areas, we need to consider these factors in designing those policies.

To identify Gangwon-do's locality (uniqueness) in the industry location, this study relies on the method of Holmes (1998) to focus o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similar locational conditions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Gangwon-do and compare the number of new businesses by each district. Gangwon-do has competitiveness in the location of the industry over Gyeongbuk,

and the competitiveness is based on the proportion of corporations, headquarters and branches, and manufacturing. However, when considering both corporation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Gangwon-do's competitiveness is lower than Gyeonggi-do's. With a narrow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Gangwon-do's competitiveness is lower than the neighboring provinces; Gyeonggi, Chungbuk, and Gyeongbuk.

For examining how the expansion of the capital areas affects Gangwon-do's industrial eco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opening of the Gang-Il-Chuncheon-East Hongcheon section of the Seoul-Yangyang Expressway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cheon and Hongcheon areas by utiliz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is highway section was opened in 2009. We can expec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 manufacturing companies or the existing manufacturing companies' employment because the highway will reduce the logistics costs by enhancing the capital area accessibility of the manufacturing companies in Gangwon-do, especially in Chuncheon and Hongcheon areas. In the analyses based on district-level data and company-level panel data, positive effects are confirmed. However, to sustain the advantages of capital area expansion and accessibility, there needs to be the concurring growth of the business service industry or company supporting services in Gangwon-do. This way, Gangwon-do could establish agglomeration economies with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instead of those of simple processing or assembly.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and relocation patterns of businesses by districts and periods, this study also analyzes regional features of Gangwon-do.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features across 18 cities and districts varies considerably,

and we can observe some temporal variations too. The variations are prominent between cities and districts, while the adjacency with the neighboring provinces, Gyeonggi, Chungbuk, and Gyeongbuk, also contributes to the variations. In the business relocation patterns, the inflows and outflows are also different across cities and districts.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

Historical Development and Locality of Gangwon-do's
Industry and Economy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발행인 :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석중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전화 : (033) 250-2980

홈페이지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산업과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지역성

Historical Development and Locality of Gangwon-do's Industry and Economy

홍성호

Sung Hyo Hong

약력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미국 Syracuse 대학교 경제학 박사